The Chungnam Review

열린 충남

제5권 3호
(통권17호)

CDI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HAPPY NEW MILLENNIUM!

"새 천년 새 미래
충남발전연구원이 열어 밝히겠습니다."

새로운 재기
경쟁력있는 연구원으로
새로운 미래
희망있는 충남으로

충남발전연구원이 다시 뛰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contents

서해안시대 해양충남의 미래 ····· 1
김기현(金基鉉) 충남대학교 해양학과 교수

新지방문화 창조를 위한 충남도정의 정책방향 ····· 14
최병학(崔秉鶴) 충남발전연구원 자치행정팀장

충남 제조업의 구조변화와 전망 ····· 38
이종상(李鍾相) 충남발전연구원 산업경제팀장

역사문화도시 「옛 모습 가꾸기」의 건축기획적 접근 ····· 54
이왕기(李王基) 목원대학교 건축도시공학부 교수

石間朱(철화 분청사기 철화 안료)에 대한 고찰 ····· 66
이재황(李在晃) 계룡산 도예촌장 · 한남대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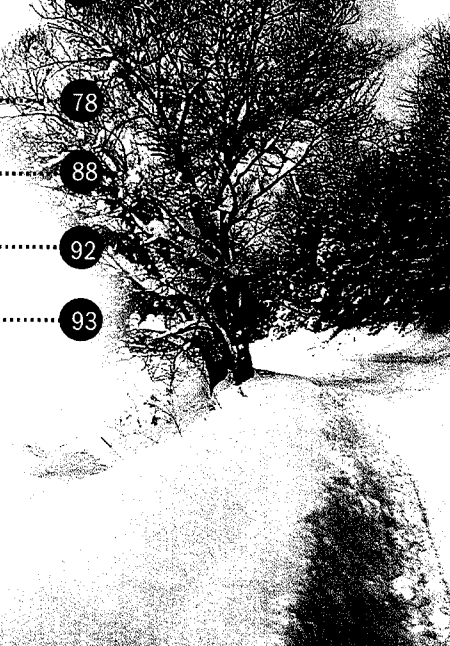
지역축제를 반성한다 ····· 72
한양명(韓陽明) 안동대 국학부 교수

지방자치정보 ····· 78

충청남도 폐기물 매립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읽고… ····· 88

충남논단(가칭) 논문투고요령 ····· 92

INDEX ····· 93



The Chungnam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열린사회, 懷疑에서 信賴로"

황 용 주(黃鏞周)
충남발전연구원장

새 천 년이 열렸다. 희망과 축복의 새 세기가 밝은 것이다. 사이버 시대로 발전하면서 이제 세계는 하나의 권역으로 모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사람의 생각을 제도로 바꾸려고 했던 시대와 달리, 사람들이 보다 자유로운 행동과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사람의 정신을 자유롭게 했다는 평가 속에 컴퓨터는 인간생활 깊숙이 파고들며 사이버 공간(가상 공간)에서의 시민활동을 가능케 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을 통해 문화, 경제, 정치 등 사회 전반적인 이슈에 동참할 수 있으며 개인 대 개인, 국가 대 국가간의 실질적인 교역도 간단한 전산 조작만으로 가능해졌다.

사적이고 점유의 개념이 아닌 공적이고 확산의 개념으로 의식의 전환을 꾀하면서 소유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다. 새해 첫 날 발간된 어느 신문의 헤드라인처럼 정말 모든 게 불확실하고 모든 게 가능한 시대가 열린 것이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정도의 충격이 시간, 속도 등 모든 물질 단위에 영향을 주면서 초고속, 초대형, 초정밀, 초저온, 초고온 등 인간의 가치척도를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궁극적인 생활의 목표를 무엇으로 잡아야 할까?

지난 세기 동안 우리는 제한된 사람이 더 많은 자원을 활용하고자 옥신각신하며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해왔다. 이것이 도리어 환경파괴라는 재앙을 부르며 인간 삶의 터전을 위협했다. 오로지 물질적 만족을 얻고자 자신의 힘을 활용한 독점과 지배, 낭비 속에서 소위 물질극치주의의 경제개념이 판을 쳤고 그것이 곧 환경오염을 부추기며 지구의 숨통을 조여갔다.

새 천 년, 고루한 20세기의 산물을 뒤로하고 새로운 밀레니엄을 향해 나아가는 지금에, 환경파괴가 인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어려운 시기로 치닫는 이 때에, 인간척도를 다시 세우는 대체적인 가치관이 절실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밀레니엄을 향한 새로운 생각, 그 대체적인 가치관은 바로 신뢰(信賴)이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잃어버린 인간의 가치를 다시 찾아 갈 때 희망과 축복의 새 세기를 열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지금의 경제비용을 사회비용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더 이상 소유의 개념으로는 경제와 사회를 단정지을 수 없는 이유에서다.

사회적 목표 또한 경제적 부의 목표에서 인간다운 삶의 질을 높이는 정신적인 만족, 행복 추구 등의 목표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 자체에서 행복을 구하고 궁극적인 인간의 보람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만이 환경을 보존하고 인간이 같이 공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소한의 물질적 만족을 느끼면서도 남의 희생을 강요 할 수 없는 열린사회, 참된 신뢰의 사회를 위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노력해야 할 때다.

THE CHUNGNAM REVIEW

서해안 시대 해양충남의 미래

김 기 현 (金 基 鉉)
충남대학교 해양학과 교수

Ⅰ. 머리말

우리는 지난 20여년간 '서해안 시대'라는 말을 자주 들어왔고, 또 대망의 21세기가 열렸다. 지난 1998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 해양의 해'이었으며, 정부는 해마다 5월 31일에 '바다의 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열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세계 각국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하고 있고, '신해양법질서'가 새롭게 자리잡아 가고 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 나라는 "인류 최후의 보고인 해양"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자주 들었다.

또 해마다 여름철이면 적조가 발생하여 어민들에게 수십억원대의 피해를 입히는가 하면, TV뉴스나 신문에는 해양오염에 대한 보도가 자주 등장한다. 우리의 식탁에는 생선, 미역, 조개, 젓갈이 매일 오르고, 먼 태평양에 생기는 엘니뇨는 지구 곳곳에 폭우와 가뭄, 폭서와 혹한 같은 기상이변을 일으킨다. 비록 우리가 사는 곳으로부터 바다는 지역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으나, 우리의 삶에서 한시라도 해양을 떼어놓을 수는 없다.

이 글에서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충남 서해안 지역의 해양개발에 대해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보려고 한다. 과거를 돌이켜 보아 충남 서해안 지역이 낙후된 원인의 분석을 시도하고,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무분별한 개발로 해양생태계가 변화되고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21세기를 맞이하여 충남 서해안 지역의 발전을 위해 추구해 나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해양 충남의 미래상을 살펴보려고 한다.

II. 해양충남의 미래상

1. 과거: 충남 서해안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1) 충남 서해안지역의 낙후성과 원인

충남 서해안 지역의 중요한 특징중의 하나는 타지역에 비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 서해안 지역은 평야가 발달되어 있어 역사적으로 농업을 경제기반으로 하는 인구 밀집지역으로 발달되어 왔다. 그러나 건국 이후 충남의 서해안은 경부축의 내륙개발 주축으로부터 격리되어 변경적 위치에 머물러 왔다. 충남 서해안 지역의 낙후 현상을 가져온 주요 요인을 분석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리적 원격성

내륙 개발축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원격성이다. 지난 40여년간 국토개발은 경부선과 호남선의 철도로 대표되는 서울-대전-부산과 대전-광주를 잇는 내륙개발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이 개발축으로부터 격리된 충남 서해안권은 오랫동안 낙후지역으로 남아있었다. 특히 1970년대에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가 기존의 내륙개발축을 따라 건설된 이후에는 충남 해안지역의 상대적인 낙후성은 심화되었다.

(2) 접근성 부족

지형적 장애물로 인한 접근성 부족이다. 충남 서해안지역은 개발축이 통과하는 대전, 천안 등 충남 내륙지방의 대도시로부터 차령산맥으로 차단되어 있어 접근성이 부족하여 공간적 통합성이 결여되어 독자적인 권역을 형성하게 되었다. 대규모 항만이 부족한 것도 접근성을 어렵게 만든 요인이다. 따라서 개발의 파급효과가 균일하게 배분되지 못하고 경제적 연계관계가 강화되지 못하여 낙후성이 더욱 심화되었다.

(3) 대도시권 위주 개발전략의 후유증

그간 진행되어온 대도시권 위주의 개발전략으로 인한 후유증이다. 서해안지역은 서해를 따라 형성된 "선적(線的)"인 지역으로 그 개발전략은 연속성과 유동성을 기반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진행되어온 개발전략은 대도시권 위주의 "점적(點的)"인 개발전략이었다. 예를 들면, 아산만을 중심으로 하는 충남 북부지역을 수도권으로, 보령-서천을 대전권으로 포함시키는 등의 개발전략은 서해안지역의 선적인 특성을 무시하여, 지역간의 경쟁과 대립을 심화시켜왔다.

(4) 점이적 성격으로 인한 사각 지대

충남 서해안권은 수도권 남부 및 중부권의 북부라는 점이적 성격을 지니게 되어 오랫동안 개발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5) 보전적 토지이용과 농수산 중심 정책

충남 서해안지역이 지닌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보전적 토지이용규제와 농수산 중심의 개발정책이 추구된 결과로 산업구조의 다양화 정책과 적극적 개발의 우선 순위는 뒤로 미루어지고 농수산 일변도의 개발정책만이 추구되어 왔다.

2) 간척·매립과 환경 변화

1970년대 말의 삽교방조제 건설을 시발점으로 지난 20여년간 충남 서해안에는 무분별한 개발이 집중되어왔다. 충남 연안의 광활한 갯벌과 천해역이 간척으로 상실되어 대호지구, 석문지구, 근흥지구, 소원지구 등의 매립지로 변하였다. 많은 해양생물의 산란장 및 치어 양육장으로 사용되는 갯벌의 상실로 경제성있는 어족자원은 감소하고 있고, 연안의 해양생태계는 크게 변화하고 있다. 매립지에 들어선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산업폐수나 인구증가에 수반된 생활하수의 증가로 이 해역의 오염부하량은 증가하여왔고, 자연정화조의 역할을 담당하는 갯벌의 상실로 연안해역의 자정능력은 감소되어서 해양오염은 점차 심화되어 왔다. 이처럼 충남 서해안 연안지역의 해양환경은 지난 20여년간 크게 변화하였다.

2. 현재: 충남 서해안의 특성과 현황

1) "서해안 시대"는 정말 왔는가?

최근 충남 서해안은 광활한 간척매립지의 조성, 서해안 고속도로의 건설, 아산항 및 장항항의 개발 등으로 촉발되어 개발여건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개발의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는 최근 조성된 대호지구, 석문지구 같은 간척매립지의 저렴한 토지자원이 풍부하여 공업단지, 항만, 창고 및 물류 수송시설 등 부지를 확보에 용이한 장점이 있고, 아산만 종합개발, 장항-군산 산업기지 조성사업 등이 진행중이다. 이 매립지에는 대산 석유화학단지, 인주공단, 석문단지 같은 대규모 공단들이 형성되어 기계, 자동차, 석유화학 등 수많은 공장이 이미 가동중이거나 건설중이다. 또 이들 공장의 전기 공급을 위해서 보령, 서천, 태안에 화력발전소가 건설되었고, 당진에도 여러 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1997년 8월 발표한 "21세기 해양수산비전"에 의하면 전국의 해안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충남과 전북의 서해안지역은 「대중국 교역 지원기지」로 설정하고 보령항과 군장항을 양축으로 보령 인근 공업단지, 군장주변 공업단지를 지원하는 충남지역과 전북지역의 물류관문 및 대중국교역 지원기지로 육성하고, 해양문화어촌, 해양휴양어촌을 설립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또 충남과 전남북 서해안 주민들의 숙원이던 서해안 고속도로가 수년 내에 완전 개통될 예정이며, 서해안 관광도로의 건설계획이 진행중이다. 이와 같은 최근의 상황변화로 미루어 우리는 "서해안 시대는 이미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충남 서해안의 개발 현황과 문제점

(1) 충남 서해안 개발의 현황

해양개발의 맨 처음 대상지역은 연안역이다. 해양공간 중에서도 연안역은 육지와 해양환경이 상호영향을 미치는 특수환경인 동시에 21세기 고도산업사회의 중심축이 될 중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연안역은 공업, 수산업, 레크레이션 등 다양

한 활동이 경합·상충하여 그간 행정기관별 고유 목적에 따라 선점식으로 점유 사용되어 무질서한 개발이 초래되어 왔으며 서해안 전역에서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해양환경과 생태계 파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여년간 대호지구, 석문지구, 근흥지구, 소원지구 등 국내에서 시행된 대·소규모 간척매립의 대부분이 충남 연안에서 시행되었으며, 금강의 하구언 건설과 아산만 일대의 산업단지 건설 등의 영향으로 충남 연안역에는 해양환경과 생태계의 변화가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그 단적인 예로 그간 청정해역처럼 생각해왔던 천수만에서 최근 수년간 적조(赤潮)가 발생해 온 사실로 미루어 충남 연안해역의 오염문제는 이제 기우가 아닌 현실로 다가와 있다(국립수산진흥원, 1997, "한국의 적조").

(2) 충남 해양개발의 문제점

서해안권에는 이미 그간의 개발 후유증으로 해양오염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서해 생태계 변화의 가까운 증거는 수산어획물의 현저한 감소이다. 그토록 흔하던 '연평도 조기'와 '흑산도 홍어'는 사라진지 오래이다. 충남 연안에서도 맛 좋기로 유명했던 보령군 고정리의 '고정 김'은 보령화력발전소 가동 이후 자취를 감추었고(뿌리 깊은 나무, 1983. "충남"), 아산만의 준치와 민어, 천수만의 대하와 꽃게 등은 최근 생산량이 격감하였다. 해수 수질은 서해전 해역에서 이미 Ⅱ등급으로 변하였다(환경처, 1991. "환경백서").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국민의 여가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환경친화적인 해양친수공간(海洋親水空間)은 갈수록 감소추세에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무분별한 간척매립과 하구언의 건설로 인하여 생물생산력이 높고 해양생물의 서식처로서 높은 가치를 지닌 갯벌과 해안습지의 파괴가 극심한 것도 한국적인 특수상황이며, 지난 20여년간 서해안에서 수행된 대규모 간척매립이 충남연안에 집중된 사실로 미루어 최근 충남지역에 일어난 해양환경 변화의 주원인 가운데 적어도 한가지는 간척매립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더구나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서해안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충남 서해안 지역의 농어촌들은 무질서한 도시화의 과정을 거쳐 신흥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이며, 그에 따른 인구증가, 오염부하량 증가 및 자연환경의 변화는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는 단순히 매립과 간척으로 대표되던 연안개발의 욕구는 장차 관광단지 개발, 임해산업단지 조성 등 더욱 다양한 형태로 표출될 것이다. 이처럼 경쟁적으로 연안공간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경합은 더욱 심한 해양환경 변화와 생태계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충남 서해안의 자연적 특성

(1) 오염에 취약한 서해

서해는 수심이 얕은 전형적인 대륙붕해(大陸棚海)로서 동중국해나 태평양과 해수교환이 비교적 활발하지 못하며, 조석간만의 차이가 크고 강한

조류가 흐르는 바다이다. 동고서저(東高西低)인 지형구조 때문에 한반도의 강들은 대부분 서해로 유입되며, 황하, 료하, 양자강 등 중국대륙의 큰 강들도 서해로 유입된다. 우리 나라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대부분이 서해로 유입되고, 최근 중국도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서해의 오염부하량은 동해나 남해에 비하여 더욱 큰 규모이다. 이처럼 수심이 얕고, 대양과 해수유통이 원활하지 않고, 오염부하량이 큰 서해는 오염에 극히 취약한 바다이다.

최근 서해 연안에서도 수차의 적조 발생이 보고되고 있으며, 충남 해안에서도 1993년도부터 적조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점차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발생범위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충남연안에는 1993년 이후 수 차례 적조발생이 관찰되었다.

이처럼 충남 연안은 이미 적조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니며, 충남 연안의 적조 발생 여건에 대한 사전조사와 더욱 적극적인 해양오염 저감 등 적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충남 연안에서도 앞으로 적조발생이 더욱 빈번해 지고 그 피해범위도 점차 확대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만 한다.

(2) 해역구분

충남 연안의 해역은 해양학적 특성과 인근 육지의 산업분포를 고려하여 다음 3개 권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 아산만 산업권역 : 아산만 일대의 아산, 당진, 대산, 석문, 교로리 등 제조업 공업권역

• 태안·안면도 관광휴양권역 : 가로림만 입구부터 서산, 태안, 일대의 학암포, 만리포, 안흥, 몽산포, 방포 등 서산해안국립공원 일대의 태안 안면도 서쪽 해안 및 인접 해역

• 천수만·보령·서천 수산업권역 : 안면도의 동쪽 천수만쪽 해안, 홍성, 보령, 서천에 이르는 어로, 양식등 수산업 이 활발한 해역

3) 권역별 현황

(1) 아산만 산업권역

아산만은 조류가 지배적인 대조차만(macrotidal embayment)으로 매우 복잡한 해안지형으로 둘러 쌓인 반폐쇄성 천해역이다. 이 지역에는 지난 20년 동안 남양, 삽교, 아산, 대호, 석문 방조제 등이 건설되어 대규모의 간척매립이 이루어졌으며, 인주공단, 아산공단, 석문공단, 대산 석유화학공단, 대죽공단 등 대규모의 임해산업공단이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인 곳으로 지난 수년간 극심한 환경변화를 겪었고 앞으로도 심한 해양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해역이다.

1989-1992년간의 조사에서 아산만 해역의 부유물질 농도는 13.9~47.6 mg/L로 비교적 높은 값을 보였으며, 내만 쪽이 만의 바깥쪽보다 2배 정도 높았다.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2.7~4.9 mg/L로 표층수보다 저층수에서 높은 농도를 보이며 다른 해역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편이다. 유분은 0.4~2.3 mg/L로 다른 해역과 차이가 없

었으며, 아산만 전체의 암모니아성 질소의 평균 농도는 0.1543 mg/L, 질산염은 0.335~0.468 mg/L이었고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금속의 평균농도는 구리가 2.47 ppb, 납(Pb)이 0.08 ppb, 카드뮴(Cd)이 1.85 ppb, 크롬(Cr)이 0.43 ppb로 비교적 높지 않은 수준이다(충남대 해양연구소, 1994).

(2) 태안·안면도 관광휴양권역

서산-태안-안면도를 있는 해역은 태안 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연안개발이나 공단설립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뚜렷한 오염원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아직은 청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이 지역에 대한 해양조사는 별로 실시되지 않았으며 축적된 자료가 극히 적다. 그러나, 이 지역 북부의 태안화력발전소와 동쪽에 인접한 대산지역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이 지역의 관광개발은 태안 해안국립공원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안면도 지역은 천혜의 경관과 자연조건을 이용한 관광개발이 바람직하지만 도로 항만 등 접근성이 부족한 형편이며, 이는 2002년에 개최가 예정된 꽃박람회를 계기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천수만·보령·서천 수산업권역

충남연안 해역은 국내 최하위권 수산물 생산실적을 보이며, 최근 더욱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학자들은 수산물 생산실적의 저하가 지난 20여년간 충남 연안에 집중적으로 실시된 간척매립사업으로 인하여 경제성있는 어족자원의 산란과 치어 양육을 위한 갯벌, 소만과 같은 천해역 공간의 축소가 주요 원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 천수만 해역

천수만에는 대규모의 하천 유입이 없어 육지기원의 오염물 유입이 적어 1980년대 이전에는 청정한 수질의 유지가 가능하였다. 단지 3개의 작은 하천이 만으로 유입하고 있다.만 북부 서쪽으로 적돌강, 만 북부 동쪽으로 덕문천, 해미천, 와룡천 등의 하천수는 서산 A·B 지구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담수호 내로 유입되며, 수문을 통해 비정기적으로 천수만에 방류된다. 자연하천에서 천수만에 방류되던 담수는 서산 A·B 지구 방조제와 홍보지구 방조제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유입로가 대부분 차단되어, 자연하천의 담수유입에 의한 영향은 강우기를 제외하고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천수만 해역 전체의 수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로 다음 네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가) 서산 A·B지구의 담수호인 '간월호'와 '부남호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유입되는 담수의 영향이다. 이 담수호들은 서산시와 태안군 일부의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부영양호이며, 이들 담수호 수문의 개방으로 인한 비주기적 담수 유출은 조사해역의 해수수질 및 생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나) 홍성과 광천 등 중소규모 도시의 생활하수를 포함하고 흐르는 광천천과 홍성천의 유입수가

해수수질에 영향을 미친다.

다) 대천해수욕장 일대의 대규모 관광위락시설과 보령항 일대에 산재하고 있는 주택 및 음식점 등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는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조류에 의해 만으로 유입되어 천수만의 해수수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서해안 고속도로가 수년후 완공되면 천수만 주변도시는 급속한 도시화를 이룰 것이며 대규모 산업시설이 건립될 것이다.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천수만 해역은 상당한 수질오염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보령 해역

보령해역은 천수만 입구의 원산도와 보령시 오천면 고정리를 잇는 선으로부터 大川 및 무창포 해수욕장를 거쳐 서천군 서면 비인반도까지 해역으로 수산업을 위주로 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최근 관광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여름철에는 육상 및 해양오염이 상당히 증가하는 지역이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수효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그에 따라 이 지역에는 대규모 관광위락단지 조성과 생활하수 증가가 예상되며 그 결과는 대천-무창포 해역의 해수수질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다. 서천-금강 하구역

비인반도에서부터 금강 하구역까지를 포함하는 서천군의 해안으로서 북쪽의 서천군 서해안에는 서천화력발전소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대규모의 오염원이 없으나, 남쪽의 금강 하구역에는 금강을 통해 유입되는 오염부하량이 지극히 높은 해역이다. 특히 현재 건설중인 장군산업기지가 완공되고 생산시설이 가동되게 되면 이 지역은 극심한 해양 환경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3. 미래 : 21세기 해양 충남의 개발 방향

1) 충남 해양의 변화 예측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서해안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충남 서해안 지역의 농어촌들은 무질서한 도시화의 과정을 거쳐 신흥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이며, 그에 따른 인구증가, 오염부하량 증가 및 자연환경의 변화는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는 단순히 매립과 간척으로 대표되던 연안개발의 욕구는 장차 관광단지 개발, 임해산업단지 조성 등 더욱 다양한 형태로 표출될 것이다. 이처럼 경쟁적으로 연안공간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경합은 더욱 심한 해양환경 변화와 생태계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계획중인 서해안 관광도로와 안면도-보령간 연육교 등이 완공된다면 태안-안면도-대천을 잇는 관광벨트가 조성될 것이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폭주할 것이다. 이에 따른 관광단지, 위락시설 등의 개발은 충남 서해안의 오염부하량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2) 해양개발의 기본방향

(1) 지방화, 미래화된 해양개발

"21세기 해양수산비전"(해양수산부 · 해양수산개발원, 1997, "21세기 해양수산비전")에서는 해

양개발 추진의 기본방향으로, 세계를 해양산업의 터전으로 하는 해양개발을 지향하는 〈세계화〉, 후손에게 물려줄 풍요롭고 쾌적한 해양국토공간 조성을 위한 해양개발을 지향하는 〈미래화〉, 국가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해양개발을 지향하는 〈실용화〉,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해양개발을 지향하는 〈지방화〉 등 4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1세기에 이루어질 충남 연안의 해양개발은 위 4개 목표 가운데에서 특히 "지방화"와 "미래화"를 목표로 해야할 것이다. 지난 30여년간 국가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실용화" 해양개발의 차원에서 간척매립 사업은 충남연안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로 해양생태계 파괴와 수산자원의 고갈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특히 충남지역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후손에게 물려줄 풍요롭고 쾌적한 해양국토공간 조성을 위한 "미래화"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고 있다.

향후 충남에서는 더 이상의 간척·매립을 적극 억제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충남이 타 시도에 비하여 무역항 및 연안항의 선석이 절대 부족하므로 일정규모의 항만건설은 필요할 것이다.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대중국 교두보 역할을 맡게될 서해안의 중추 항만의 개발 및 확보는 이 지역의 경제 발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다. 또 충남해안에 주어진 천혜의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개발을 지향하는 "지방화"된 해양개발을 위하여 관광자원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때에도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한도내에서 도로건설, 편의시설 조성 등 최소한의 개발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2)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해양개발

모든 개발에는 항상 환경변화의 위험이 뒤따른다. 이때 개발을 허용하는 최소한의 기준은 그 개발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environmentally sustainable) 개발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개발의 후유증으로 환경변화가 있을지라도 그 후유증이 생태계의 자연복원력으로 복구될 수 있는 규모나 종류의 개발을 말한다. 개발과 환경오염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개발과 보전 사이의 적절한 균형유지는 중요한 계획단계에서부터 실행단계까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3) 해양환경 보전의 기본방향

(1) 충남 서해안 주민들에 대해 실시된 주민의식조사의 결과(충청남도, 1998. 5, "충남 해안도서 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에 의하면 충남 서해안권 주민들은 지역 개발보다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 해안·도서 종합개발의 기본방향은 자연생태계를 보전을 우선적으로 하고 개발을 되도록 억제하는 것이며,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친화적인 개발만이 허용되어야 한다.

(2) 충남 서해안 지역은 하천 및 해양오염은 심각하지만, 기타 다른 환경은 타 시·도에 비하여 양호한 편이다. 따라서 각 시·군별로 관리하천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여 하천오염을 적극 억

제하여, 해양으로 유입하는 오염물질을 감소시켜야 한다.

(3) 한편 충남 서해안권에는 철새도래지 희귀식물 군락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보존지역, 생태관광의 자원으로 경관이 수려한 도서 및 해안, 그리고 풍부한 어족자원이 있으며 이러한 자원은 보존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

4) 연안역 통합 관리의 과제

지금 충남 서해안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해양오염과 이로 인한 民怨이나 지역간 대립 등은 모두 종합적인 해양 개발계획의 不在로 인한 결과이다. 더구나 국민 소득수준이 더욱 향상되고 산업화가 더욱 진전되면 지금까지의 내륙위주 개발에서 "제 2의 국토공간"인 해양에 대한 이용수요가 급증하게 될 것이며,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무분별한 해양개발로 광역적인 해양오염과 불필요한 지역간 경쟁 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지역의 경제적 이익증진을 위한 해안개발과 지역의 생존·생태적 이익 수호를 위한 환경보전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하는 기본방향을 설정해주고, 다양한 이용욕구의 우선순위를 조절해주며, 연안자원의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개발 및 환경관리의 개선을 위해서 분야별 쟁점을 통합적으로 조정·계획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연안역 통합관리 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에서도 연안역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연안역통합관리법〉의 입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늦게나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5) 해양환경 보전과 생태계 보호 방안

(1) 관·학 협동 해양오염 모니터링 방안

해양오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의 종류, 농도, 오염원, 이동경로, 생태계 영향, 방제방법 등을 파악하고, 방제업무를 수행하고, 해양투기를 대신할 대안을 찾고, 정기적인 오염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업무가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 업무를 위해서는 많은 해양전문인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충청남도 행정체제에서는 해양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관·학 협동 방식에 의한 해양오염 모니터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충남지역 대학교의 전문연구인력과 충청남도가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관·학 협동의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해양오염 감시체제를 확립하는 방안이다. 관·학 협동의 한가지 예로는 충남지역 대학교의 해양학 연구를 위한 임해연구원 설립을 두유지 장기임대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충청남도가 지원하고, 설립된 임해연구원에서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얻어진 결과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이다. 또 임해연구원을 통하여 충청남도의 해양관리 담당 전문행정가와 학계의 해양생태계 보전 전문학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6) 해양 생태계 보호 방안

(1) 갯벌보전 기본계획 및 보호대책 수립

갯벌은 생태적·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다. 갯벌의 면적, 생태계 특성, 수산물 생산성 등의 경제성, 환경자정능력 등을 파악하여 갯벌 보전 기본계획 및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로림만, 천수만, 서천군, 태안군 일대에 남아 있는 넓은 갯벌은 독일의 예를 따른 '도립갯벌공원' 등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만을 "광역 생태계 보호구역" 내지 "청정해역"으로 지정

천수만이나 가로림만 등의 적정 해역을 선정하여 〈광역 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장차 〈청정해역〉으로 육성하여 수산물 증산과 수출증대에 기여하며 동시에 생태계를 보호한다.

(3) 철새도래지 및 야생동물보호구역(Wildlife Refuge) 설정

철새 도래지와 습지는 생태학적인 가치로 보존되어야 하며, 적절한 보전대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간월호와 부남호, 대호방조제의 대호호, 금강하구의 금강호 등 대해서는 습지보전지역,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철새 보호지역 야생동물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하여 밀렵과 불법어로를 금지하고, 주변 경작지의 농약살포 규제와 추수 뒤 이삭 남기기 유도 등 철새 서식 보호를 위한 다각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정 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 생태계의 안정이 확인된 다음에는 탐조대, 조망시설 등을 설치하고, 제한된 규모 내에서 습지견학 등을 실시하여 생태관광 자원화하여 보호구역 관리의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

(4) 식물군락 보존

해안과 도서의 식물군락과 해안 삼림은 보존할 가치가 있으며, 나무 벌채 및 훼손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관리를 위해서는 관민협동의 보호 프로그램 수립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역 청년회, 부녀회, 어촌계 등에 위촉하여 관리토록 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 안면도 일대와 용두해변의 소나무 숲, 방포의 모감주나무 군락, 외연도, 가의도, 내파수도의 동백나무 숲, 마도의 보리수나무 군락 등은 학술적 가치 및 관광자원으로서도 보존해야 한다.

7) 해양관광 자원의 개발 방안

관광산업의 세계적 첨단경쟁 속에서 충남 해안지역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단지 바다·해안·모래만 가지고는 안되므로 고도의 전략과 연구로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한다.

고품질의 관광상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해양관광은 "먹고 노는 관광" 위주로 개발되어 왔다. 지금까지 국민 대부분이 느끼는 해안관광지의 인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무질서하게 들어선 횟집, 노래방, 민박집, 술집과 널려진 쓰레기, 바가지 요금, 비포장된 주차장과 소속도 알 수 없는 주차비 징수원, 사라진 송림, 햇빛을 피할 그늘 없는 해안, 시멘트 구조물의 호안벽, 하수가 흐르는 백사장, 밤새워 들리는 고성

방가와 소음, 시도 때도 없이 확성기로 틀어대는 유행가 소리, 조잡한 게임방, 규제할 수 없는 청소년들 등이다.

앞으로 충남해양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은 지금까지의 '먹고 노는' 관광 개발의 형태를 버리고 자연을 '보고 느끼는' 관광으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국민의 여가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환경친화적인 해양친수공간(海洋親水空間)을 확보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해양문화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원시의 자연환경 보전

가장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는 최고의 관광가치는 원시 그대로의 자연이다. 따라서 무질서한 개발보다 자연경관을 원시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해안과 도서를 원시의 자연상태로 보전하여 원시를 동경하는 현대인에게 휴식공간 제공하는 것이다. 관광객의 안전을 고려하고,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유지와 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만을 설치하는 것을 관광개발의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플로리다 펜사콜라, 세인트조지섬, 파나세아 등 해변 관광지에는 야생귀리(wild oats)같은 식물군락과 모래언덕이 관광객의 발길에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목재로 산책로를 조성해 놓았다. 해변에서 200~300미터 뒤에 샤워장과 탈의실을 겸한 청결한 화장실과 주차장이 있을 뿐이다. 눈에 보이는 거리내에 다른 건축물은 없다. 음식점이나 모텔은 해변으로부터 수 km 후방에 모여있다. 플로리다 해안의 자연은 아직도 원시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도 "원시에 대한 향수"가 세계 각국의 관광객을 불러모으고 있다.

(2) 미래지향적인 개발철학과 심미안

관광의 세계적 첨단경쟁 속에서 단지 바다·해안·모래만 가지고는 안되므로, 고도의 전략과 연구로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한다. 이 지역개발이 후손에게 '영원한 유산'이 되도록 미래지향적인 개발철학과 심미안을 가지고 추진한다. 충남해안은 바다·섬·꽃·공원·휴양림·철새 등의 '감성제품'의 자원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쾌적감'(comfort)을 조화시켜, 고품질 관광상품으로 제공하기 위한 심미안이 필요하다.

(3) 친환경적 자연관광 내지 생태관광 지향

친환경적인 '자연관광'(Nature Tourism)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의 생명가치를 존중하는 '생태관광'(Eco-tourism) 휴양지가 되게 한다. 충남 서해안 및 도서지역의 경관수려지, 갯벌, 철새도래지, 습지, 식물군락 등은 생태적으로 충분한 보전가치가 있으며 적절한 보호조치가 수립·실시된 후 이를 생태관광지로 조성한다면 자연보호를 위한 재원조달과 관광수입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가능할 것이다..

• 미국의 수많은 '야생동물 보호구역'(Wildlife Refuge)과 국립공원들은 생태관광지로서 중요한 관광자원이다.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 대표적 예이다.

• 애콰도르의 갈라파고스제도는 조류 전문 생

태관광지로 연간 6만명의 관광객으로부터 1인당 80달러의 입도세(入島稅)를 거두어 연간 48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려 공원 유지와 생태계 보호 비용을 충당한다.

(4) 시군별로 '지역정체성'(CIP)에 바탕을 둔 '관광브랜드'를 개발한다. 즉 전통적 '地方色'(local color)을 살려 이를 세계적 특성상품으로 발전시킨다.

8) 수산자원 관련 대책

향후 수산자원의 감소 방지를 위해서 충남 연안에서 더 이상의 간척·매립사업이 허가되어서는 안된다. 어류의 산란장 및 치어 양육장의 기능을 담당하는 갯벌과 천해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간척·매립사업의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염물질 투기를 엄격히 규제하면 해양생태계는 점차 안정화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종묘 배양과 치어 방사량을 증가시키고, 인공어초 투입, 불법어로의 규제 등의 노력을 통하여 수산자원을 서서히 복원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는 천수만이나 가로림만을 "광역 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철저한 오염규제를 시행하여 장차 "청정해역"(Blue Belt)으로 육성하여 수산물 증산과 수출증대에 기여하며 동시에 생태계를 보호하는 방안이다. 더욱 적극적인 정책으로는 서산A·B지구 간척지 가운데 한 곳의 방조제를 없애고 갯벌로 되돌리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충남의 어선 규모가 타시도에 비하여 영세하고 빈약하므로 어선의 규모를 증가시켜 대형어선을 사용한 먼바다(遠海) 조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Ⅲ. 맺음말

충남 서해안지역은 최근에 주어진 개발여건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간 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하였던 경제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지역적 경제기반을 강화하고 공간적 통합성을 모색하는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의 균형을 모색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방향을 정립하여, 충남 서해안 지역이 지난 40여년간 머물던 경제적 낙후성과 구조적 정체성을 탈피하고 21세기를 향하여 발전할 수 있는 개발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충남 해안·도서의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보다는 보전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개발의 경우에는 최소한 개발과 환경보전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양개발은 환경파괴가 없는 산업기술이 확보된 이후로 가능하면 미루어져야 한다. 개발을 허용하는 최소한의 기준은 그 개발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environmentally sustainable) 개발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해양오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오염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업무가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관·학 협동을 통한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방안이 효율적일 것이다.

앞으로 충남해양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은 미래지향적인 개발철학과 심미안을 지니고, 원시의 자연상태를 보전하여 원시를 동경하는 현대인에게 휴식공간 제공하고, 환경친화적인 자연관광 내지 생태관광을 지향해야 하며, 해양친수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충남 서해안의 경관수려지, 갯벌, 철새도래지, 습지, 식물군락 등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실시하여 자연보호를 위한 재원조달과 관광수입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생태관광지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충남 연안에서는 갯벌과 습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더 이상의 간척·매립사업이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

21세기에는 충남 서해안의 바다가 모든 국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바다로 사랑 받을 수 있고, 인간과 모든 생물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바다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글을 맺는다. 열린충남

新지방문화 창조를 위한 충남도정의 정책방향

- 새천년을 열어가기 위한 문화정책의 전환과제 -

최 병 학 (崔 秉 鶴)
충남발전연구원 자치행정팀장

Ⅰ. 머리말

이제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문화정책"에 관한 인식제고와 함께 그 실천적 노력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이는 오랫동안 다분히 물리적, 가시적 개발사업에 치중했던 행정시책에 있어서 진정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부합되는 지역발전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자세전환을 요구하는 것과 맥을 함께 하는 것이다.

한편, 민선자치평가에서 모범적인 면모를 보였던 충청남도는 「人本·經營行政」을 이미 도정철학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이를 다시 구체화한 「수요자 중심의 新경영행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민선 2기 1주년을 기해 「21세기 新지방문화의 창조」를 중요한 도정목표로 제시하고 있다.[1]

앞으로 닥쳐올 21세기는 분명 우리에게 있어서 도전의 세기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한 어떠한 변화보다도 질적으로 더 큰 시대전환적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2] 그런즉 어제와 오늘의 연장선상에서는 미래를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의 사고의 틀을 미래지향적인 사고의 틀로 바꾸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우리의 과제설정도 불가능해 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21세기 문화시민像의 정립은 매우 중요하다. 21세기 문화시민의 목표가치는 인류의 안녕과 복지, 그리고 자율성의 증대로 이

1) 충청남도, 민선 2기 1주년 기념 도지사 기자회견 자료집(1999. 6. 24).

2) 권터 뷔르텔레(편)·연기영(역), 21세기의 도전과 전략(서울 : 도서출판 밀알, 1996), 235 ~ 240쪽.

해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참여자로서 우리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면 보편적 윤리관과 세계질서와 슬기로운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사고와 대응자세를 갖추는 것이 시대적 전환기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역사적 과제일 것이다.

이 글은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충청남도가 능동적으로 표방, 추진코자 하는 「21세기 新지방문화의 창조」를 구체화하는데 요구되는 기본적인 관점과 방법론과 관련된 문제와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여기에서는 21세기 新지방문화의 창조를 위한 자아발견의 차원에서 「지역정체성(regional identity)의 재발견」,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공존하는 사회만들기 차원에서 「자연·환경친화적 생활운동」, 그리고 도민봉사를 위한 지방자치의 발전 차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자치행정 구축」을 다루어보고자 한다.[3] 다만, 이는 앞으로 상당한 논리적 기반의 재검토와 더불어 시책추진상의 고려사항 등을 포함하여 적잖은 추가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II. 지역정체성의 재발견 노력

1. 지방문화와 新지방문화

1) 지방문화의 재검토

우선 '지방문화'(local culture)란 어느 한 지역(지방)사회의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공유하는 신념체계(sharing belief system)로써, 이는 그 지역의 정체성(regional identity)을 드러내주는 가치구조 또는 정향(orientation)의 집합체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문화는 장구한 역사성과 공동체적 동질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태도나 의식을 통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4]

이것이 가치중립적(value-neutral) 견지에서 보는 지방문화의 내용이다. 그러나 지방문화는 그 지방의 특성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구체성을 띠게 된다. "온건, 끈기, 포용성(감싸안음), 배타성, 인정, 激情的, 보수적, 진취성, 타협적" 등이 그것이다. 결국 지방문화의 실체를 논할 때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이라는 가치평가가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지방문화를 語義에 따라 "그 지방의 문화"로 해석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5] 이 경우

3) 충청남도, 제2의 건국운동의 실천방향과 과제연구 : 新지방문화 창조를 위한 충남의 21C 문화시민운동을 중심으로, 제36회 지방행정 연수대회 제출논문 (1999. 11. 4~5) 참조.

4) 최병학·최창희, "자치시대에 있어서의 지방문화의 위상 탐색 : 관치문화로부터의 脫却과 자치문화로의 전환논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9집,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1994. 12), 189~190쪽.

에는 그 지방의 문화적 특징, 예컨대 역사문화유산의 多寡나 역사성·전통성(=역사적 전통) 여하에 따라 지방문화를 논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이 단지 언어상의 차원에서의 중앙문화(또는 한국문화)를 그대로 지방에 단순 대입해버린 상태에서 규정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것도 지방문화에 대한 개념적 합의나 방법론적 논의과정을 생략한 결과, 지방문화는 문화연구의 불모지로 남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 바람에 "지방자치의 완성이 지방문화에 달려 있다"고 말하면서도 아직까지 지방문화에 대한 쓸만한 개념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저 지역사회 내의 토착적인 요소들을 묶어 통칭하여 이를 지방문화로 여기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어떻든 지방문화에 대한 '보편성↔특수성', '전통성↔현대성', '상위성↔하위성'이라는 세 가지 인식차원을 통해 보면, 그것에 대한 속성과 유형의 조건을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중앙문화와의 관련에서 비교검토를 해봄으로써 우리의 지방문화의 위상을 재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지방문화는 특정한 지역성을 바탕으로 삼는 한 사회의 전체문화의 하위문화이며, 이는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내면화된 지역구성원의 생활양식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가치복합체로 인식된다.

지금까지 논의한 지방문화의 성격을 정리해 보기 위해 이를 중앙문화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기로 한다.[6]

〈표 1〉 지방문화의 인식차원과 新지방문화에 대한 示唆

차원 \ 구분	지 방 문 화	중 앙 문 화
보 편 성	① 공동체 위주의 사고	① 利益體 위주의 사고
	② 집단(응집)성	② 개별(개인)주의
↕	③ (과잉)동조성향	③ 단절(분절)의식
특 수 성	④ 지역주의(의식/감정)	④ 일탈(우월)의식
	⑤ (지역)분리주의 가능성	⑤ 단순 혼합구성주의

5) J. K. Wright, *Human Nature in Geography*(Harvard Univ. Press, 1966), pp.250~285 ; Yi-Fu Tuan, "Geopiety : A Theme in Man's Attachment to Nature and to Place," D. Lowenthal(ed.), *Geopieties of the Mind*(London : Oxford Univ. Press, 1975), pp.11~39.

6) 이는 우리의 지방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제안된 것이므로 이들은 단순화(또는 양극화)의 오류를 무릅쓰면서 유형화시켜 본 것이며, 여기서 지방문화와 중앙문화의 해당내용은 각 차원에서 반드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전 통 성	① 뿌리의식'(土着性)	① 전통성과의 단절
	② 역사성(溫存과 지속)	② 외래문화와의 迎合
↕	③ 身土不二的 사고	③ 변화지향적 성격
현 대 성	④ 현상유지의 보수주의	④ 狀況適應主義
	⑤ 배타적 성향	⑤ 물질지상주의
	① 基層的 서민문화	① 表層的 대중문화
상 위 성	② 橫斷的 공유의식	② 위계적 소유의식
↕	③ 토착적 지역문화	③ 관행적 상향지향성
하 위 성	④ 민속·향토의식	④ 近衛的 臣民意識
	⑤ 자기/卽自 동일시 성향	⑤ 타자/對自 追從的 특성

출처 : 최병학·최창희, "자치시대에 있어서의 지방문화의 위상 탐색 : 관치문화로부터의 脫却과 자치문화로의 전환논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9집,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 학연구소(1994. 12), 195쪽.

2) 新지방문화(Neo-Local Culture)의 요청

그렇다면 지방문화의 新지방문화로의 전환논리는 무엇이겠는가? 지방문화의 개념구조와 마찬가지로 그 속에 내포된 "태도·의식"의 경우에는 지방문화를 1차적으로는 가치중립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역사적 전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가치판단이 불가피하게 수반된다.

즉, 지방문화에는 특정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비교적 동질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의식구조·신념체계·가치관이라는 측면과 아울러 특정 지역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문화적 특징(역사·전통)이라는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은 가치중립적 개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치판단적 요소를 함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지방문화의 논리적 구조로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가치판단의 스펙트럼」은 지방문화의

〈표 2〉 지방문화의 논리적 구조

행태적 차원	문화적 차원	가치판단의 스펙트럼		
		긍 정 적		부 정 적
• 의 식 구 조	• 전 통 성	土 着 性	↔	고 착 성
• 신 념 체 계	• 역 사 성	통 일 성	↔	획 일 성
• 공 유 가 치	• 審 美 性	포 용 성	↔	배 타 성

출처 : 최병학,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新지방문화' 관련 교과편성 검토결과, 1차 연구보고서, 충남발전연구원(1999. 9), 2쪽.

구성요소(행태적·문화적)가 지닌 특성을 兩極化(polarization)시켜 보았을 때 긍정적·부정적 가치로 편의상 양분한 것이다. 예컨대 바람직한 토착성(뿌리의식)이라 할 지라도 이것이 왜곡·변질되면 고착성(고정관념)이 되는 것과 같다.

결국 新지방문화가 요청되는 까닭(이유)은 앞의 「가치판단의 스펙트럼」상의 부정적 가치를 배제(소거)하자는 것이다. 즉, 지방문화는 긍정적 측면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에 의해 부정적 측면을 지닐 개연성도 있는 바, 사실 지방문화에는 긍정적 측면이 많지만 부정적 측면 또한 적지 않다.[7]

따라서 新지방문화는 이미 가치판단적 개념인 것이며, 기존 지방문화에서 우려되는 부정적 요소를 제거한, 새로운 가치지향적(value-oriented)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新지방문화는 기존의 지방문화를 새롭게 변화시켜 보자는 의도에서 비롯된 '구성적인'(constructive) 개념임에 유의해야 한다.

〈표 3〉 새천년을 향한 新지방문화의 성립논리

① 지방의 위상에 대한 새로운 모색의 場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지방화시대를 펼치기 위해서는 지방의 문화가 명실공히 자리매김되어야 하며, 이 점에서 新지방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의 지방문화는 일련의 지방적 특수성 내지는 지역적 제약에 입각해 있던 까닭에, 앞서 언급한 지역주의의 표징(부정적 측면)이 함축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② 원래 지방이라는 의미는 인간의 보편적 삶의 조건과 방식이 대부분 공동체로서의 속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귀중한 존재이며, 따라서 지역공동체는 설사 지방자치를 논외로 치더라도 '지방적 삶'의 문제를 선험적 요청명제(a priori posturate)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유가 명백히 존재한다.

③ 특히, 지금까지의 중앙위주 문화의 개념으로부터 탈피, 문화의 지방적 차원에로의 시각과 관심을 전환시키는 일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가 언제나 그렇듯이 기본적 발상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다면 자치시대에서 어떻게 관치문화를 자치문화로 탈바꿈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맥락에서 「新지방문화」가 21세기 자치문화의 필수기반이 될 수 있다.

출처 : 최병학,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新지방문화' 관련 교과편성 검토결과, 최종 연구보고서, 충남발전연구원(1999. 9), 3쪽.

7) 최병학, "지방문화의 지역주의적 영향분석 : 지방문화의 제도적 자율성 결정범위를 중심으로," 우암논총, 제7집, 청주대학교 대학원(1991. 3) 참조.

2. 지역정체성의 재발견

1) 자아확인(self-identification)과 지방의 재발견

우리는 선진국이 두 세기에 걸쳐 이룩한 근대화를 반세기라는 짧은 기간동안 성취했으나, 최근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가치관의 혼란과 정신적 피폐라는 톡톡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통적 공동체(Gemeinschft)가 와해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자리잡고 있지 못하고 정체성 상실의 위기에 처해 있다.

원래 正體性(identification)은 그 대상과 다른 것을 구별해 주는 나름대로의 특성을 뜻함으로써, 정체성은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과 선명성을 뜻한다.[8] 즉, 지역정체성은 효과적인 행동의 기반이 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느낌을 향상시키고, 지역 내에서 사회나 집단의 응집성을 증가시킨다.

특히, 한 지역의 정체성의 외향적인 '이미지'를 특히 지역의 像(reginal image)이라 하는 바, 지역의 정체성을 지역상이라는 매체로써 추구하게 되면, 홍보나 교육 등과 같은 의도적 노력에 의해 정체성 강화가 수월해진다. 바람직한 정체성이란 시민들 사이에 공유되고 언제나 주장되는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체성 재발견을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으로는 자아발견, 그리고 지방의 재발견이다.

근간 지방이란 말이 많이 유행하고 있다. 지방의 시대, 지방문화, 지방자치, 지방경제, 지방산업 등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이란 어휘가 지니는 본원적 의미에 더하여 좋은 뜻보다는 부정적 의미로 왜곡되어진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에 대한 재인식이 없이 정치, 행정, 경제, 문화 등 제반 측면에서의 국가발전은 스스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9] 지방자치가 없는 정치발전도, 지방경제의 활성화 없는 경제발전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방이란 어떠한 의미를 지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전국에 대한 지방의 개념이다. 둘째는 중앙에 대한 지방이다. 전자가 토대의 의미를 지녔는데 비해 후자는 정치행정적 의미를 강하게 지니고 있다. 중앙정부가 소재하는 수도를 제외한 여타 지방을 일반적으로 지칭할 수도 있다. 세번째 지방의 의미는 지역주의적 측면이다. 이는 영남지방이나 호남지방과 같이 오랜 역사적 산물로서 문화적 동질성이나 귀속의식이 만들어낸 다분히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개념이다. 마지막 네번째는 지역과 혼동되어지는 지방의 개념이

8) 정체성은 한 개인과 그 주변지역으로 분리될 수 있는 바, 개인의 정체성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되찾는 것 말하고(individuality), 주변지역의 정체성은 내부정체성과 외부정체성으로 구분된다. 내부정체성은 그 지역주민이 함께 공유하는 인식을 뜻하며, 외부정체성은 타지역 주민들의 그 지역에 대한 인식을 뜻한다 할 수 있다.

9) 프랑스의 한 유명한 사회비평가의 표현을 빌어 본다면, 우리나라는 서울과 그 외의 사막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한다.

다. 현실적으로 지역과 지방의 공간적 범역(範域)은 일치할 지 모르지만 지역은 기능적 의미를 강하게 지니고 있는데 반해서, 지방은 정치행정적이며 인지적 의미를 강하게 지니는 경우가 많다.[10]

어떻든 이상과 같이 어떠한 측면의 의미에서 접근하더라도 지방이란 본원적 의미가 재발견되어야 한다. 이제는 지방을 보는 눈과 인식이 달라져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우리의 지방행정문화는 어떠한 형식에 깊이 관련되어 있고 그것이 장기간에 걸쳐 형성·유지된다는 것이며, 또한 모종의 가치판단적인 요소를 지니게 되지만, 언제나 그것은 환경(=지방행정이 존재하고 있는 母社會)과의 부단한 교호작용 속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지방행정문화는 시급히 새로운 세계화·지방화, 그리고 지식정보화시대에 명실공히 부응하는 지방 차원의 진정한 자아발견을 구체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2) 충남 古都의 옛모습 되살리기

충청남도의 新지방문화 창조는 역사문화도시 옛모습 되살리기로 구체화될 계획이며, 이미 2000년도 사업계획에 공주, 부여, 홍성 및 논산(강경)·서산지역의 역사문화자원 복원·재현을 목표로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바 있다.[11]

어떻든 「21C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충남의 「역사문화도시 옛모습 되살리기」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서,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가치부여는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를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는데 긴요한 요건이다. 이는 종래 경제성 위주의 개발방식에서 탈피, 문화적 측면에서 한 고을의 역사적 품위를 되살리고, 충남 古都의 정취를 되살리는데 우리의 노력과 지혜가 요청된다.

특히, 충남에는 백제 고도인 公州·扶餘가 있고, 서부지역에는 수백년간 행정의 중심지였던 洪城, 그리고 瑞山·論山 등지가 있으나, 이 지역들은 금세기 개발정책과정에서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바, 그동안 조사·연구된 귀중한 역사문화자원을 재조명하여, 옛도시·옛고을의 모습과 이미지를 새롭게 복원·창출, 「21C 문화시대」에 지역경쟁력의 주요기반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노력이 긴요하다.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을 주축으로 「충남 역사문화도시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 기본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공주·부여·홍성 및 논산·서산 등지에서 찬연했던 역사의 현장을 독특한 정신교육장화를 추진하고, 이로써 21C 문화의 시대에

10) 즉, 모든 지방은 지역일 수 있지만 모든 지역은 지방이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은 지방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지방이라는 말 자체도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최상철, "지방의 시대와 지방개발," 한국사회과학연구소(편), 지방의 재발견(서울 : 민음사, 1985), 11~13쪽 참조.

11) 충청남도, 2000년도 시책구상회의 자료집(1999. 10).

〈표 4〉 충청남도 역사문화도시(古都)의 옛모습 되살리기 추진계획(안)

단계별	추진목표	추진기간	주요내용	비고
1단계	기본구상 및 기초조사	'99. 7 ~'99. 12 (6개월간)	• 道 : 기초조사 연구사업 추진 • 시·군 : 시범지역 선정, 검토	충남발전연구원 주관, 추진 (방법론 개발)
2단계	옛도시 대상 시범사업 추진	2000. 1 ~2000. 12 (1년간)	• 道 : 정책방향 제시 및 지원 • 시·군 : 5개 시 군 대상(공주, 부여, 홍성, 논산, 서산 等) 시범사업 추진	道+시·군 컨소시움 구성 → 협력사업 추진
3단계	옛모습 되살리기 대상지역 道전역 확대	2001. 1 ~2002. 12 (2년간)	• 필요시 도시유형별로 구분, 여타 지역으로 확대·추진 • 충남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성과 가시화 → 충남의 역사문화정책 고도수준 도달 기대	도시유형별 시·군 컨소시움 구성 → 협력사업 추진

출처: 충남발전연구원, 충남 古都의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추진계획(안) (1999. 9), 5쪽.

명실상부하게 부응하는 고부가가치 관광상품화 추진도 함께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한 각급 행정기관의 관심·투자도 중요하나, 건전한 시민단체의 역할이 더 더욱 중요한 바, 긴밀한 상호협력과 꾸준한 노력이 절실하며, 「새천년-충남의 世紀」를 구현하기 위한 지혜 결집이 요청되고 있다.

이같은 「충남 古都의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추진을 통한 역사자원의 가치를 발굴, 이를 새롭게 부각시켜 충남지역의 역사성과 문화가치를 발현토록 함으로써, 충남의 正體性(지역정신·지역기풍)을 확립하고 「21C 新지방문화」 정착에 기틀이 되도록 하며, 특히 「충남 古都의 옛모습 되살리기」는 국정~도정~시·군정간 긴밀한 연계 속에서,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문화영토시대」를 이룩하고자 한다.

3. 앞으로의 실천과제

지방 차원의 자아발견이 곧 지역정체성 확립의 관건이라 할 때, 앞으로 어떠한 실천전략과 추진과제를 설정해야 마땅하겠는가?[12]

우선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 것인가?, 우리는

12) 최병학,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新지방문화' 관련 교과편성 검토결과, 최종연구보고서, 충남발전연구원(1999. 9), 3쪽.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나는 진정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정녕 어디로 향해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왜,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나 자신 바로 알기 운동」, 「내몫 다하기 운동」, 「분수 지키기 운동」,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않기」, 「하루에 한번씩 반성하기」, 「땀흘리는 보람의 일터운동」, 「도전의식」, 「남(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기」, 「장애인 배려-장애인 먼저 운동」, 「스승 및 어르신 존경하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지방 차원의 자아발견이 곧 지역정체성 확립이라는 점에서, "우리 자신은 역사적 존재라는 인식", 그리고 "역사에 있어서 인간은 무엇을 무엇을 의미하는가?"(Was bedeutet der Mensch für die Geschichte?), "역사는 반복되는가?"(=역사순환론),[13] "잘못된 역사는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분명 역사는 미래를 위한 것",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일깨워) 앞날을 설계(예비)한다"라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고장 역사 바로알기 운동」, 「내고장 뿌리찾기 운동」, 「역사문화유산 되살리기 운동」(=옛모습 되살리기), 「孝 사상 고취운동」, 「내일을 위해 오늘에 최선을 다하기」, 「희망찬 내일 준비하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요컨대 지역정체성의 재발견은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지방적 삶의 방식과 조건'에 있어서, 그것이 갖는 의미를 스스로 일깨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아발견이 선행되어야 하고, 자기가 사는 지역의 역사문화를 인식해야 하며, 특히 공직자들은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봉사를 위해 각성,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Ⅲ. 자연 · 환경친화적 생활운동 전개

1. 인간과 자연의 조화 · 균형

1) 생태지향적 가치관 확립

21세기를 마주한 세계각국은 저마다 경제력,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첨단산업개발에 여념이 없다. 더욱이 소수의 산유국을 제외하고는 천연자원이 더 이상 국제경쟁력의 주요원천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으며, 특히 녹색혁명과 소재혁명으로 국민총생산의 단위당 천연자원의 소모량이 격감되면서 위기의식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 및 자연파괴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 그동안 환경을 무시한 개발행위로 생태계가 크게 훼손되면서 수질, 토양, 식생, 대기오염으로 각종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인구와 경제활동이

13) 서구의 몰락(*Der Untergang des Abendlandes* : 1918~1922)을 쓴 슈펭글러의 史觀이 여기에 해당된다. 차하순(편), 史觀이란 무엇인가(서울 : 도서출판 청람, 1986), 18~20쪽.

증가함에 따라 토지를 경제적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압력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토지의 경제적 개발과 환경보전의 필요성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즉, 경제학자들과 생태학자들은 경제학과 생태학 사이의 과학적인 오해를 없애고, 통합적 과학의 메시지를 일반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소위 '생태경제학'(ecological economics)이라는 통합과학을 더욱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미 지구환경보존협약에 따른 지속가능개발(ESSD ;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 등장하면서, 환경보전에 입각한 지역개발이 크게 강조되고 있고, 이에 따라 녹색산업, 녹색경제학(Green Economics), 환경주의 등이 세간의 관심을 크게 끌고 있다.[14]

2) 자연보호·환경보전의 우선정책화

해방 이후부터 우리의 초기 개발계획은 총량경제성장에 필요한 산업기반의 투자확대에 국한하였다. 국토구조에 대한 과업이 본격적으로 정책과제로 등장한 것은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만들어진 1972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로부터 새천년 도래에 임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추진되어 온 각종 국토개발은 우리의 생활구조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와 같은 과정에서 물리적 개발에 더 우선하였다는 점이다.[15]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도시화, 산업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나 종합적 접근과 근본적 대응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주요 도시 및 공단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이 심화되어 SO_2와 TSP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상수 취수원인 호수와 하천은 대부분 2급수 내지는 3급수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성장과 개발위주의 자원이용으로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나 환경에 대한 투자액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들어 폐기물매립지가 부족하나 민원야기에 따라 부지확보가 어려우며 지구온실화, 생물종 다양성 보전 등 국제환경문제의 협약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어 우리의 입장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16]

앞으로 도시화가 더욱 진전되는 과정에서 인구의 도시집중이나 과밀한 도시활동에 의한 교통공해, 생활폐수 등의 도시생활형 공해나 녹지의 감소 등 도시특유의 환경문제 해결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도시의 환경문제에는 유기적인 복합관계가 있고, 상호간에 연관되어 있다. 또한 최근 지구규모의 환경문제도 도시주민의 일상생활이나 도시활동이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복잡해지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처해서 조화 있는 인간생활환경을 창조해 나가려는

14) P. Batelmus, *Environmental. Growth, and Development* (London : Routledge, 1994).

15) 김귀곤, "미래의 국토환경," 토지연구, 한국토지개발공사(1992년 1~2월호).

16) 신현덕, 환경정책론 (서울: 동화기술공사, 1992), 225-233쪽 참조.

도시의 물리적 구조나 경제적 계획, 그리고 생활양식 등을 같이 고려해서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로 다루고, 인간정주공간에 있어서의 다양한 활동이나 구조를 자연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자립도, 안정적인 그리고 다양하고 순환적인 계획에 근접하는 공간정책을 확립할 필요가 절실해 지고 있다.

특히, 에코폴리스(eco-polis)의 목표상은 도시를 자연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자립성, 안전성, 그리고 순환성을 가지도록 설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에코폴리스에서 추구하는 목표상은 환경적 측면에서만 양호한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생태적, 인간사회적 측면에서 양호한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다.[17]

그러나 에코폴리스의 도달목표에는 '인간과 환

[그림 1] 「푸른충남 21」을 구현하기 위한 환경정책 목표체계

〈 21세기형 환경충남의 추진전략 〉

- 보전과 개발의 내실있는 조화 추구
- 환경정책결정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및 제도화
- 환경친화적인 지역사회 건설의 기반구축
- 국제적인 지구환경보전 협력에 동참

〈 단기 정책목표 〉

-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 환경파괴를 최소화 개발계획 추진
- 쾌적한 자연생태계 조성
- 토양오염 및 대기질 관리계획 수립
- 상수원의 수질향상 대책 강화

〈 중장기 정책목표 〉

- 개발계획과 환경보전의 통합운영
-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 개발, 이용
- 충남의 특징적인 자연환경의 보전
- 사전 예방정책의 활용도 제고
- 상수원의 안정적 확보

출처 : 심문보, "21세기 충청남도 환경정책의 방향과 대응전략," 열린충남, 제3권 3호, 충남발전연구원(1997년 가을호), 6쪽.

17) 이와 같은 구체적인 계획개념의 예로서는 '물이 순환되고 재이용되어 공공수역에서의 오염 피해가 작은 도시'(물순환형 도시), '자원과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높여 환경부하의 경감을 도모하는 도시'(물질 및 에너지재생형 도시), '도시 속에 자연 그대로의 생태계가 남아 있어 자연과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대화할 수 있는 도시'(자연공생형 도시) 등이 그것이다. 김귀곤, 생태도시 계획론(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3), 91~95쪽; G. F. Melson, *Environment : An Ecosystem Perspective*(New York : Burgess Publishing Co., 1980).

경과의 관계'와 '자연과의 혜택관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서는 에코폴리스에서 생활하는 한사람 한사람의 시민과 그 주위의 환경과의 연관을 평가하는 것과 전체의 통합으로서의 도시(에코폴리스)와 그것을 둘러싼 보다 큰 환경과의 관계를 평가하는 2단계를 생각하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만큼 인간생활환경에 있어서의 전통적 관습과 미학적 규범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물리적 변수와 적절히 조화를 이룰 때만이 그것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속가능개발(ESSD)의 적극 수용

1) 환경용량의 심각한 고려

최근 들어 국내외에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국토개발과 '환경의 질'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국토이용의 효율성과 함께 지속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자원을 배분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는 미래세대에 대한 전망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나가는 사회를 말하는 것인 바,[18] 바로 지속성은 넓은 의미에서 세대간의 형평성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지속성은 생태학적 배려하에 이른바 'eco-development' 개념에 입각하여, 자연의 질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즉, 환경용량의 범위내에서 개발이 추구될 때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추상적 표현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속성지표(sustainability index)로서 '녹색국민총생산'(Green GNP) 지표가 개발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녹색국민총생산 산출방식에서는 종래의 국민총생산액에서 자연자본의 잠식비와 환경피해비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곧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환경과 자원을 운영할 때만이 항구적인 발전이 기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삼고 있다. 이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개발정책은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예컨대 "인간에 의한 개발과정은 과연 인간에 의해 변모되기 이전에 자연이 형성한 원래의 환경수준에까지 자연경관을 유지시킬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2) 환경의 質과 경제자원화

한 種이 살아남고 번성해 나갈 수 있는 서식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habitat building)은 인간과 동물에게 있어서 본능적인 動因이다. 자연생태계에 있어서 이런 본능적인 행위가 가져

18) 래스터 브라운, 크리스토퍼 프라빈, 산드라 포스텔, "살기에 적합한 세상," 세계로 열린창, 유네스코(1992), 24쪽

오는 환경의 변형은 다른 종들에게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게 한다. 그런데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환경변화의 부정적인 결과들은 대부분의 이런 변화를 수용할만한 적절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정한 순환체계를 형성하지 못할 때에 발생한다.[19]

그러나 이 생활환경에서 이용된 후 버려진 쓰레기와 남겨진 자원들은 아무 것도 더 이상의 유용한 기능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원까지도 적절한 연결을 통해 인간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순환체계에 통합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며, 인간의 개발행위를 통해서도 변화된 환경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찾아지고 있다.

모든 자연생태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에너지와 영양물질의 이동원리는 인간환경을 위한 설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 형태의 생활과정에서 생겨나는 쓰레기는 다른 생명체의 생활과정을 위한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생태계에서 이루어지는 유기물의 재순환은 토양의 비옥도와 생산력을 증가시켜 주며, 하수의 재순환은 지하수의 적정수위와 적당한 수질, 산림생태계의 생산력을 유지해 주며, 농업용수로서 농업생산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20]

이처럼 변화라는 개념이 단순히 그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아닌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적극적인 힘으로 작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앞으로의 실천과제

자연보호와 환경보전이 인간과 자연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共生(相生)의 핵심과제라 할 때, 앞으로 어떠한 실천전략과 추진과제를 설정해야 할 것인가?[21]

먼저 자연사랑 실천하기는 "인간이 자연을 사랑할 때만이 자연도 인간을 사랑한다", "한번 파괴된 자연은 결코 회복되지 않는다", "인간의 질서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야 한다", "진정한 자아의 재발견은 바로 자연을 새롭게 인식하려는 노력의 출발점이다", "자연을 사랑할 수 없는 자는 인간도 사랑할 수 없다",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답다", "인간이 자연을 소유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오만함을 버려야 한다", "어디까지나 자연은 우리가 후손으로부터 미리 빌려다 쓰는 것"임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자연사랑 실

19) 우리의 삶을 담고 있는 생활환경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주거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자원이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면서 비로소 성립된다. 즉, 물의 공급 → 욕실의 수도꼭지 → 배수시설 → 하수관, 또는 식량 → 부엌 → 쓰레기같이 자원이용을 위한 명쾌한 연결체계가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편안히 쉴 수 있는 주거생활시스템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정전, 앞의 책, 273~275쪽 참조.

20) Michael Hough / 신용석 외(공역), 도시경관·생태론(서울 : 기문당, 1991) 20~22쪽 참조.

21) 최병학,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新지방문화' 관련 교과편성 검토결과, 최종연구보고서, 충남발전연구원(1999. 9), 4쪽.

천운동」, 「내고장의 山河 잘 가꾸기 운동」, 「동식물보호 운동」, 「우리나라 꽃과 민물고기 보호운동」, 「우리 土種 잘 보존하기 운동」, 「습지보호운동」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가꾸기를 위해서는 "인간이 파괴한 환경은 재앙을 부른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경영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이대로 가면 마실물 조차 없다", "환경오염, 생태파괴, 인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환경파괴가 곧 인류재앙이다",[22] "진정한 소비의 뜻을 알자", "과소비는 재앙을 불러온다", "생산비용<환경비용"이라는 점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잘못된 소비행태 개선」, 「물건 아껴쓰기」, 「불량품 안만들기」, 「쓰레기줄이기 및 분리수거」, 「음식물 다먹기 운동」, 「쓰레기 자원화, 재활용, 경제자원화」, 「실개천 살리기-샛강 가꾸기」, 「무농약, 유기농법」, 「폐비닐수집」, 「유해색소 사용않기」, 「맑은물 지키기」, 「걷기운동, 자전거타기운동」, 「올바른 자동차문화 정착」, 「자동차 공회전 금지」, 「보행 위주 생활교통」, 「녹색운동-생명운동」, 「환경파수꾼-환경지킴이」, 「태양열 주택, 중수도 이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환경보전에 관심이 많은 각계각층 인사 및 지역사회의 명망있는 주민들을 환경파수꾼으로 지정·운영함으로써, 범국민적인 환경보전 참여의식 확산 및 민간에 의한 자율적 환경오염 감시기능의 강화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환경파수꾼의 주요역할은 환경보전에 솔선수범하거나 주민계도 및 환경오염 행위 등에 대한 감시 및 신고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에 솔선수범 및 대주민 계도를 보면, 합성세제와 1회용 생활용품 적게 쓰기,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생활화를 통해 폐기물감량화 유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하기, 포장 폐기물 줄이기 및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자동차 함께 타기 및 가까운 곳 걷거나 자전거타기 생활화, 야외에서는 도시락을 이용하고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오기 등이다.

또한 환경오염 행위 등에 대한 감시 및 신고를 위해서는 자동차매연 과다배출, 공장 굴뚝 매연배출,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악취발생 및 폐기물 불법소각 등 대기오염행위, 산업체의 폐수 무단방류 및 비밀배출구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에서의 불법세차 등의 수질오염행위, 수질오염사고(유류, 폐용제 유출 등), 폐기물 불법투기 및 오물 투기행위, 유독물 유출사고 또는 불법방치 행위, 특정 야생 동식물 등의 불법 채취·포획·이식 등의 자연훼손행위, 신고민원 부당처리 또는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부조리 등을 고발, 속히 교정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22) 이경재, 우리땅 곳곳 아프지 않은 곳 없네(서울 : 도서출판 푸른산, 1994), 머리말 중.

Ⅳ. 수요자 중심의 자치행정체제 구축

1. 도민만족행정 추진

1) 수요자중심의 자치행정

한마디로 「수요자 중심 행정」(user-centered administration)은 인본·경영행정의 도정철학을 구체화하는 행정원리이다.[23] 수요자 중심 행정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이다.

민선자치 실시는 지방행정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된 관심사가 지방행정 주체 내부의 능률적 운영에 관심을 두었던 종래의 경향에서 지방행정 주체 외부와의 관계 특히 봉사대상, 또는 소비자, 고객으로 일컬어지는 주민과의 관계로 확대·전이되고 있으며, 고객지향적 행정의 등장은 매우 시기적절하다.

과거의 지방행정은 단지 국가정책의 지역집행자 내지 단순한 서비스전달자로서 인식되었으며, 어떤 문제에 대한 핵심적 접근보다는 상부의 의도에 합치되는지의 여부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민선자치의 본격화에 따라 더 이상 주민 요구에 반하는 정책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즉, 서비스가 자치단체에 의해 직접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욕구가 직접 충족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선택권과 권력을 공유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나아가서는 주민정신을 고양시키고 이를 통해 지방민주주의를 실현코자 한다.

특히, 2000년도 초입에 선 민선 2기는 실로 엄청난 변화와 개혁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한 과제 중에서도 지방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비중있게 다루어야 할 것은 행정서비스이다. 그 이유는 행정서비스야말로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은 행정서비스를 통해 지방정부와 접촉하게 되고 또한 그의 존재를 피부로 느끼게 된다. 현재 민간부문에서는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가히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그런데 21세기 포스트모던 시대를 맞이하여 관료제적 폐단을 혁신하려는 개혁조치 및 지방행정에 대한 경영방식 도입도 획기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요자 중심 행정의 관점에서 행정서비스의 주민중심주의, 고객중심주의, 소비자중심주의를 적극 반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총체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 공공서비스 분권화, 규제완화, 공동생산, 주민헌장제도 등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24]

결국 수요자 중심 행정은 행정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열린행정, 주민만족(고객만족), 공공서비스, 민의수렴, 투명행정, 봉사행정, 책임행정 그리고 생명존중의

23) 최병학, 새천년을 이끌어가는 충청남도 수요자중심 행정체제 수립방안 연구, 현안과제 최종 연구보고서, 충남발전연구원(1999. 6), 1~3쪽 참조.

행정, 공정한 행정, 신뢰성 있는 행정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행정수요에 걸맞는 행정적 대응방식으로서의 환류행정(feed-back administration)과 현장행정(field administration)을 그 모토로 삼는 것이다. 이는 종래의 탁상행정(desk handling)이 아닌 주민밀착행정을 말하며, '열린마음으로 발로뛰는 행정'을 통해 주민과의 거리감을 줄이는 체감행정과 신뢰행정을 말하며, 이것이 도민생활에 着根되어야 한다.

2) 수요자 중심 행정의 추진기조

첫째는 人本的 가치를 존중하는 행정이다. 인본행정은 인간을 중시하는 인간중심의 행정이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 존엄성을 보다 충실히 지키고, 도민의 행복감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바로 수요자 중심 행정의 이념이며, 그 마땅한 몫이다.

이를 위해 수요자 중심 행정은 단지 행정의 객체로 전락해 버린 주민을 행정의 주체로 환원시키고, 지역발전에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인간성을 확립하는 행정 본연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둘째는 민주성과 형평성을 강조하는 행정이다. 수요자 중심 행정은 주민과 자치단체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며, 따라서 민주성은 수요자 중심 행정의 중요한 이념이 된다. 또한 수요자 중심 행정의 1차적 목적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특히, 수요자 중심 행정이 추구하는 사회적 형평의 본질적 내용은 소외된 주민에게 가능한 자신들의 생활이익을 수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셋째는 책임과 공개를 실천하는 행정이다. 수요자 중심 행정의 이념으로서의 책임성은 행정이 공익(public interest) 확보를 위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행정의 공개와 분권화를 통하여 외부 행정통제를 강화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공개성은 민주주의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수요자 중심 행정의 필수적인 요건이다. 책임성 있는 행정체제 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의 일반의사가 행정기관으로 왜곡됨이 없이 흘러 들어가야 한다.

넷째는 주민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이다. 수요자 중심 행정은 행정기관의 입장, 즉 官의 입장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주민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이다. 지방정부가 실제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그리고 주민의 관점을 통하여 공공행

24) 김번웅, "행정서비스의 혁명 : 주요국의 행정개혁의 비교적 맥락," 21세기 한국행정론, 유종해 박사 정년기념 논문집(서울 : 박영사, 1996) : 최병학, "2000년대 진입을 위한 충남도정의 행정혁신," 열린충남, 제4권 4호, 충남발전연구원(1998년 가을호); David Osborn and Ted Gaebler, *Reinventing Government : How the Entrepreneurial Spirit is Transforming the Public Sector* (New York : A Plume Book, 1993) 각각 참조.

정을 수행하려면, 지방정부는 반드시 주민과 더불어 즉, 與民行政(administration with citizen)을 통해 공공행정을 운영해야 한다.

특히, 주민과 지방정부의 공동주체성(inter-subjectivity)은 수요자 중심 행정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며, 이는 참여 확대를 통한 주인정신을 갖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다섯째는 주민합의를 존중하는 행정이다. 수요자중심의 행정은 의사결정과정을 중시하여 대화를 통한 타협과 협상으로 합의에 이르는 행정이어야 한다. 즉, 앞으로의 자치행정은 주민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면서 대화를 통해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 스스로의 상호조절과정을 거쳐 목표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 실천방법과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民과 官이 서로 타협과 협상을 통한 합의의 과정을 밟아 시책과 사업을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는 주민정신을 고양하는 행정이다. 수요자 중심 행정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키고 주민 개인의 차원에서 행복감을 증진시키려는 행정이다. 따라서 지방민주주의란 외형만 갖추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능력과 태도가 뒷받침되어야만 하며, 결국 사회·문화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25]

2. 도민만족행정 추진

1) 초일류의 도민만족행정

우리의 지방자치를 제도화시켜야 할 중대한 사명을 안고 출범한 민선자치체제는 그간 주민위주의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의식개혁과 제도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자치행정이야말로 「주민지향적 행정서비스」(citizen-oriented administrative service)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로써 초일류 행정서비스를 통한 고품질의 도민만족행정, 혁신적 도정운영과 공직프로화 정착, 저비용-고효율의 운영시스템 구축이 가능해 질 것이다.

특히, 21세기에는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으로 크게 부각될 것이다. 민선자치도정 2기에는 200만 도민은 도정수행의 가치표준, 도민을 행정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자치도정의 본분인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미 민간부문은 물론 공공부문에는 「고객만족행정」(CSA : Customer Satisfactory Administration) 차원을 넘어 「고객감동행정」 차원에서 고객서비스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이에 행정분야에서는 "행정서비스는 서비스만족도에 따른 서비스공급(가격지불 및 품질평가)로 구체화됨을 재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차원에 입각하고 있다.

25) 곧 수요자 중심 행정은 능동적인 행정체제를 마련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태도 곧, 민주적 주민정신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이 자치의식의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한다.

〈표 5〉 충청남도 도민만족행정의 서비스 만족의 차원

- 행정서비스「공간의 만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공간이 주민들을 만족시키는 생활공간으로 형성될 때 달성
- 행정서비스「시간의 만족」→ 良質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간이 빠르면 빠를 수록 주민은 만족하게 되는 것
- 행정서비스「비용의 만족」→ 행정조직쇄신으로 비용을 줄이거나 같은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공급, 최대의 만족을 획득
- 행정서비스「정보의 만족」→ 주민의 알권리(access right)를 충족시켜 행정정보의 양과 품질을 보장하는 노력
- 행정서비스「자세의 만족」→ 친절한 태도, 성심성의껏 도와주려는 對民態勢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처리 평가내용이 결정

출처 : 이주희,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혁명(서울 : 도서출판 무한, 1994), 60~76쪽.

2) 도민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

새천년을 맞이하는 충청남도 자치도정은 다음과 같이 초일류 도민만족 행정서비스체제를 조속히 갖추어야 할 것이 요청된다.

즉, 충청남도 민선자치도정의 운영중심인「인본·경영행정」을 더욱 세련화하면서, "지성껏 도민봉사를 하되, 가장 생산적으로 수행토록"하고 '도정품질(상품) 고급화'를 적극 추진해야 하며, 민선자치도정 2기의 운영중심인「수요자 중심의 新경영행정」을 가속화해야 한다. 또한, 도정시책 및 행정서비스를 '무하자·무결점·최상의 서비스·최대의 만족'을 실현, 도민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민간부문의「TQM」(Total Quality Management),「100PPM」및「6시그마 운동」등을 뛰어넘는 행정서비스 품질혁신운동을 추진함으로써 하자율 제로화, 정밀도 최고수준, 사후관리(A/S) 철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수요자 중심의 초일류 도민만족행정을 펼쳐야 한다.

첫째, "도정의 초일류화"를 통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정상품의 고급화, 도정경영의 일류화, 공무원의 프로화 추진으로「원(논)스톱 서비스」,「도민평가제」,「행정실명제」를 의무화하며「도민제안제」,「도민감사청구제」,「도민발안제」,「도민감사청구제」의 제도화(법제화)를 통한 도민 직접참정제도의 도입, 운

영으로 도민위주의 가치관단, 민의수렴의 정책형성을 본격화한다.[26]

둘째는 민원행정서비스 완벽만족체계 및 환류장치 조기 정착을 위해 「내방객평가제」, 「부당행정 민원처리보상제」, 「현장이동 민원봉사제」는 물론 도민편익 위주의 법령·제도개선 및 불필요한 규제혁파를 추진하여 자치법규 대대적 정비, 「일몰법」(Sunset Law)을 제도화시키는 등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21세기 자치행정체제 구축방향을 도정운영 추진골격으로 새롭게 세워야 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원래 행정이란 '지방행정'(local administration)이 그 근본이 되어야 함에 불구하고 그간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데 그친 결과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전혀 불가능하였으며, 따라서 지방행정의 전문화·효율화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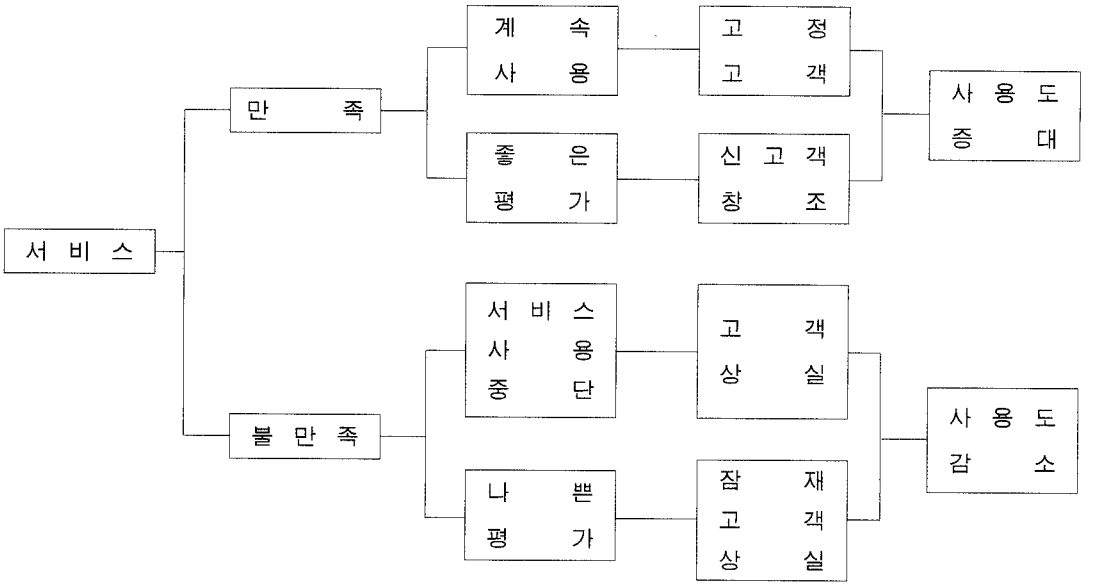
그러나 민선 지방자치의 착실한 제도화에 따라 앞으로 지방행정의 전문성·책임성·효율성·대응성에 획기적 변화가 있을 것이 기대되며, 특히 고도의 행정서비스를 창출·제공키 위한 공공책무의 담당자로서 '전문적 역할'(professional role)이 중시되며, 아울러 세계화-지방화-지식정보화 진전에 따라 세계와 지방이 직접 교류하게 됨에 대응하는 지방행정의 고도화·선진화가 요청되고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이로써 초일류 행정서비스를 고품질의 도민만족 행정체제를 구축하며, 특히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저비용-고효율의 운영시스템 정착 및 행정생산성 극대화 추진은 물론, IMF 완전극복을 위한 행정지원체제의 고밀도 재구성도 가능해 질 것이다.

아울러 최고·최선의 성과추구라는 공직풍토를 확고히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 바, 이는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성과 창출을 목표로 삼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역량 신장시킴으로써, 행정의 주인인 도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새로운 출발을 다짐해야만 한다.

특히, 고객만족(CS : Customer Satisfaction)에 대해서, 미국의 소비자문제 전문가인 굿맨(J. A. Goodman)은 "고객의 욕구(needs)와 기대에 부응하여 그 결과로서 상품, 서비스 재구입이 이루어지고 아울러 고객의 '신뢰감이 연속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이런 측면에서 고객

26) 이미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작지만 강력한 정부' 구현(책임경영 행정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 자치경찰제 제도도입, 지방행정조직의 감축·개편(공무원 총정원제 및 총정원의 10%선인 29,000명을 2000년까지 단계적 감축, 특히 29만명선 지방공무원 대상 2002년까지 8만명 감축),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구현, '행정서비스 헌장제' 도입,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촉진(현장·민원인 중심 현행 법령상 9,472개 사무 대상, 중앙권한 지방이양촉진법 제정 추진), 광역행정기본법 제정 및 주민발안제·주민투표제 등 직접참정제도 도입이 주요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국무조정실, 1998. 4, 34~41쪽).



[그림 2] 고객의 만족 · 불만족의 효과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CS경영의 추진」(1992), p.24 참조.

의 만족과 불만족의 인과관계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앞으로의 실천과제

수요자 중심의 도민만족행정 체제구축의 목표가 '작지만 강한 지방정부 만들기'를 통해 지방민주주의를 이룩하면서 진정한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면, 앞으로 이를 위해 어떠한 실천전략과 추진과제를 설정해야 하겠는가?[27]

크게 보아 「내살림 책임지고 꾸려가기」의 차원에서, "우리 시대에 지방자치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 "자치란 진정 무엇인가?", "국가와 지방은 어떤 관계인가?", "자율성은 얼마나 책임성을 담보하는가?", "지방자치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가?", "지방화와 세계화는 어떤 관계인가?", "民이 주체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民 스스로가 주체성을 잃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를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예시해 본다면, 「참여마인드」,

「공동체의식」, 「비판정신과 대안의식」, 「문제해결 능력」, 「책임감」, 「협력정신 - 파트너십」, 「페어플레이」, 「Rules of Game」, 「양보와 타협」, 「생산적 경제관념 확립」, 「善意의 경쟁 노력」, 그리고 「자율성 - 자율적 책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열린사회의 자치마인드 정립하기」 차원에서, "국가(지방정부)가 무엇을 해주기 전에 내가 국가(지방정부)를 위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시민이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면 관료는 獨走한다", "서로 합의된 바에 대해서는 따라야 한다", "大義를 위해 小我를 버린다", "다수 때문에 소수의 주장(권익)이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지역이기주의는 배격해야 한다", "공정, 공개, 형평성 있는 행정을 촉구한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아야 한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설 자리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권리주장에 앞서 의무이행을 한다"를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예시해 본다면, 「先의무이행 - 後권리주장의 생활화」, 「자치행정모니터링 노력」, 「제안제도 활성화」, 「행정성과 公示制」, 「시민자원 봉사활동의 촉진」, 「지역발전포럼」, 「개인과 전체의 조화」, 「민주시민포럼」, 「작은정부 구현을 위한 民官합동 협의체 조직·운영」, 「지방분권화 촉진 노력」, 그리고 「생산적 지방議政활동」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V. 맺음말

앞으로 전개될 이른바 「21세기 문화의 시대」로 규정되는 새천년에는 여러가지 중대한 문제와 과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생활태도가 각별히 지혜로워야 한다. 즉, 새로운 열린 시대에 걸맞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할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다가올 세기는 지난날 보다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화·다원화, 다층화·개방화·자율화된 사회 속에서 훨씬 더 개성이 강하고 그것이 서로 다르면서도 자유를 원하고 동시에 평등하기를 바라는 사회,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을 제 나름대로 가지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동의 삶의 터전 위에서 '함께·더불어·다같이' 살아가야만 하는 공존의 시대가 될 것이다.

세계는 지구촌으로 급속히 진전하고 있다. 이는 세계 어느 특정 지역주민도 '지구공동체'의 일원인 '지구가족'이 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변화의 추세 속에서 개개인이 나름대로 미래의 충격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개발, 육성하는 자세도 필요하지만, 그에 비해 훨씬 더 필요한 것은 '문화시민'(cultural citizens ; Kulturmensch)으로서, 서로 다른 개성과 목표지향 그리고 가치체계를 지닌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인간들이 함께

27) 최병학,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新지방문화' 관련 교과편성 검토결과, 앞의 연구보고서, 5쪽.

더불어 다같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기술과 능력을 기르는 것이며, 이것이 사회변동의 상징성이고 역동성(dynamics)의 핵심기반인 것이다.[28]

한편, 자연환경에 대한 태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자연은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과 물질을 제공해 왔으며 우리는 그러한 자연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경쟁적으로 자연을 혹사시켜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후손에게서 미리 빌려온 자연을 깨끗하게 보전하여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속가능개발'은 생태적으로 건강할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수용가능한'(culturally acceptable) 발전, 즉 생태환경과 문화환경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29]

아울러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의 지혜로운 조화란 무조건적인 서양의 시스템에의 강요적 적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세계의 시스템에 창조적 변화의 작업을 통해 국수주의적·폐쇄적 전통주의자들과 차별화가 가능한 열려진 민족문화의식, 미래지향적 전통문화의식이 요구된다.[30]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괴테가 말한 "가장 민족적인 것이 세계적이다" 라는 言明이 주는 시사점은 참으로 크다 할 것이다.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과 행정의 관계를 정위치로 돌려놓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양식을 과연 바람직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해 우리는 新지방문화의 창조라는 점에서 지방 차원의 지역정체성 재발견, 자연사랑 및 환경보전운동,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21세기 충남의 新지방문화 창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열린충남

28) Pitirim Alexandrovitch Sorokin, *Social and Cultural Dynamics : A Study of Change in Major Systems of Art, Truth, Ethics, Law, and Social Relationships* (New Brunswick, New Jersey : Transanction Inc., 1985), pp.2~19 참조.

29) 전경수, "환경지속발전과 환경구속적 미래기업," 이정전(편),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서울 : 박영사, 1995), vii쪽 / 121~127쪽.

30) 이광규, 한민족의 세계사적 소명(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45~54쪽.

참 고 문 헌

김귀곤, "미래의 국토환경," **토지연구**, 한국토지개발공사(1992년 1~2월호).

_____, **생태도시계획론**(서울: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3).

김번웅, "행정서비스의 혁명:주요국의 행정개혁의 비교적 맥락," 21세기 한국행정론, 유종해 박사 정년기념 논문집(서울:박영사, 1996).

김정길,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에세이 新목민심서**(서울:베스트셀러, 1998).

레스터 브라운, 크리스토퍼 플라빈, 산드라 포스텔, "살기에 적합한 세상", **세계로 열린창**(유네스코, 1992).

신용석 외(공역) / Michael Hough, **도시경관·생태론**(서울:기문당, 1991).

신현덕, **환경정책론**(서울:동화기술공사, 1992).

연기영(역) / 권터 뷔르텔레(편), **21세기의 도전과 전략**(서울:도서출판 밀알, 1996).

이경재, **우리땅 곳곳 아프지 않은 곳 없네**(서울:도서출판 푸른산, 1994).

이광규, **한민족의 세계사적 소명**(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전경수, "환경지속발전과 환경구속적 미래기업," 이정전(편),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서울:박영사, 1995).

차하순(편), **史觀이란 무엇인가**(서울:도서출판 청람, 1986).

최병학, "2000년대 진입을 위한 충남도정의 행정혁신," **열린충남**, 제4권 4호, 충남발전연구원(1998년 가을호).

_____, **새천년을 이끌어가는 충청남도 수요자중심 행정체제 수립방안 연구**, 현안과제 최종 연구보고서, 충남발전연구원(1999. 6).

_____,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新지방문화' 관련 교과편성 검토결과**, 1차 및 최종 연구보고서, 충남발전연구원(1999. 9).

_____, "지방문화의 지역주의적 영향분석 : 지방문화의 제도적 자율성 결정범위를 중심으로", **우암논총**, 제7집, 청주대학교 대학원(1991. 3).

최병학·최창희, "자치시대에 있어서의 지방문화의 위상 탐색:관치문화로부터의 脫却과 자치문화로의 전환논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9집,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1994. 12).

최상철, "지방의 시대와 지방개발," 한국사회과학연구소(편), **지방의 재발견**(서울:민음사, 1985).

충남발전연구원, **충남 古都의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 추진계획(안)**(1999. 9).

충청남도, 新지식공무원 발굴·포상계획(1999. 3).

_____, 21세기 지식행정 세미나(1999. 6. 10).

_____, 민선 2기 1주년 기념 도지사 기자회견 자료집(1999. 6. 24).

_____, 2000년도 시책구상회의 자료집(1999. 10).

충청남도연구단, 제2의 건국운동의 실천방향과 과제 연구 : 新지방문화 창조를 위한 충남의 21C 문화시민운동을 중심으로, 제36회 지방행정 연수대회 제출논문(1999. 11. 4~5).

Banfield, Edward and Wilson, James, *City Politics* (New York : Vintage Books, 1983).

Batelmus, P., *Environmental. Growth, and Development* (London : Routledge, 1994).

Melson, G. F., *Environment : An Ecosystem Perspective* (New York : Burgess Publishing Co., 1980).

Osborne, David and Gaebler, Ted, *Reinventing Government : How the Entreprenurial Spirit is Transforming the Public Sector* (New York : A Plume Book, 1993).

Sorokin, Pitirim Alexandrovitch, *Social and Cultural Dynamics : A Study of Change in Major Systems of Art, Truth, Ethics, Law, and Social Relationships* (New Brunswick, New Jersey : Transanction Inc., 1985).

Tuan, Yi-Fu, "Geopiety : A Theme in Man's Attachment to Nature and to Place," D. Lowenthal(ed.), *Geopieties of the Mind* (London : Oxford Univ. Press, 1975).

Wright, J. K., *Human Nature in Geography* (Harvard Univ. Press, 1966).

충남 제조업의 구조변화와 전망

이 종 상 (李 鍾 相)
충남발전연구원 산업경제팀장

Ⅰ. 머리말

변화할당분석은 국가의 경제활동에 변화가 있을 때, 개별지역의 경제활동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개발되었다. 이 기법은 지역경제 차원에서 일정기간동안 일정지역의 특정산업에서 발생된 경제활동의 변화가 어떤 요소들의 영향에 의해서 기인되었는가를 분석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일정기간동안 특정지역의 경제성장과 변화를 예측하는데도 사용되고 있다.

변화할당분석은 간편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시계열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두 시점의 데이터만 있으면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실업에 대한 고려가 없고, 또한 기술적이어서 변화량과 상태에 대하여 설명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1].

특히 지역 산업은 국가산업에 비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구조가 빨리 변화하고 매년 변동폭도 매우 크다. 따라서 소지역을 단위로 하여 분석하는 경우는 종사자수 또는 총생산액 등의 변화가 매우 심하여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분석결과는 매우 다르고 불안정하게 된다.

또한 미래를 예측하는 경우에는 특히 분석에서 선택한 기준 연도에 따라서 예측값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변화할당분석이 가지고 있는 분석시점의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

1) 강병주, p. 91 참조.

한 방법으로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또한 변화할당분석을 미래 예측에 사용하는 경우의 문제점과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2차계획법을 이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충청남도의 제조업을 산업중분류기준으로 1991~1997년까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해서 기존의 방법과 새로 제시한 방법의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제Ⅱ장에서는 변화할당분석의 이론적 배경과 사용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Ⅲ장에서는 변화할당분석을 이용하여 충남 제조업의 변화를 살펴보고, 제Ⅳ장에서는 충남의 제조업을 전망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Ⅴ장에서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변화할당분석은 1942년 크리머(Daniel B. Creamer)에 의해서 최초로 개발되어, 1951년 영국의 래서(C. C. B. Lesser)[2] 그 후 던(Edgar S. Dunn, Jr.)[3]과 펄로프(Harvey S. Perloff)[4]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다.

변화할당분석에서 지역산업의 성장효과를 전국경제성장효과(national growth effect), 산업구조효과(industrial mix effect), 그리고 지역할당효과(regional share effect)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j지역 i산업의 성장 시차변화는 $E_{ij}(t)-E_{ij}(0) = NGE_{ij}+ME_{ij}+RSE_{ij}$ 이 된다.

즉, 성장시차변화 $= E_{ij}(t)-E_{ij}(0)$

$$= E_{ij}(0)\times\left[\frac{E(t)}{E(0)}-\frac{E(0)}{E(0)}\right]+E_{ij}(0)\times\left[\frac{E_i(t)}{E_i(0)}-\frac{E(t)}{E(0)}\right]+E_{ij}(0)\times\left[\frac{E_{ij}(t)}{E_{ij}(0)}-\frac{E_i(t)}{E_i(0)}\right]$$

여기서 i = 산업, j = 지역, E는 취업자수를 의미하고, (0)은 기준년도 (t)는 비교년도를 의미한다.

변화할당분석은 지역의 성장예측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예측모형은 던(Dunn),[5] 아쉬비(L.D. Ashby)[6] 그리고 비우드(M. Beaud)[7] 등이 제안하였다. 변화할당분석을 이용한 예측모형은 앞으로의 성장요인이 과거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Lesser, C.C.V.

3) Dunn, Edgar S., Jr., pp.97~109.

4) Perloff, Harvey S., Dunn E. S., Jr., Lampard E. E. and Muth, R. F., pp.63~74.

5) Dunn, E.S., Jr., Ibid, pp. 97~112.

6) Ashby, L.D.,"Regional Projections in a National Setting," Regional Economics Division, Department of Commerce, No.66143,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8.

7) Beaud M.,"Analse Regionale Structurale et Planfication Regionale," Reveue Economique, 17(1966), pp.264~287.

$$E_{ij}(tt) = E_{ij}(t) + \Delta E_{ij}(tt)$$

예측을 위한 기준년도(t)와 목표년도(tt)사이의 변화량 $\Delta E_{ij}(tt)$

$$\Delta E_{ij}(tt) = E_{ij}(t)\left(\frac{E(tt)}{E(t)} - 1\right) + E_{ij}(t)\left\{\frac{E_i(tt)}{E_i(t)} - \frac{E(tt)}{E(t)}\right\} + E_{ij}(t)\left\{\frac{E_{ij}(tt)}{E_{ij}(t)} - \frac{E_i(tt)}{E_i(t)}\right\}$$

위 식을 다시 정리하면,

$$E_{ij}(tt) = E_{ij}(t) + E_{ij}(t)\left\{\frac{E(tt)}{E(t)} - 1\right\} + E_{ij}(t)\left\{\frac{E_i(tt)}{E_i(t)} - \frac{E(tt)}{E(t)}\right\} + a_{ij}E_{ij}(0)\left\{\frac{E_{ij}(t)}{E_{ij}(0)} - \frac{E_i(t)}{E_i(0)}\right\}$$

와 같은데, 위 식의 2번째 항과 3번째 항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_{ij}(tt) = E_{ij}(t) + E_{ij}(t)\left\{\frac{E(tt)}{E(t)} - 1\right\} + a_{ij}E_{ij}(0)\left\{\frac{E_{ij}(t)}{E_{ij}(0)} - \frac{E_i(t)}{E_i(0)}\right\}$$

위 식에서 오른쪽의 1, 2번째 항은 E(tt)의 선연장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3번째항 a_{ij}는 성장률을 추정한 값이다.

지역성장 변화할당분석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지역성장 분석모형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1) 지역성장의 횡적인 그리고 종적인 차원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다. (2) 가장 저렴한 분석방법의 하나이다. (3) 단 2개 시점에서의 자료만 확보되면 이용 가능하다.

그러나 이 분석은 이론이라기보다는 항등식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경쟁요인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의 산업은 소수 기업체의 이입출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기준년도와 비교년도의 설정에 따라서 그 값을 매우 달리하고 있으며, 지역성장을 나타내는 지표의 선정에 따라서 또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Ⅲ. 충청남도의 제조업의 변화할당분석

1. 충청남도의 제조업의 현황

충청남도의 제조업은 1997년 현재 종사자수는 117,657명으로 전국의 4.36%, 생산액은 24,126,728백만원으로 전국의 5.55%를 점하고 있다. 부문별 종사자수는 음식료품이 전체 제조업의 11.6%, 생산액기준으로는 화합물 및 화학제품이 13.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당 생산액은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가 3,000백만원으로 제일 많고, 가구 및 기타가 89백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입지계수로 본 충청남도의 특화부문은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비금속광물제품(1.8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1.77), 음식료품(1.69)순으로 높았으며, 생산액 기준으로는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2.24),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1.81)순으

로 높았다. 1991~1997간의 제조업의 년평균 성장률은 전

〈표 1〉 충청남도 제조업의 일반현황(인, 백만원)

구 분	1997		생산액/	입지계수		충남/전국×100		산업/충남전체×100		년평균성장율	
	종사자수	생산액	종사자	종사자수	생산액	종사자수	생산액	종사자수	생산액	종사자수	생산액
계	117,657	24,126,728	205	1.00	1.00	4.36	5.55	100.00	100.00	6.71	20.19
음식료품	13,650	2,749,952	201	1.69	1.62	7.35	8.98	11.60	11.40	5.08	11.12
담배	0	0	-	0.00	0.00	0.00	0.00	0.00	0.00	-56.33	-104.44
섬유제품	7,495	916,172	122	0.77	0.82	3.36	4.55	6.37	3.80	-8.09	11.36
의복 및 모피제품	2,081	121,516	58	0.29	0.22	1.28	1.20	1.77	0.50	-8.63	6.86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1,115	139,138	125	0.45	0.49	1.97	2.70	0.95	0.58	-3.19	-1.00
목재 및 나무제품	75810	2,0171	35	0.57	0.58	2.50	3.21	0.64	0.42	-0.72	12.87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4,738	1,253,149	264	1.77	2.24	7.70	12.43	4.03	5.19	4.81	20.31
출판,인쇄 및기록매체복제업	1,62713	7,21884	0.42	0.31	1.84	1.74	1.38	0.57	4.071	5.0	0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핵연료	980	2,939,875	3,000	1.54	1.81	6.691	0.04	0.831	2.19	0.382	1.02
화합물 및 화학제품	10,372	3,169,259	306	1.46	1.27	6.38	7.05	8.82	13.14	4.64	18.5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7,167	937,264	131	1.29	1.29	5.63	7.15	6.09	3.88	15.10	22.59
비금속광물제품	8,782	1,091,267	124	1.80	1.16	7.85	6.43	7.46	4.52	-4.89	4.51
제1차금속산업	5,229	1,588,264	304	1.07	0.81	4.68	4.52	4.44	6.58	21.39	31.70
조립금속제품	7,617	1,120,879	147	0.95	1.03	4.16	5.72	6.47	4.65	15.92	29.15
달리분류되지않은 기계 및장비	12,835	1,986,748	155	1.10	1.19	4.79	6.59	10.91	8.23	20.04	35.51
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계	1,187	291,491	246	0.99	1.19	4.34	6.60	1.01	1.21	21.68	30.52
달리분류되지않은 전기기계및 전기변환	4,441	573,702	129	0.82	0.68	3.57	3.74	3.77	2.38	7.78	18.11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2,555	2,151,996	171	1.03	0.68	4.47	3.75	10.67	8.92	12.35	30.0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시계	2,507	286,405	114	1.31	1.25	5.72	6.93	2.13	1.19	12.46	36.79
자동차 및 트레일러	9,813	2,307,000	235	1.03	0.97	4.48	5.38	8.34	9.56	28.24	41.48
기타 운송장비	605	64,063	106	0.12	0.05	0.53	0.29	0.51	0.27	16.78	25.90
가구 및 기타	2,041	180,656	89	0.51	0.45	2.21	2.47	1.73	0.75	2.58	13.62
재생재료가공처리업	62	18,697	302	0.41	0.51	1.79	2.84	0.05	0.08	18.77	78.97

체 6.71%이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28.4%), 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계(21.68%), 제1차금속산업(21.39%)순으로 높았으며, 담배, 의복 및 모피제품, 섬유제품,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등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충청남도의 변화할당분석

충청남도의 제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1991~1997년, 1992~1997년, 1991~1996년 등 기준년도와 비교년도를 달리하여 변이할당분석을 실시하였다.

1991~1997년의 전체변화는 37,714명으로 44.0%, 1992~1997년의 전체변화는 28,460명으로 37.5%, 1991~1996년은 40,555명으로 40.9%변화하였으며, 그 결과 변화할당분석의 대상 년도가 1년만 달라도 각 산업부문별 성장효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일례로 비금속광물제품의 경우에 1991~1996

〈표 2〉 충청남도 제조업의 변화할당분석(중분류)

산 업 부 문	1991 - 1997				1992 - 1997				1991 - 1996			
	전체	국가성장	산업구조	지역할당	전체	국가성장	산업구조	지역할당	전체	국가성장	산업구조	지역할당
합 계	36,714	-	-	-	28,460	-	-	-	40,555	-	-	-
음식료품	3,522	-762	32	4,252	2,419	-412	-206	3,038	3,924	-71	-52	4,047
담배	-192	-14	-33	-144	0	0	0	-	-192	-1	-53	-137
섬유제품	-4,794	-924	-3,286	-583	-4,724	-449	-3,331	-944	-3,467	-86	-2,909	-472
의복 및 모피제품	-1,821	-294	-595	-932	-1,079	-116	-445	518	-1,315	-27	-519	-768
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	-86	-90	-733	737	-329	-53	-817	541	-90	-8	-728	646
목재 및 나무제품	-49	-61	-172	184	-94	-31	-164	102	69	-6	-95	169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943	-285	74	1,154	750	-146	-32	928	1,237	-26	144	1,119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437	-90	313	213	58	-58	234	-118	540	-8	313	236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10	-73	547	-464	-127	-41	566	-652	156	-7	243	-80
화합물 및 화학제품	2,476	-594	1,683	1,386	1,582	-323	1,348	557	2,193	-55	462	1,786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3,892	-246	296	3,842	3,608	-131	260	3,479	4,431	-23	507	3,947
비금속광물제품	-3,170	-899	-1,362	-909	-4,310	-481	-2,010	-1,819	-930	-83	-985	138
제1차금속산업	3,311	-144	4	3,452	3,561	-61	1	3,621	2,848	-13	-46	2,907
조립금속제품	4,360	-245	860	3,745	3,753	-142	941	2,954	5,302	-23	1,074	4,251
달리분류되지않은 기계 및 장비	8,943	-293	287	8,949	7,689	-189	356	7,522	8,389	-27	566	7,850

산 업 부 문	1991 - 1997				1992 - 1997				1991 - 1996			
	전체	국가성장	산업구조	지역할당	전체	국가성장	산업구조	지역할당	전체	국가성장	산업구조	지역할당
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계	892	-22	46	868	625	-21	180	466	852	-2	76	778
기타 운송장비	1,381	-230	699	912	279	-153	606	174	3,956	-21	936	3,041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6,222	-476	640	6,059	5,588	-256	798	5,046	5,673	-44	-7	5,724
기타 운송장비	1,447	-80	42	1,485	1,458	-39	79	1,417	777	-7	113	672
기타 운송장비	8,256	-117	425	7,948	6,989	-104	646	6,446	5,800	-11	463	5,348
기타 운송장비	422	-14	135	301	328	-10	214	124	257	-1	67	191
가구 및 기타	267	-133	-418	819	417	-60	-320	797	95	-12	-365	473
재생재료가공처리업	45	-1	34	12	19	-2	84	-64	50	0	25	25

자료 : 통계청, 각년도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전국편, 지역편(충청남도)

년의 종업원수의 총변화는 -930명, 1992~1997년은 -4,310명으로 4.6배의 차이로 보이고 있으며, 전자의 경우에는 지역할당이 138명인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1,819명으로 값의 크기 뿐만 아니라 부호도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3. 추세치를 이용한 충청남도의 제조업의 변화 할당분석

보다 안정적인 변화할당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 부문별로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년도의 추정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991~1997년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부문별 종사자수를 종속변수, 연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울기, 절편, R^2, t-값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선형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1991~1997년간의 종사자수를 추계하여 1991년과 1997년의 기대치를 이용하여 충청남도의 제조업 산업중분류를 대상으로 변화할당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1991-1997년 사이에 충청남도의 제조업의 종사자수는 83,448(80,943)명[8]에서 124,026(117,657)명으로 40,578(36,714)명 증가하였다. 증가분에 대한 산업별 구성비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9,385명(23.1%), 자동차 및 트레일러 7,663명(18.9%),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6,786명(16.7%) 순으로 많았으며, 섬유제품 4,817명, 비금속광물제품 3191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역의 특정산업이 국가의 전체산업의 성장

8) ( )은 실제치임.

〈표 3〉 산업부문별 선형회귀식 추정결과

산 업 부 문	전 국					충 청 남 도				
	기울기	t-값	절 편	t-값	R^2	기울기	t-값	절 편	t-값	R^2
합 계	-14,263	-0.823	31,309,669	0.906	0.1194	6,763	9.001	-13,381,543	-8.932	0.9419
음식료품	-1,177	-0.995	2,545,686	1.079	0.1652	616	3.664	-1,215,689	-3.626	0.7286
담배	-323	-5.713	649,094	5.763	0.8672	-21	-1.732	41,047	1.733	0.3750
섬유제품	-18,509	-9.615	37,198,831	9.691	0.9487	-803	-9.961	1,610,859	10.023	0.9520
의복 및 모피제품	-6,700	-3.501	13,555,233	3.552	0.7103	-248	-4.931	497,518	4.959	0.8294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19,465	-9.167	38,919,480	9.192	0.9438	-39	-1.624	79,289	1.650	0.3454
목재 및 나무제품	-1,551	-2.615	3,132,237	2.648	0.5776	-6	-0.431	12,401	0.463	0.0358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54	-0.099	174,020	0.160	0.0020	210	4.269	-14,291	-4.223	0.7847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631	2.492	-5,158,175	-2.450	0.5539	59	1.662	-115,232	-1.639	0.3559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765	5.216	-1,514,098	-5.177	0.8448	4	0.243	-6,612	-0.211	0.0117
화합물 및 화학제품	2,570	3.857	-4,972,425	-3.743	0.7484	428	5.331	-844,429	-5.272	0.850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1,928	1.274	-3,710,491	-1.230	0.2450	770	7.000	-1,529,726	-6.976	0.9074
비금속광물제품	-3,930	-3.773	7,967,149	3.836	0.7400	-532	-2.738	1,072,094	2.769	0.6000
제1차금속산업	-689	-1.092	1,491,326	1.186	0.1927	670	5.335	-1,332,162	-5.322	0.8506
조립금속제품	7,683	3.328	15,142,504	-3.289	0.6889	868	7.740	-1,725,143	-.714	0.9230
달리분류되지않은 기계 및 장비	4,047	1.239	-7,787,481	-1.196	0.2349	1,564	13.794	-3,110,021	-13.754	0.9744
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계	1,107	1.782	-2,179,603	-1.759	0.3883	148	4.667	-93,917	-4.656	0.8133
달리분류되지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	4,109	2.875	-8,069,085	-2.831	0.6231	355	1.345	703,120	-1.335	0.2657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2,293	1.295	-4,304,182	-1.219	0.2513	1,131	8.721	-245,730	-8.684	0.938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510	0.847	-970,365	-0.808	0.1254	197	2.990	-390,522	-2.977	0.64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8,604	4.926	-16,950,648	-4.867	0.8292	1,277	7.855	-2,541,924	-7.840	0.9250
기타 운송장비	7,391	7.014	-14,653,154	-6.974	0.9077	60	6.722	-18,531	-6.700	0.9004
가구 및 기타	-5,888	-7.135	11,855,374	7.205	0.9106	48	1.046	-3,295	-1.024	0.1759
재생재료가공처리업	386	11.670	-766,551	-11.63	0.9646	7	2.920	-14,407	-2.910	0.6303

<표 4> 충청남도 제조업의 변화할당분석결과(중분류)

산 업 부 문	전 체		국 가 성 장		산 업 구 조		지 역 할 당	
	값	구성비	값	기여도	값	기여도	값	기여도
합계	40,578	100.00	-2,453	- -	0	-	43,030	-
음식료품	3,697	9.11	-323	-8.73	-62	-1.68	4,082	110.41
담배	-123	-0.30	-3	2.12	-23	18.93	-97	78.95
섬유제품	-4,817	-11.87	-366	7.59	-3,608	74.91	-843	17.50
의복 및 모피제품	-1,489	-3.67	-104	6.98	-556	37.35	-829	55.66
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	-235	-0.58	-40	16.96	-927	394.61	732	-311.57
목재 및 나무제품	-35	-0.09	-26	74.68	-161	462.98	152	-437.66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1,260	3.11	-112	-8.91	93	7.42	1,279	101.49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352	0.87	-43	-12.16	332	94.31	63	17.85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23	0.06	-29	-127.70	532	2322.16	-480	-2094.46
화합물 및 화학제품	2,569	6.33	-237	-9.24	1,104	42.98	1,702	66.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4,619	11.38	-84	-1.81	341	7.39	4,361	94.42
비금속광물제품	-3,191	-7.86	-391	12.26	-1,797	56.33	-1,002	31.41
제1차금속산업	4,018	9.90	-34	-0.85	-6	-0.15	4,059	101.01
조립금속제품	5,209	12.84	-96	-1.84	1,063	20.41	4,241	81.43
달리분류되지않은 기계 및 장비	9,385	23.13	-123	-1.31	500	5.32	9,008	95.99
사무,계산 및 회계용기계	887	2.18	-7	-0.84	76	8.52	818	92.32
달리분류되지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	2,132	5.25	-127	-5.96	1,083	50.79	1,176	55.18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6,786	16.72	-183	-2.70	512	7.54	6,458	95.16
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180	2.91	-33	-2.83	110	9.35	1,103	93.48
자동차 및 트레일러	7,663	18.89	-30	-0.39	318	4.15	7,375	96.23
기타 운송장비	358	0.88	-6	-1.79	162	45.37	202	56.42
가구 및 기타	287	0.71	-54	-18.93	-437	-152.42	778	271.35
재생재료가공처리업	44	0.11	-1	-1.85	66	150.62	-21	-48.77

*구성비=각부문의 값/전체의 값×100, **기여도=각부문별 요인의 값/전체의 값×100

에 의해서 받는 영향을 나타내는 국가성장 효과는 1991~1997년 사이에 전국의 총고용 증가율이 -0.0294로 모든 산업부문에 있어서 1991년도의 종사자의 2.94%씩 감소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한 지역의 특정산업이 국가의 전체산업 가운데 i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는 산업구조효과의 각 부문별 계수는 재생재료가공처리업 2.39, 기타운송장비 0.75, 조립금속제품 0.33, 자동차 및 트레일러 0.32, 달리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 0.25순으로 높아 다른 제조업에 비해서 전국의 성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0.68, 섬유제품 -0.29, 담배-0.26, 가구 및 기타 -0.24로 다른 제조업에 비해서 전국의 성장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산업구조와 지역할당 계수

산 업 부 문	산 업 구 조	지 역 할 당
1. 음식료품	-0.0057	0.3717
2. 담배	0.2621	-1.0931
3. 섬유제품	-0.2900	-0.0678
4. 의복 및 모피제품	-0.1572	-0.2343
5.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0.6839	0.5400
6. 목재 및 나무제품	-0.1822	0.1722
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0.0245	0.3348
8.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0.2279	0.0431
9.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0.5344	-0.4820
10. 화합물 및 화학제품	0.1368	0.2108
1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0.1199	1.5321
12. 비금속광물제품	-0.1351	-0.0753
13. 제1차금속산업	-0.0052	3.4740
14. 조립금속제품	0.3263	1.3018
15. 달리 분류되지않은 기계 및 장비(7)	0.1193	2.1514
16.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0.2981	3.2308
17. 달리분류되지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	0.2503	0.2720
18.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0.0821	1.0360

산 업 부 문	산 업 구 조	지 역 할 당
1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0.0971	0.9710
20. 자동차 및 트레일러	0.3152	7.3021
21. 기타 운송장비	0.7450	0.9265
22. 가구 및 기타	-0.2366	0.4213
23. 재생재료가공처리업	2.3918	-0.7744

한지역의 특정산업이 국가전체의 i산업 가운데 해당지역의 i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각 산업별 지역할당계수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7.30, 제1차금속산업 3.47, 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계 3.23, 등의 산업부분이 타지역에 비해서 많이 성장했으며, 담배 -1.09, 재생재료가공처리업 -0.77,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0.48로 타지역에 비해서 성장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 충청남도 제조업의 전망

1991~1997년까지의 시계열자료를 근거로 하여 변화할당분석과 2차계획법에 의해서 충청남도 제조업 부문의 종사자수를 1997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2005년을 예측하여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1. 변화할당 방법에 의한 예측

변화할당방법에 의한 예측은 모든 수치가 1991~1997년의 경향을 그대로 따른다는 전제하에서 아래의 공식을 사용하였다.

$$E_{ij}(tt) = E_{ij}(t) + E_{ij}(t)\left\{\frac{E(tt)}{E(t)} - 1\right\} + E_{ij}(t)\left\{\frac{E_i(tt)}{E_i(t)} - \frac{E(tt)}{E(t)}\right\} + E_{ij}(t)\left\{\frac{E_{ij}(t)}{E_{ij}(0)} - \frac{E_i(t)}{E_i(0)}\right\}$$

여기서 (0)=1991년, (t)=1997년, (tt)=2005년이다.

〈표 6〉 변화할당분석에 의한 종사자수 예측치

산 업 부 문	2005년(명)	1997년	2005년 예측치			
			전 체	경제성장	산업구조	지역할당
합 계	178,129	124,026	54,103	-5,007	0	59,111
음식료품	19,606	14,677	4,929	-593	-118	5,640
담 배	-199	-34	-165	1	17	-183
섬유제품	1,202	7,625	-6,423	-308	-4,463	-1,652

산 업 부 문	2005년(명)	1997년	2005년 예측치			
			전 체	경제성장	산업구조	지역할당
의복 및 모피제품	63	2,048	-1,985	-83	-544	-1,358
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	807	1,120	-313	-45	-3,671	3,403
목재 및 나무제품	801	847	-46	-34	-269	257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6,759	5,079	1,680	-205	172	1,714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276	1,807	469	-73	472	70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1,050	1,019	31	-41	497	-425
화합물 및 화학제품	14,069	10,644	3,425	-430	1,806	2,04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13,623	7,465	6,158	-301	1,128	5,332
비금속광물제품	5,863	10,117	-4,254	-408	-2,247	-1,599
제1차금속산업	10,544	5,186	5,357	-209	-39	5,605
조립금속제품	15,411	8,467	6,945	-342	2,926	4,360
달리분류되지않은 기계 및 장비	26,085	13,572	12,513	-548	2,041	11,020
사무,계산 및 회계용기계	2,322	1,140	1,182	-46	368	860
달리분류되지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	9,300	6,457	2,843	-261	1,819	1,285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22,069	13,020	9,049	-526	1,395	8,179
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3,890	2,317	1,574	-94	289	1,378
자동차 및 트레일러	18,891	8,673	10,218	-350	2,921	7,647
기타 운송장비	1,053	576	477	-23	343	157
가구 및 기타	2,516	2,134	382	-86	-945	1,413
재생재료가공처리업	129	71	58	-3	69	-8

1997~2005년까지의 종사자수는 54,103명이 증가하여 2005년의 총 종사자수는 178,129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달리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12,513명, 자동차및 트레일러 10,218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6,158명 순으로 종사자수가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과거의 추세치를 그대로 사용하고있기 때문에 담배의 경우에는 2005년도에 -199명으로 기대치가 매우 비현실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거의 추세치를 반영하면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2. 과거추세를 반영한 수리계획법에 의한 예측

전체는 부분보다 변화가 안정적이라는 전제하에서, 2005년의 전산업의 종사자수와 각 산업의 종사자수를 년평균 증가율을 이용하여 예측한 후, 추계한 각부문의 종사자수 합계를 전산업의 추계치와 일치시켰다.

전산업의 년평균 성장률은 6.71%로 2005년까지 8년간에 68.16%증가하여 197,856명 이었으며, 같은 방법으로 각 산업부문별 종사자 수를 추계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2005년도의 제조업체 각부문의 종사수 합계는 313,241명으로 전부문의 추계값 보다 많기 때문에 2차계획법을 이용하여 각부문의 종사자수의 합계를 전 종사자수의 합계와 일치시켰다.

2차 계획법의 목적함수는 각 산업의 장래 성장률을 과거의 추세치를 이용하여 추계한 성장률의 예측치로 간주하고 각 산업의 성장률을 정보이론[9]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량화하여 최소화의 문제로 전환시켰다.

$$I(\hat{E}:\ E)=\sum_{i=1}^{n} E_i \log \frac{\hat{E}_i}{E_i}$$

(E : 2005년 잠정추정 고용자수,
$\hat{E}$ 2005년의 고용자수)

위 식을 n=2까지 테일러 전개를 하면[10]

$$I(\hat{E}:\ E)=\frac{1}{2}\sum_{i=1}^{n}\frac{(\hat{E}-E_i)^2}{\hat{E}_i}$$

이 되는데, 2차계획에서 목적함수는 I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제약식은 ① 예측한 각 부문의 합계는 전체 부문의 예측치와 같다. ② $E_i > \hat{E}_i$ (E: 2005년 잠정추정 고용자수, $\hat{E}$: : 2005년의 기대고용자수), ③ 만약 $E_i > E_j$ $(i \neq j)$ 이면, $\hat{E}_i > \hat{E}_j$ 인 관계가 성립한다.

〈표 7〉 2차계획법에 의한 충남의 제조업의 전망

부 문	1,997년 종사자수	년평균 성장율	2005년까지 성장율	2005년잠정 종사자수	2005년까지 수정성장율	2005년 종사자수
합 계	124,026	0.0671	1.6816	208,565	1.6816	208,565
음식료품	14,677	0.0508	1.4862	21,813	0.9387	14,240
담배	-34	-0.6376	0.0003	0	0.0000	0
섬유제품	7,625	-0.0809	0.5091	3,882	0.3216	2,534
의복 및 모피제품	2,048	-0.0863	0.4858	995	0.3069	649

9) Theil(111), p. 참조

10) 별첨 2참조

부 문	1,997년 종사자수	년평균 성장율	2005년까지 성장율	2005년잠정 종사자수	2005년까지 수정성장율(%)	2005년 종사자수
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	1,120	-0.0319	0.7718	865	0.4875	564
목재 및 나무제품	847	-0.0072	0.9440	800	0.5963	522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5,079	0.0481	1.4564	7,398	0.9199	4,829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07	0.0407	1.3755	2,485	0.8688	1,622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1,019	0.0038	1.0305	1,050	0.6509	686
화합물 및 화학제품	10,644	0.0464	1.4378	15,303	0.9082	9,99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7,465	0.1510	3.0813	23,001	1.9463	15,016
비금속광물제품	10,117	-0.0489	0.6695	6,773	0.4229	4,422
제1차금속산업	5,186	0.2139	4.7146	24,451	2.9779	15,962
조립금속제품	8,467	0.1592	3.2596	27,598	2.0589	18,016
달리분류되지않은 기계 및 장비	13,572	0.2004	4.3121	58,524	2.7237	38,205
사무,계산 및 회계용기계	1,140	0.2168	4.8056	5,478	3.0354	3,576
달리분류되지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	6,457	0.0778	1.8205	11,755	1.1500	7,674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13,020	0.1235	2.5384	33,050	1.6034	21,575
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2,317	0.1246	2.5590	5,928	1.6164	3,870
자동차 및 트레일러	8,673	0.2824	7.3153	63,447	4.6207	41,419
기타 운송장비	576	0.1678	3.4587	1,991	2.1847	1,300
가구 및 기타	2,134	0.0258	1.2264	2,616	0.7746	1,708
재생재료가공처리업	71	0.1877	3.9583	281	2.5002	183

실증분석에 있어서 계산은 LINGO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2005년의 충청남도의 제조업 종사자수의 예측치는 208,565명이며, 이중 자동차 및 트레일러 41,419명으로 제일 많고,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38,205명, 음식료품 14,24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V. 맺음말

변화할당 분석기법은 계산이 간단하고, 두 시점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지역 변화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분석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데이터는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년도와 비교년도를 달리 설정함으로

써 그 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데이타가 가지고 있는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1991~1997년의 부문별 종사자수를 선형회귀식으로 추정하여 충청남도의 제조업체를 분석하였다. 2005년도의 부문별 제조업 종사자의 예측결과「-」값을 갖는 경우도 있었으며, 경제성장, 산업구조, 지역할당 등이 모두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8년후의 예측치가 1997년의 3.08%에 불과한 산업부문도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매우 결여되어 예측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보 이론을 기초로 2차계획법으로 정식화하여 성장률을 계산한 후 제조업 각 부문의 2005년의 종사자수를 예측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의 경제분석, 인구분석 등에서 전체와 부분이 변화하는 경우에 예측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2차계획법으로 장래를 예측하는 경우에 목적함수는 여러가지 형태로 설정할 수 있다. 기존의 자료를 이용하여 충청남도에 가장 알맞은 목적함수를 찾아낼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열린충남

참 고 문 헌

1. 강병주, 손희준, 지역경제분석기법 및 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2.
2. 홍기용, 지역경제론 , 박영사, 1994.
3. 최재선, 지역경제론, 법문사, 1991.
3. Ashby, L.D., "Regional Projections in a National Setting", *Regional Economics Division, Department of Commerce*, No.66143,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8.
4. Beaud M.,"Analse Regionale Structurale et Planfication Regionale", *Reveue Economique*, 17, 1966, pp.264-287.
5. Dunn, Edgar S., Jr.,"A Statistical and Analytical Technique for Regional Analysis", *Papers and Proceedings of the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ol.6, 1960.
6. Lesser, C.C.V., *Some Aspects of the Industial Structure of Scotland*, University of Glasgow, Deparment of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1951.
7. Perloff, Harvey S., Dunn E. S., Jr., Lampard E. E. and Muth, R. F., *Regions, Resources, and Economic Growth*, Lincoln, Neb.,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60, pp.63-74.
8. Theil, H., Principles of Econometrics, John Wiley & sons, Inc., 1971.

별첨 1)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각 산업의 취업자수의 합계임으로

$$E_i = E_{i1} + E_{i2} + \cdots + E_{ip}$$

의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선형회귀로 추정한 값도 $E_i = E_{i1} + E_{i2} + \cdots + E_{ip}$ 과 같은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다음에서와 같이 위 식이 성립한다.

각 산업부문별 취업자수의 추정한 값은 다음과 같다.

$$\widehat{E_{ij}} = b_j Y_i + a_{ij}$$

여기서 회귀식의 계수는

$$b_j = \frac{\sum(Y - \overline{Y})(E_j - \overline{E_j})}{(Y - \overline{Y})^2},$$

$$a_j = \overline{E} - \frac{\sum(Y - \overline{Y})(E_j - \overline{E_j})}{(Y - \overline{Y})^2}\ \overline{Y}$$

따라서 전체산업의 추정치는

$$\widehat{E_i} = \left(\frac{\sum(Y_i - \overline{Y})(E_i - \overline{E})}{(Y_i - \overline{Y})^2}\right) Y_i +$$

$$\left(\overline{E} - \frac{\sum(Y_i - \overline{Y})(E_i - \overline{E})}{(Y_i - \overline{Y})^2}\ \overline{Y}\right)$$

각 산업의 추정치는

$$\widehat{E_{ij}} = \left(\frac{\sum(Y_i - \overline{Y})(E_{ij} - \overline{E_j})}{(Y_i - \overline{Y})^2}\right) \times Y_i +$$

$$\left(\overline{E_j} - \frac{\sum(Y_i - \overline{Y})(E_j - \overline{E_j})}{(Y_i - \overline{Y})^2} \times \overline{Y}\right)$$

따라서

$$\sum_{j=1}^{p} \widehat{E_{ij}} = \sum_{j=i}^{p} \left[\left(\frac{\sum(Y_i - \overline{Y_i})(E_{ij} - \overline{E_j})}{(Y_i - \overline{Y})^2}\right) Y_i + \left(\overline{E_j} - \frac{\sum(Y_i - \overline{Y})(E_{ij} - \overline{E_j})}{(Y_i - \overline{Y})^2}\ \overline{Y_i}\right)\right]$$

가 된다. 위 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left(\frac{\sum(Y_i - \overline{Y})(E_i - \overline{E})}{(Y_i - \overline{Y})^2}\right) Y_i +$$

$$\left(\overline{E} - \frac{\sum(Y_i - \overline{Y})(E_i - \overline{E})}{(Y_i - \overline{Y})^2}\ \overline{Y}\right)$$

이 되므로

$$\widehat{E_i} = \sum_{j=1}^{p} \widehat{E_{ij}} \quad (i = 1, 2, \cdots, n)$$

별첨 2)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E인 경우의 정보량을 $h(E_i) = \log \frac{1}{E_i}$ 로 정식화하고,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E에서 E로 변화하는 경우 정보량의 차이는 $h(E) - h(\widehat{E})$, 즉, $\log \frac{\widehat{E}}{E_i}$ 고,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widehat{E_i}$가 되기 때문에 기대되는 정보량은

$$I(\widehat{E} \cdot E) = \sum_{i=0}^{N} E_i \log \frac{\widehat{E}}{E_i} = \log \frac{\widehat{E_1}}{E_1}$$

$$+ \log \frac{\widehat{E_2}}{E_2} + \cdots + \log \frac{\widehat{E_n}}{E_n}$$

가 되므로 이것을 여기서 E_i는 사전확률로 이것을 변수로 하여, 사후확률 $\hat{E}_i$에서 테일러의 전개를 하면,

$$I(\hat{E}, E) = \sum_{i=0}^{N} \hat{E}_i \log \frac{\hat{E}_i}{E_i} \approx$$

$$\frac{1}{2} \sum_{i=0}^{N} \hat{E}_i \left(\frac{E_i - \hat{E}_i}{\hat{E}_i} \right)^2 = \frac{1}{2} \sum_{i=0}^{N} \frac{(E_i - \hat{E}_i)^2}{\hat{E}_i}$$

이 된다. 여기서, $\hat{E}_1 \log \frac{\hat{E}_1}{E_1}$ 의 1개의 항에만 국한해서 생각하면,

$\Phi(E_1) = \hat{E}_1 \log \frac{\hat{E}_1}{E_1}$ 의 식을 $E_1^* = \hat{E}_1$ 에서

$n=2$ 까지 전개하면,

$$\Phi(E_1) = \frac{(\hat{E}_1 \log \frac{\hat{E}_1}{E_1})}{0!} (E_1 - \hat{E}_1)^0 =$$

$$(\hat{E}_1 \log \frac{\hat{E}_1}{E_1})(E_1 - \hat{E}_1)^0 = 0 + R_0$$

$$\Phi'(E_1) = \frac{\frac{d(\log \frac{\hat{E}_1}{E_1})}{dE_1}}{1!} (E_1 - \hat{E}_1) =$$

$$-\frac{\hat{E}_1}{E_1}(E_1 - \hat{E}_1) = (\hat{E}_1 - E_1) + R_1$$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Phi(E_1) = 0 + (\hat{E}_1 - E_1) + \frac{1}{2} \frac{(E_1 - \hat{E}_1)^2}{\hat{E}_1} + R_2$$

여기서 $R = (\hat{E}_1 - E_1) + R_2$ 이라 하면, 위 식은

$$\Phi(E_1) = \frac{1}{2} \frac{(E_1 - \hat{E}_1)^2}{\hat{E}_1} + R$$

이 된다.

따라서 i를 n까지 정리하면,

$$I(\hat{E}_i, E) = \sum_{i=0}^{N} \hat{E}_i \log \frac{\hat{E}_i}{E_i} \approx$$

$$\frac{1}{2} \sum_{i=0}^{N} \hat{E}_i \left(\frac{E_i - \hat{E}_i}{\hat{E}_i} \right)^2 = \frac{1}{2} \sum_{i=0}^{N} \frac{(E_i - \hat{E}_i)^2}{\hat{E}_i}$$

가 된다. 여기서 마지막 항은 이론치가 $\hat{E}_i$ 이고, 관측치가 E_i 인 경우의 χ^2과 같다.

역사문화도시 「옛 모습 가꾸기」의 건축기획적 접근

이 왕 기 (李 王 基)
목원대학교 건축도시공학부 교수

Ⅰ. 머리말

지난 반세기 동안 도시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지만 그 성장과정에서 인간이 소외되고, 형식에 치우쳐 졌으며 어느 도시나 똑같은 무채색의 획일화로 발전해 왔다. 도시는 다양한 삶의 문화를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그 그릇을 만들고 있지만 아무도 그것의 완성된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그릇은 항상 변하고 있어 생명체와 같기 때문이다. 좋든 싫든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도성장이 가져온 폐단은 도시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획일화된다는 것이다. 도시는 그것이 어떠한 형태든 다른 도시와 구별되는 이미지와 고유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도시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은 역사문화가 그 배경일 수도 있고, 새롭게 만들어 가는 전통도 그 배경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도시의 고유한 정체성이 왜 필요한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그것은 경쟁력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다. 경쟁력은 도시의 자생력을 키워 스스로 도시를 운영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정체성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환경을 찾아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남 古都 옛 모습 재현 사업」도 정체성 찾기의 일환이다.

이 글은 충남의 고도를 대상으로 옛 모습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이른바 '옛 모습 가꾸기'의 접근방법론에 관해 건축기획적 측면에서 언급해 본 것이다. 먼저 과제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지역의 도시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II. 「옛 모습 가꾸기」 접근방법

1. 개념과 목표설정

지방 도시에서 옛 모습 가꾸기는 현재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 이러한 사업이 모범적으로 선행되지 않아 건축적으로 성공사례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관 주도하에 진행되었던 몇몇 선행 사례는 다만 전통건축의 복원 또는 복구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계획은 지역 주민생활과 유리되어 있어서 모범적인 사례로 보기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옛 모습 가꾸기」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옛 모습 가꾸기 사업은 지역주민과 함께 풀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야할 것이다. 그 동안 옛 모습 가꾸기와 유사한 선행사례는 '○○보존사업' 또는 '○○복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역 주민의 참여가 제한되고 관 주도하에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업특성 때문에 주민생활과는 일체화가 되지 않고 실효성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옛 모습 가꾸기가 시행착오 없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주민이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해야 한다. 옛 모습 가꾸기에는 물리적인 형식(하드웨어)에서부터 비물리적인 내용(소프트웨어)까지 다양한 것들이 포함된다. 아무리 하드웨어가 훌륭해도 소프트웨어가 보잘 것 없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고, 반대로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훌륭해도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하드웨어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역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옛 모습 가꾸기」에 대한 하드웨어의 공간범위는 단위건축물로 한정되는 아주 작은 범위에서부터 거리, 동네, 구역, 도시와 같은 광범위한 지역까지 포함된다. 예를 들면 하나의 역사적 건조물을 대상으로 그 주변 일대를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명소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역사문화재의 보존과 도시경관의 개발이라는 2가지 목적을 함께 이루어낸 사례가 된다. 이와 반대로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옛 모습 가꾸기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주민생활과 유리될 수가 있다. 편리한 현대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사업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설혹 사업이 이루어 졌다해도 변칙적인 운영으로 초기에 설정했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옛 모습 가꾸기 사업은 지역주민의 사업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옛 모습 가꾸기」에 대한 개념은 '전통적인 옛 모습을 지역주민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모든 활동'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사실 옛 모습 가꾸기 사업을 지역주민 스스로가 만들어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사업의 성패는 지역의 거주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단계에 들어서 부터는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져야 한다. 「옛

모습 가꾸기」에 참여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사업내용이 전혀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에서의 참여는 오히려 거부감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계획단계에 들어가서는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과제에 대한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지역주민에게 홍보하여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모든 주민이 사업에 찬성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주민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업의 개념과 목표설정 단계에서 전문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사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목표 설정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가들의 판단자료를 제공하고, 결국 사업 시행을 결정하는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옛 모습 가꾸기」사업의 목표는 크게 안전성, 쾌적성, 건강성, 편리성, 문화성, 정체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열거한 목표 중 어느 것이 우선적이라 할 수 없을 만큼 모두가 중요한 목표이다.

안전성은 옛 모습 가꾸기의 목표 중에서 가장 우선적이다. 아무리 잘 이루어진 옛 모습 가꾸기라도 안전성이 결여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할 문제가 안전성이다. 두 번째는 쾌적성이다. 지역 주민이 옛 모습 가꾸기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쾌적성을 무시할 수가 없으며, 방문자들에게도 쾌적성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목표가 된다. 세 번째 건강성도 무시할 수 없는 목표중 하나이다. 환경을 파괴하고 공해를 유발하는 옛 모습 가꾸기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환경친화적이고 건강한 「옛 모습 가꾸기」가 되어야 한다. 네 번째는 편리성이다. 옛 모습 가꾸기로 인해 주민생활이 불편하게 된다면 이 또한 목표에 접근되지 못한 것이다. 또한 편리성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옛 모습이 현대적으로 꾸며지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실생활과 향수를 느껴 찾아오는 방문자의 욕구를 어떻게 동시적으로 충족시켜줄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문화성이다. 문화성은 옛 모습을 설명해 주는 배경이 되고 방문자들에게 이야기꺼리를 제공해 준다. 옛 모습 가꾸기는 또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를 제공해 주게 된다. 문화를 대변하고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에서 문화성은 중요한 목표가 된다. 마지막으로 정체성을 들 수 있다. 정체성은 그 어느 목표보다도 중요하다. 옛 모습 가꾸기에 정체성이 결여되면 가치가 상실되고 만다.

2. 도시문화의 정체성(Identity)과 그 요소들

도시 정체성의 바탕에는 문화현상이 깔려있다. '문화'는 이제 국가간, 지역간 경쟁에서 가장 큰 무기로 등장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은 이제 곧 우리 앞에 닥칠 것이다. 지역문화가 민족문화의 보편성, 나아가 세계문화에 편승되어 버리면 이미 독창성을 상실하고 만다. 즉 경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를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역의 독자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는 결국 앞으로 지방시대에 있어서 생존과도 그 맥락이 이어지는 것이라 하겠다. 정체성은 또한 도시의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지역의 문화가 자원으로서 활용될 때 지역의 정체성은 살아날 수 있고 지역의 존재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어느 지역을 가 보아도 획일적이고 보편적이라면 방문할 이유도 없거니와 '지역'이니 '지방'이라는 가치도 단순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역의 도시문화에 있어서 '지역성'이라고 하면 지역문화의 특징과 그 본질적인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받아 들여져야 하고 또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까지도 담게 된다.

지방 도시에 있어서 문화의 보편적 이해는 민족문화라는 큰 범주 내에 있지만 그 범주에서도 특징적인 역사문화, 문화현상을 견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역문화가 민족문화로 보편화되는 것은 지역의 존재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도시문화의 정체성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독특하면서도 지역성이 부각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것과 구별되어야 한다.

정체성을 표현하는 요소로는 크게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유형적인 것에는 건축, 도시를 비롯하여 자연경관, 역사적인 장소, 특산물, 유형문화재, 매장문화재, 공예품, 서책 등이 있고, 무형적인 것으로는 역사, 전설, 무형문화재, 지방색, 음악, 축제, 민속놀이, 방언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요소라 하겠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1〉

〈표 1〉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어 내는 요소들

분 류	요 소	내 용	비 고
유형적인 것	건 축	역사적인 건축, 기록될만한 근대 및 현대건축	관아, 객사, 향교, 서원, 사찰, 반가, 민가, 근대건축, 현대건축 등
	도 시	도시의 역사성, 아름다운 도시경관, 특색 있는 거리	역사적인 거리, 정감있는 거리, 장터, 신작로 등
	자연경관	아름다운 자연경관, 보존의 가치가 있는 자연경관	농촌풍경, 명산, 해안, 계곡, 들판, 수평선, 저녁노을 등
	역사적인 장소	역사기록에 나타난 장소, 종교와 관련된 장소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곳, 유명 인물의 탄생지 또는 방문처, 순교지 등
	특산물	음식, 민속공예품, 공산품, 중공업제품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곳, 유명 인물의 탄생지 또는 방문처, 순교지 등

분 류	요 소	내 용	비 고
유형적인 것	자연경관	아름다운 자연경관, 보존의 가치가 있는 자연경관	농촌풍경, 명산, 해안, 계곡, 들판, 수평선, 저녁노을 등
	유형문화재	국가 및 지방정부 지정 문화재	건축, 공예, 회화,
	매장문화재	선사시대 주거지, 각종 건물터	주거지, 절터, 성터, 우물 등
	공 예 품	문화재, 민속공예, 장인의 제작품	장식품, 탈, 의상, 목제품 등
	서 책	역사, 민속, 군지 등	문집, 각종 읍지, 작품집, 관련서책
	역 사	기록에 나타난 도시의 역사, 지역의 역사, 역사적 사건	
	전 설	지역의 전설, 민담, 고사 등	
무형적인 것	무형문화재	장인의 기술, 예인의 기예 등	
	음 악	농요, 농악 등 전통민속음악, 현대음악	
	축 제	동제, 지역축제, 민속축제 등	
	민속놀이	전통민속놀이	
	방 언	재미있고 독특한 용어	
	민간요법	지역의 독특한 민간용법(모래찜질, 건강식품 등)	
	5일장	정기적 서는 전통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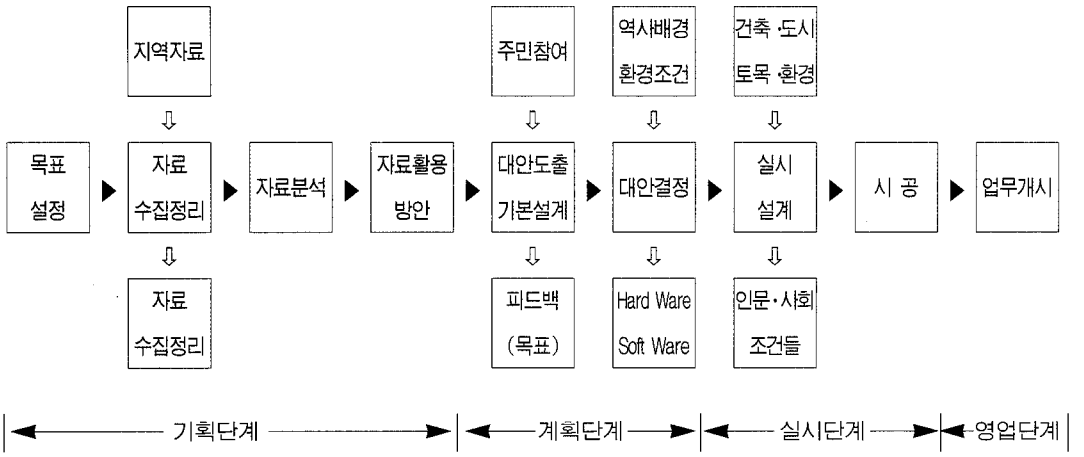
3. 기획의 접근방법론

인습이 현대생활에 젖어 있어서 옛 모습으로 돌아가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건축이나 도시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옛 모습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쉬울지 모르지만 그 속에 담겨지는 내용까지 옛 것으로 돌아가기란 어려운 일이다. '옛 모습'은 그것이 지니고 있는 역사성과 당위성, 현대적 의미의 목적과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단계별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실제로 사업이 구체화 되기까지는 크게 기획단계, 계획단계, 실시단계, 영업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글에서는 기획단계와 계획단계로 한정하여 언급하고자 한다.〈표 2〉

역사적인 지방도시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은 무엇보다도 목표의 설정이 명확해야 한다.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이해해야 하고 그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

〈표 2〉 과제 진행과정



한 삶의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과제의 목표가 단순히 관광자원화에 치우쳐 주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거나 주민편의를 위하여 역사적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개발이 우선되어 문화환경이 훼손되어서도 안되고, 보존만을 위하여 개발이 무시되어서도 안된다.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목표를 훌륭하게 조화시켜 가야한다.

두 번째는 자료 수집 및 정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료는 앞에서 언급한 각종 요소를 기본으로 정리하되 추가될 수 있는 요소들은 모두 망라하도록 한다. 유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것을 포함하여 앞에서 언급한 모든 자료가 관광자원화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모든 내용을 조사 정리한다. 중복된 자료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이 자료들 중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의 활용 방법은 다르지만 유형적인 자료에 내용을 풍부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무형적인 자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형적인 자료가 더욱 중요하게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위한 분석과정이다. 즉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그 활용방법에 대한 분석단계를 거쳐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자료 중에는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자료도 있고,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있다. 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이미지화 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물리적으로 현존하는 자료와 현존하지는 않지만 근거를 남기고 있는 자료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자료가 조사 분석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형적인 것은 직접 사용이 가능하지만 무형적인 것은 유형적인 것과 함께 함으로써 활용가치가 극대화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역사적인 사실은 그 역사적인 장소(또는 건조물)가 현존함으로써 관광자원화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으며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게된다.

네 번째는 자료의 활용방법 도출이다.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를 정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만들어 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건축과 도시, 자연공간, 역사적인 장소와 같은 유형적인 것은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직접적인 자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만들어 내는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으로는 건축적으로 구체화되는 장소의 환경연구이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에는 자연 및 지리환경, 인문환경, 사회환경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초기단계에서 설정했던 목표와 부합하고 있는지 피드백(feed-back)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이 단계에서 해야할 업무중에는 선행 사례조사도 포함되어야 한다. 선행 사례조사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일 뿐만 아니라 장단점을 분석하여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참고하는데도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대안의 도출과 도면화 작업 단계이다. 대안의 추출은 우선 그 지역이 지니고 있는 환경조건, 역사적 배경, 현존하는 자연경관 및 도시경관 등을 고려한다. 그리고 선행 사례에서 분석된 각종 요소들을 참고로 진행된다. 작업에서 가장 고려할 사항은 대상지역의 정체성을 구체화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존하는 역사적 문화환경(문화재로 지정된 건조물 등)이 구체적으로 남아있을 경우 이를 중심으로 주변 경관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전개한다. 현존하는 문화환경이 없을 경우 장소성을 근거로 역사적인 내용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명확한 고증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의 특산물과 연계시켜 역사적인 공간을 만들어 내는 방안도 있다. 도면화 작업은 그 동안 진행되었던 자료분석 내용과 선행사례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도면화를 위한 기법과 내용들이 동원되며 이를 위하여 컴퓨터와 같은 첨단 도구가 사용되기도 한다.

Ⅲ. 도시경관과 문화의 정체성

1. 도시색과 지역문화

지방화시대는 지역문화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의 건축과 도시 경관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건축을 단순히 도시를 만드는 요소로 보아서도 안되고, 도시를 건축의 집합체로 보아서도 안된다. 도시와 건축을 문화로 인식하고 문화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요소로 생각할 때 그 지역의 특징을 그려낼 수 있게 된다. 지방화 시대의 문화적 위상을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른바 도시색이 명확해야 한다. 지방의 도시가 갖고 있는 특징을 살려 그 도시만의 색깔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어

야 한다.

지역의 도시적 특징을 어떻게 이미지화 할 것인가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극히 부분적인 문화현상이 지역문화를 대표할 수는 없고, 우수한 지역 문화라도 지역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많은 문화적인 요소가 있다. 이러한 문화요소를 발굴하여 재창출하지 않으면 존재가치가 없다. 문화의 유기적 관계가 생활 속에 녹아 들어가 생활 근저에서 재창조 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지역의 문화와 지역성을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흔히 보고 접하는 것이라도 관심을 버릴 때 지역문화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문화는 반드시 그 지역의 특수한 정보와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어야 하며 그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협조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 문화에 대한 자긍과 정체성을 간직하고자 하는 노력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지방 도시의 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운동만으로 지역문화가 재창출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화운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행정, 재정적인 배려와 후원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앞으로 지역의 독특한 문화는 지역을 풍요롭게 해줄 것이며, 지역의 가치를 살리고, 나아가 세계화하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미래는 흔히 문화전쟁 시대라고 하는데 문화전쟁 시대의 최후 승리자는 '지역문화'이다. 정체성을 지닌 지역문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도구는 바로 건축이고 이들이 모여 도시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문화환경과 함께 건축의 지역성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런 일은 반드시 지역의 건축가가 지역의 건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외부의 건축가라도 지역의 정체성에 흡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지역이라도 그 지역의 정체성에 흡수될 수 있을 정도로 정체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995년 6월 19, 20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세계건축도시전문가회의(ANYWISE)에서 많은 건축가들은 도시의 정체성, 특히 한국의 도시에 대해 심각하게 비판 한 적이 있다. 스페인 건축가 모랄레스(고등기술건축학교)는 "서울은 다른 도시와 비슷하다"라고 하였고, 미국 건축가 데이비드 하비(존스 홉킨스大)는 "서울은 내용이 형식을 앞섰다", "도시의 질서가 없다"고 한마디로 비판한 적이 있다. 이 말은 지역성이 없다, 볼 것이 없다는 말이다. 나아가 아시아에 있어서 북경이나 동경이 낫다는 의미의 표현도 하고 있다. 비록 서울을 대상으로 이야기 한 것이지만 우리 나라 지방 도시의 경관구조가 모두 이와 같이 특색 없는 획일화로 이루어졌음을 부인할 수 없다.

독특한 도시문화를 계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중에는 도시, 건축뿐만 아니라 예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좋은 도시문화환경은

시민들의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게 된다. 나아가 활발한 투자요인으로 작용하여 간접적인 경제성장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건축이 관광자원화 될 때 그 시너지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흔히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가 되면 그 전시대와는 다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된다. 즉 문화를 즐기는 패턴의 변화가 가장 큰 것이라 하겠다. 그 전까지만 해도 문화는 일부계층만 향유하는 것이었으나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즉 누구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의 대중적 소유시대'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도시를 삶의 도구로 보지 말고 인간의 생활문화를 담는 문화공간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공간은 누구나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화'가 단순히 존재하는 것에서 이제는 즐기고 소유하는(정신적 소유, 물리적 소유)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어가고 있다. 문화의 권위주의 시대에서 대중적 교감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시대에 문화의 향유나 소유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조건이 있다. 첫째, 도시가 문화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 문화의 가치에는 절대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도 중요하다. 두 번째는 특정한 부류의 문화가 대중화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일부계층만이 소유하고 즐겼던 고급문화가 대중화 되도록 하는 것이다. 건축문화가 전문가의 영역에서 벗어나 대중화되도록 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 하겠다. 세 번째는 알려지지 않은 문화, 발굴되지 않은 문화, 숨어있는 문화를 찾아 문화향유권자에게 가깝게 접근시켜주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화의 향유권자와 문화생산자 모두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문화의 생산과 소비가 단절되어 있었다면 앞으로는 문화의 생산과 소비가 함께 조화하는 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지역의 문화가 계승 발전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주민들이 지역문화를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는 지방도시의 행정가들이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2. 도시문화의 정체성을 위한 노력과 역할

도시가 물리적으로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역시 건축물이 중요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시문화의 정체성은 건축의 정체성과 관련된다. 어느 도시를 보아도 경관구조가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도시문화의 정체성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건축적 표현이 도시경관을 좌우하게 되고 도시경관이 그 도시의 정체성을 결정짓게 된다. 아무리 역사적인 건축물이라도 도시경관으로써 가치를 발휘하지 못할 때는 지역의 고유성을 나타낼 수가 없다.

고유한 정체성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질 수 없다.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방면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1) 지역 주민의 역할

도시 경관을 만들어 가는 주체는 말할 것도 없이 지역의 시민이며 주민이다. 행정 혹은 건축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주민 참여가 필수 불가결이다. 그러므로 주민이 주체가 되고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민 참가형 경관 가꾸기의 조직체로서, 도시 가꾸기 협의회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 경관문제 뿐만 아니라 반드시 보존적, 방어적이 아니고 이것으로부터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의를 반복하면서 도시 가꾸기를 해야 한다.[1] 좋은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실행시키기 위한 행정가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행정가의 도움은 특히 중요하므로 주민 협의체에 행정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협의는 결국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생각해야 한다.

2) 행정 및 정책 담당자들의 역할

정책담당 행정가는 먼저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무와 책임감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과제의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들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도시경관 가꾸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동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옛 모습 가꾸기」에 대한 개념과 목표를 인식시키고, 성공적인 선행사례를 통하여 주민 참여 의욕을 불러일으키도록 해야 한다.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노력한다. 지역의 문화를 발굴하고 이를 육성,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지역의 문화는 옛 모습 가꾸기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이와 함께 지역문화재 보존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아름다운 건축도 옛 모습 가꾸기와 연결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미래사회는 문화상품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지방정부의 정책방향은 '문화'를 우선하는 정책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3) 민·관 공동작업의 역할

효율적인「옛 모습 가꾸기」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 주민과 관의 공동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주민과 관의 공동작업의 순서는 준비단계를 거쳐 주민과의 접근단계, 주민과의 논의단계, 마지막으로 주민과의 상호 이해단계로 이어진다.〈표 3〉

준비단계에서는 옛 모습 가꾸기의 동기와 개념 및 목표를 정리하고 지역 문제 및 과제를 분석한다. 주민의 특성과 접근방법을 검토하는 작업과 함께 참여하여 함께 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1) 조용준 외 공역,「도시건축의 경관창조(건축·마치나미경관연구회 저)」(서울 기문당, 1998) 28쪽

〈표 3〉 민·관 공동작업의 흐름

단계별 작업	내 용
1. 준 비 단 계	① 「옛 모습 가꾸기」의 동기와 개념 및 목표를 정리 ② 지역 문제 및 과제 분석 ③ 주민의 특성과 접근방법 검토 ④ 참여 작업 프로그램 작성
▼	
2. 접 근 단 계	① 주민과 만나는 계기를 만든다. ② 주민 대표자와 간담회를 갖는다. ③ 「옛 모습 가꾸기」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	
3. 논 의 단 계	① 구성된 협의회와 논의 ② 그 밖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주민들과 논의를 거친다.
▼	
4. 이 해 단 계	① 협의내용을 구체화 ② 계획안을 설명하여 이해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③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도록 한다.

작성한다.

주민과의 접근단계에서는 주민과 만나는 계기를 만들고, 주민 대표자 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단계에서는 「옛 모습 가꾸기」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주민과의 논의단계에서는 구성된 협의회와 논의를 하고, 그 밖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주민들과 논의를 거친다.

주민과의 이해단계에서는 협의내용을 구체화하고 계획안을 설명하여 이해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민·관의 공동작업이 가져오는 기대효과는 첫째 관주도형에서 민관협동으로 주민의식이 변화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행정발의형에서 지역주민발의형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는 행정의존형에서 지역자율형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이다.

Ⅳ. 맺음말

충남의 역사문화도시 옛 모습 되살리기는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주요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토개발이나 도시개발과 같이 단시간에 이루어 질 수는 없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문화가 함께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동참하는「옛 모습 가꾸기」가 필요하다.

옛 모습 가꾸기의 '옛 모습'은 도시경관으로써 절대적인 가치와 상대적인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 절대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가 조화롭게 표출되어 지역주민과 함께 해야 하며 나아가 전통문화와 문화적 전통이 유기적으로 계승되어야 한다. 전통의 보존만큼 전통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발전이다.

현대사회에서 이제는 문화의 질이 높인다는 것만으로 문화행정이나 문화운동이 만족해서는 안된다. 미래의 문화는 질의 문제가 아니라 어메니티(Amenity : 즐겁게 즐기는 것)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가고 있다. 방문하고, 소유하고, 느끼고, 즐겁게 즐길 때 문화의 가치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옛 모습 가꾸기」의 목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방문자에게 소유하는 즐거움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공간은 주민의 안정성, 건강성, 쾌적성을 위하여 아름답게 꾸며져야 하며, 정체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 사업은 단시간에 이루어질 성격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기본계획을 이해하고 스스로 동참할 때 그 성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건축계획이나 도시설계는 주민의 이해를 전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옛 모습 가꾸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규제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사업의 성패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깊은 관련이 있다. 정책담당자나 행정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 문화운동으로 발전시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주민 문화운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국 주민 스스로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 실패한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 행정가나 전문가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열린충남

石間朱(철화 분청사기 철화 안료)에 대한 고찰

이 재 황(李 在 晃)
계룡산 도예촌장 · 한남대 강사

Ⅰ. 머리말

石間朱(Fe_3O_4, 鐵畵안료)는 전통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흑갈색 안료로 계룡산 철화 분청사기에 회화성이 우수한 표면 장식을 하여 세계 도자사에 그 명성을 드높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석간주(石間朱) 대신 철(鐵)을 산화하여 만든 산화철(Fe_2O_3)로 그림을 그려 질감이 현저히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瓷器之畵 古用石間朱. 도자기의 그림은 오래 전부터 석간주라는 자연석에 섞여 있는 철화 안료로 사용하였다.」라는 이 문헌은 영조실록 권82 영조30년 7월 갑오조에 기록되어 있으며 기타 석간주에 대한 기록이 옛 문집(文集)에 가끔씩 서술될 정도로 잊혀진 전통 도자 재료의 복원이 아쉬움을 갖게 한다.

옛 선인이 쓰고 남은 도자 재료는 물리적인 형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소멸되어 사라지기까지는 일정한 장소에 보존되어 있을 것이며 더불어 단일 재료일 때 도예가의 교감과 이 시대의 과학기기를 응용하여 "이것일 수 있는" 근거를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이를 발굴 복원코자 1993년부터 본격적인 계룡산 철화 분청사기의 재료를 탐구하였다.

Ⅱ. 계룡산 철화 분청사기에 대한 요점

1. 역사적 배경

世宗實錄地理誌에 공주 동쪽 동학동(東鶴洞)에서 中品의 자기가 생산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동학사는 신라 34대 성덕23년(갑자년 724년) 혜의 스님에 의해 청량사라는 이름으로 창건되어 조선 초기에 동학사로 개명한 것으로 알려진 사

찰이다.

고려 시대에 절에서 필요한 기물을 제작하였던 도자기 가마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청자 파편만이 출토되고 있으며 계룡산 가마터의 개요(改窯) 시기가 고려 말기부터 가마가 있었다고 봄으로써 14세기 이전으로 추정된다.

철화 분청사기는 成化二十三年銘 (1487년) 墓誌片과 가정 15년 명(嘉靖十五年, 1536년) 墓誌片에 정확한 편년을 남기며 학봉리 가마터에서 귀얄 분청사기에 철화를 사용한 기법이 대량으로 생산되어 제작되었다.

2. 계룡산 철화 분청사기의 改要

「계룡산 분청」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철화 분청사기는 분청 제작기법이 지역적으로 서로 다르게 나타난 독특한 우리지방의 대표적 문화 유산이다.

철화 기법은 청자의 발생지인 전남 강진군 대구면으로부터 전북 부안군 산내면으로 계승되다가 일단 소멸(消滅)된 듯 하더니 다시 계룡산에서 찬란한 도자 문화를 꽃피웠다.

이 일대의 가마터에는 청자, 흑유, 분청, 백자등 한곳에서 제작된 다종의 기물이 나오는 전국 유일한 특성을 보이며 철화 분청사기는 다른 곳에서는 번조한 예가 없어 "계룡산 분청"이라는 별칭이 붙은 것이다.

다른 지방의 소성물(燒成物)과는 쉽게 구별이 될 만큼 태토(胎土)가 거칠고 철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성후 투명한 유약 밑에서 암자색(暗紫色)으로 소지가 비치고 있다. 기형이 둔하여 비대칭으로 조화로우며 반쯤 칠한 막걸리색 귀얄 자욱과 시대를 앞선 추상적 철화문은 자유스러운 힘찬 필력으로 그려져 있으며 해학적인 문양과 생략의 효과로 시대를 초월한 독특한 개성을 느끼게 한다.

훌륭한 솜씨는 수단(手段)과 목적(目的)을 동일하게 만들 듯이 계룡산 철화 분청사기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겠다는 목적보다도 오히려 그것을 본능적(本能的)으로 행(行)하였을 것이다. 거칠고 철분이 많이 포함된 검게 보이는 태토를 감추기 위해 막걸리색 분장토를 사용하여 자연에서 채취한 어린소나무 뿌리나 싸리가지를 묶어 만든 붓으로 귀얄 자욱이 선명하고 굵직한 문양을 남겼다.

분장토가 칠하여지지 않은 부분은 독특한 개성으로 오히려 예술적인 가치를 승화시킨 예로서 귀얄문과 힘찬 필력으로 그려진 철화문이 함께 어우러져 놀라움을 줄 만큼 우리 민족의 미(美)의식이 잘 표현된 도자기이기에 이 지역 사람들의 심성에서 우러 나올 수밖에 없는 특성인 것이다. 계룡산 도기장들의 순진한 제작 태도로 인하여 항상 일정한 마음으로 거리낌 없는 경지에서 물레의 중심(中心)이 맞지 않아도 마음에 두지 않고 재 빨리 손에 익은 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훌륭하게 인위를 초월하여 천공(天工)에 가까운 제작이 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철화 분청사기 대다수가 기장들의 손으로 이룩된 민중예술의 생기와 익살이 넘치는 솜씨로서

거칠은 듯하면서도 선량하며 대담한 묘사와 생략을 즐겼기 때문에 문양의 주제나 표현에 아무런 제약과 비판도 의식하지 않은 대담하게 생략한 반추상의 그림으로 자연인(自然人)의 제작이었다.

또 이 지방의 도기장 이참평(李參平) 公은 임진왜란 중에 끌려가 아리따 지방에 정착하여 이즈미야마(泉山)에서 도석광을 발견하여 1616년 일본 최초의 자기질 도자기를 만들면서 일본의 도조(陶祖)로서 숭배받고 있다.

한국 도자사의 빛나는 경지를 이룬 계룡산 철화 분청사기가 기술의 우수성(優秀性)을 전(傳)하지도 못하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끝으로 아쉽게 부활하지 못하고 사라지다가, 조선조 중기 이후 철화 백자로 이어지는 화려한 업적을 남기었다.

Ⅲ. 석간주 실험 및 분석

1. 석간주 특성 및 배경[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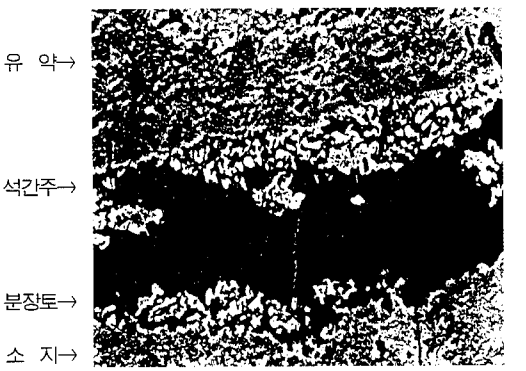
철사·주사(朱士)·철주(鐵朱)·혈사(血師)등으로 불리우는 것으로 자연 합성물로 자연철(Fe_3O_4)이 화강암 틈에서 오랜 세월동안 흘러 모이어 고운 적색 점토질의 분말층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며 비교적 철분의 순도가 높은 안료로서 고급질에 속한다.

환원 소성에서 검은색의 단단한 덩어리가 되는데 화도(火度)가 높은 편으로 대부분 석간주를 물에 묽게 타서 붓에 조금씩 묻혀 문양을 그리고 있다.

2. 철화 분청사기 주변 재료 연구 및 실험

1) 연구방법

(1) 학봉리 가마터(사적 333호)에서 발굴되는 도편(陶片)은 여러종류의 유약으로 되어있다. 그 중 선택한 철화 분청사기편은 가장 많이 볼수 있는 유약 구조를 갖고 있다.



계룡산 철화 분청사기편
(SEM주사 전자 현미경의 확대사진)

본 연구자는 1993년부터 본격적인 주변 재료를 탐구 실험하여 1997년 계룡산 철화 분청사기 재료연구(경기대 석사논문)을 계기로 석간주(石間朱)에 대한 검증을 실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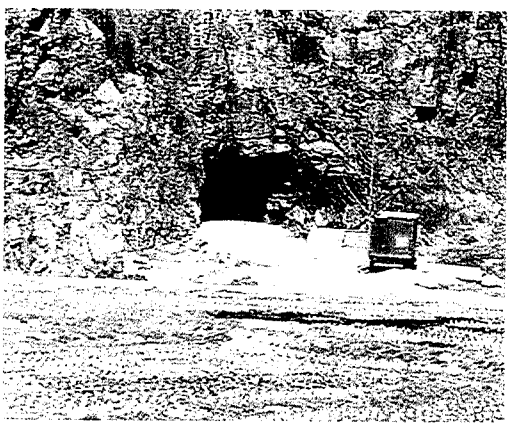
• 계룡산 철화 분청사기 재료연구 발표/1998 공주시 향토 문화회 논문10집

1) 世宗陶磁集 14卷, 東京 角川 書店 1956, 165쪽.

• 서고청굴 암석분석결과 석간주 사용에 대한 검증 방안(개최)

1998. 12. 5 충청남도 문체 86700-2278

(2) 계룡산 가마터를 관심을 갖으며 본격적인 많은 주변재료를 찾아 탐구 실험한 결과 위 아래 사기골 주변에 1523년(空岩) 이전에 형성된 2개의 인위적 암석 동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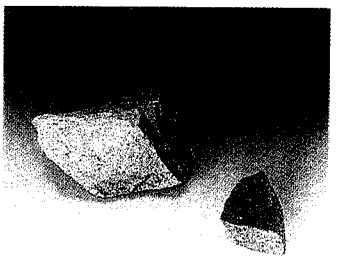
아래 사기골에 소재한 암석동굴(서고청굴)

윗사기골에 소재한 암석동굴(구무동굴)

• "구무"는 조선조 초기의 "굴"의 어원이다.

(3) 암석 동굴은 윗 사기골(구무동굴)과 아래 사기골(서고청굴)로서

[채 굴 시]



홍색장석 화강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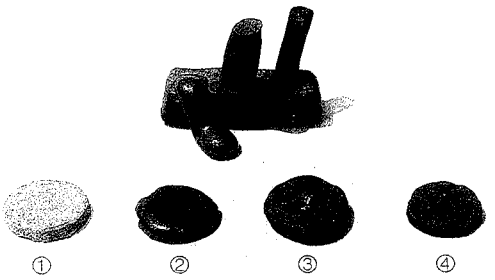
① 한약재 「산골」을 소량으로 채취할 수 있었다.(산골 : 뼈가 부러졌거나 출산후 임산부가 먹는 전통한약재)

② 암석이 홍색 장석 화강암으로 이루워졌으며, 구성비는 장석70%, 석영20%, 철5.7% 등으로 이루워졌다.

③ 철분이 섞인 암석의 강도는 약하며 쉽게 잘 부수어진다.

(4) 암석을 단미로 실험하기 위해 망치로 분쇄한 후 물에 적셔 시편과 콘을 만든 후 1250℃ 온도에 1차 소성하였다.(주변재료의 단미실험, 다음 페이지 그림 참조)

① 분토골 분장토
② 홍색장석 화강암
③ 주변점토(용담리점토)
④ 사적 333호 주변 황토



2) 결과

(분토골 분장토)

실험한 단미는 1250℃의 온도에 견디지 못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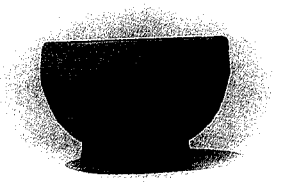
· 분토골 분장토는 미량의 철분에 의해 노란색을 띄었다.

· 홍색 장석질 화강암은 너무 녹아

· 내열판에 달라 붙었다.

· 주변흙과 황토는 표면이 부풀어 올라 화도를 낮추어야 한다

(1) 홍색 장석질 화감암은 소성시 다량의 철분에 의해 흑유로 되었다. 이 암석을 분쇄하여 석분과 자연철로 나눈 후 2차 소성(1230℃)한 결과 투명한 분청 유와 석간주(Fe_3O_4)얻을 수 있었다.



(2) 실험의 결과로서 시작품을 만든 후, 그림은 석간주로 칠해 보았다.

Ⅳ. 맺음말

계룡산은 대부분 화강암으로되어 아름다운 기암괴석층으로 이루워졌으며 그중 1/3의 암석은 홍색 장석질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이 암석은 쉽게 분쇄되며 흑유·투명한 분청사기유·철화안료를 만드는 기본 재료가 되어 철화 분청사기를 만드는 창작의 원동력이 되었다.

윗·아래 사기막골(2개의 인위적) 암석동굴이 이를 검증한다.

(단위 : 100g중(%))

탈취 작업을 안한 상태	탈철 작업을 하여 구분된 상태	
	유약	철화안료(石間朱)
흑 유(천목)	(투명) 96.3	5.7

2. 구무동굴과 서고청 굴인 암석 동굴은 한약재인 「산골」을 캐기 위한 수단으로 추정되며, 더불어 산골 채취시 깨어진 암석은 하소 과정을 거쳐

유약과 石間朱(철화안료)로 될 수 있었을 것이다.

3. 소성온도는 1230℃미만일 것이며 깨어진 암석은 단미상태로 아주 잘 녹는 투명한 분청유와 묽은 상태에서 엷은 노랑색을 띤 검정색의 石間朱로 활용될 수 있었다.

이로써 본 연구자는 계룡산 철화 분청사기의 철화안료인 石間朱를 실험 탐구하여 재료 실험작품전[2]을 개최하였다. 추후 더욱 정확한 검증자료가 발표되길 바라며 석간주 검증에 기초적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열린충남

2) 이재황, 계룡산 철화 분청사기 재료실험전, 갤러리 대덕롯데호텔, 1999.

지역축제를 반성한다

한 양 명(韓陽明)
안동대 국학부 교수

'축제공화국'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다. 이글을 작성하는 지금도 어디선가는 축제가 기획되고, 또 어디선가는 축제의 낮과 밤이 흘러가고 있을 것이다. '雨後竹筍'이 아니라 '雨後祝祭'라고 하는 말이 더 없이 잘 어울리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지금까지 전국 각지에서 무려 308개의 축제가 다양한 이름으로 열렸다. 이름은 각양각색이지만 각급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축제들의 공통된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축제의 상품화이다. 축제의 관광상품화나 문화상품화라는 담론은 그 외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내포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동시대 축제의 목표로 설정된 축제의 상품화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아쉽게도 그 대답은 부정적이다. 아주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축제의 상품화는커녕 아까운 공공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이며, 그동안 전국 각지의 내로라하는 지역축제들을 조사한 바 있는 나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왜 너도 나도 축제만 열면 지역문화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세계화하고, 지역의 관광산업이 진흥되고 경기가 활성화하리라고 믿고 있는가? 한 번만 치워 보면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될 터인데도, 고개 한 번 돌려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수많은 축제들이 쓴맛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데도 애써 그것을 외면하고 왜 불나방처럼 축제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일까?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기로 하자.

축제의 기능에 대한 관점으로는 경제적 관점, 사회적 관점, 존재론적 관점 등을 들 수 있다. 경제적 관점은 축제가 얼마만큼 돈이 되는가에 관심을 기울인다. 따라서 축제의 성패는 그 축제가 얼마만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사회적 관점은 축제를 통해서 지역의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민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는가에 관심을 기울인다. 따라서 축제의 성패는 지역민들이 축제를 통해서 체험하는 공동체의식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의 질과 정도에 달려 있다.

이에 비해서 존재론적 관점은 사정이 다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 효과도 사회적 효과도 아니다.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것은 축제에 참여한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이 축제를 통해서 자기 존재의 의의를 자각하고,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는 생에의 대긍정을 경험하며, 타인에 대한 열린 마음을 통해서 공동체적 자아를 수립하고, 이 모든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는 일상의 삶을 새롭게 꾸려나갈 활력을 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존재론적 관점에 의하면 축제의 성패는 축제에 참가한 개개인의 체험의 질을 통해서 측정할 수밖에 없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요즘의 축제에서 가장 각광 받고 있는 것은 경제적 관점이다. 속된 말로 '축제는 돈이 되어야 하며 돈이 되는 축제만이 제대로 된 축제'라는 생각들이 널리 퍼져 있다. 마치 인플루엔자처럼 우리 주위를 떠돌아다니며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 축제의 상품화라는 담론에는 축제를 하나의 공산품 정도로 취급하려는 불온한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역문화와 경제의 활성화에 대해 거시적 전망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정책 당국에서는, 축제의 상품화를 가장 손쉬운 방책으로 보고 이것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별다른 배후산업이나 부존자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부추김과 지역 정치의 역학이 교묘하게 맞물려서 축제의 상품화를 신앙하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축제를 비롯한 각종 이벤트들을 통해서 그들의 존립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문화산업과, 관광에 드리워진 음울한 그림자들을 애써 외면하고 관광만이 유일한 살길이라고 떠들어대는 관광지상주의자들의 부추김도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나는 이처럼 축제를 상품으로만 인식하는 경제지상주의적 관점에 분명하게 반대하는 사람이다. 축제는 다른 무엇이기에 앞서 축제이며, 참가자의 존재론적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지역민들의 유대와 정체성 강화라는 사회적 기능까지도 자연스럽게 충족시켜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축제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 기능을 완전히 도외시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가 자본주의적 세계경제체제에 편입된 지 이미 오래고 시장경제의 논리가 최고의 권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효용성을 무시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문제는 축제 본연의 문화적 의미를 간과하는 데 있다. 이미 알고 있듯이 현대의 축제는 그 개념의 외연이 무한정 확장되어 판촉을 위한 이벤

트마저도 축제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으며 다종 다양한 테마이벤트들이 축제라는 이름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아예 돈벌이를 위해서 혹은 다른 특별한 의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축제 아닌 축제들은 경제적 효과 또는 또 다른 효과를 지선으로 섬기고 그것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연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를 전제로 벌어지는 공동체축제는 사정이 다르다.

일부 테마축제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역축제들은 공동체축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축제 역시 경제적 부면을 간과할 수 없다. 일정한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만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의 축제를 기약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효과를 최우선으로 삼아서는 지역민들의 존재론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어려우며 그토록 간구하는 경제적 효과도 거두기 어렵다. 경제적 효과에만 치중하다보면 지역민들은 자연히 타자화할 수밖에 없으며, 타자화한 지역민들이 극장의 관객처럼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축제판이 폭발적인 매력을 내뿜는 관광상품 또는 문화상품이 되는 일은 어렵기 때문이다.

말이 나온 김에 조금 더 해보자면, 경남 창녕 영산의 삼일민속문화제와 같은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지역민 대다수가 주체적으로 축제에 참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많은 축제에서 지역민들은 축제의 주체가 아니라 타자로 전락하였으며, 타자화한 지역민들은 축제의 연행들을 일상과 구별되지 않는 축제의 또 다른 볼거리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고 보니 축제의 활력은 극히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사람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이처럼 활력을 잃은 축제, 지역민들에게 외면 당하는 축제가 어떻게 국내외의 구매자들을 끌어들이는 상품으로서 가치를 지닐 수 있겠는가?

문제는 지역민의 주체화이다. 지역문화에 대한 치열한 고민 없이 그만그만한 연행들을 찍어내어 백화점 식으로 나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전통문화와 현재의 문화를 변증법적으로 종합하여 추구해야할 문화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중심적 연행들을 설정하여 지역민들 대다수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역민들이 주체적으로 축제에 참여하여 제 신명에 겨워하며 축제에 빠져들고, 저 브라질의 카니발에서 볼 수 있는 비일상의 거대한 힘을 용출시킬 때, 국내외의 구매자들은 우리가 축제판에서 신명풀이를 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즐기기 위하여 지역축제를 찾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공동체축제에서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존재론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이지 경제적 효과가 아니다. 축제의 상품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의 추구는 적어도 앞의 것들과 병행하거나 결과적인 것이어야지 축제의 존립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지역민의 주체화와 관련하여 또 하나 살펴보아야 할 것은 축제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축제를,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생산과 소비의 과

정에서 지역민들의 총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여 왔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짚어보아야 할 것은 우리 축제의 역사이다. 종교사학자 엘리아데(M. Elide)가 이야기하였듯이 역사를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전근대사회에서 중요한 세시로 존재하면서 마을과 고을을 단위로 전승되었던 전통축제는 일상의 시공간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비일상성,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차별 없이 하나되는 대동성, 경비와 조직을 그들 스스로 감당하는 자주성,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민주성, 일하는 이들이 앞장서는 민중성, 모든 이의 주체적 참여를 보장하는 개방성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던 전통축제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대부분 전승이 중단되었다. 축제를 전승하던 공동체문화의 균질성이 자본주의 경제의 틈입으로 점차 부서지면서 축제는 쇠잔해갔으며 갖가지 해괴한 법령을 동원하여 우리의 축제문화를 금압한 일제의 무자비한 우리문화 말살책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리 축제의 전승을 중단시켰다.

그러다가 대개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걸쳐 각 지역에서 이른바 향토축제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이라는 취지 아래 새롭게 만들어진 향토축제는, 많은 경우에 민속을 발굴 복원하여 재현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전통에 기대어 있지만 전통적 축제의 껍데기만을 빌려온 창출된 축제였다. 문제는 창출되었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배이데올로기 생산자들의 기획 속에서 타율적으로 만들어져 위로부터 아래로 주어진 축제라는 데 있다. 자생적인 지역민의 축제는 일제에 의해서 단절되고, 단절된 축제가 다시 새로운 지배권력과 그 에이전트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축제라는 이름으로 지역민들에게 주어지는 비민주적 전개과정을 우리의 축제는 거쳐왔다. 이와 같은 양상은 지역문화의 활성화라는 문화정책을 배경으로 123개의 축제가 만들어진 1980년대나, 문화의 세계화와 축제의 상품화라는 담론과 맞물려 200여 개의 축제가 신설된 1990년대의 경우에도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어느 경우에나 대다수 지역민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축제에 수동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그것은 축제의 조직자나 참여자에게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서 특정 집단에 의해서 축제가 만들어지고 지역민은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구도가 어느새 우리 축제문화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축제 본연의 문화적 의미를 구성하는 존재론적이고 사회적인 기능은 그 축제가 해당 지역민들의 총의를 배경으로 생성된 자생적 축제일 때 제대로 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축제는 자생적인 축제가 아니라 왜곡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주어진 축제이다. 따라서 축제 본연의 문화적 의미를 발현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축제 본연의 문화적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지역민으로부터 빼앗은 축제를 그들

의 축제로 되돌려 놓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지역축제의 이념과 구조에 대한 조정 작업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념은 당연히 축제 본연의 문화적 의미를 수행하는 쪽으로 자리잡아야 하며 구조는 전통사회의 축제가 그러하였듯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심신을 내어 맡기는 집단적 전이성(liminality)의 실천을 추구하여야 한다. 또한 축제의 생산과 소비의 전국면에 지역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야 한다.

빼앗은 축제를 지역민의 축제로 되돌려놓는 작업은 이른바 세계화시대에 지역문화를 세계화시키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 세계화는 비단 경제적, 정치적 부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부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의 세계화는, 경제와 정치를 비롯한 인간활동의 제부면이 사실상 문화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세계화의 출발점이자 귀결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문화의 세계화야말로 우리 시대의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문화의 세계화에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이 이미 세계 수준에 있는 우리 문화 또는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린 우리 문화를 세계문화시장에 내놓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문화의 세계화는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세계적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 진행은 자본주의 중심부에서 주변부를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간주변부적 성격을 지닌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와 같은 일방적 흐름을 수수방관하면서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보다 공세적인 입장에서 경쟁력 있는 우리 문화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그 흐름에 맞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전자를 수세적 세계화라고 한다면 후자는 공세적 세계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세적 세계화는 무작정 '우리 것은 좋은 것'이라는 국수주의적 자세를 견지하는 전근대적 사유를 바탕으로 해서는 불가능하다. 근대 전이기의 개화파와 반개화파의 사례는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 둘 다의 실패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보다 유연한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대응방식은, 공시적 차원과 통시적 차원에서의 변증법적 인식을 필요로 한다. 먼저 공시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외래의 문화를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문화에 대한 부정으로 보고 우리 문화 속에서 녹여내어 보다 진전된 합의 문화를 창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통시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전래의 우리 문화, 즉 전통문화와 작금의 우리문화를 변증법적으로 종합하여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처럼 통시적 차원에서 진행하는 작업은 필연적으로 공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작업과 맞물릴 수밖에 없으며 끊임없이 진행되는 맞물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문화는 세계적 보편성 속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목되는 것이 지역문화이

다. 세계화는 필연적으로 국가와 민족 단위의 약화를 전제하고 있으며 지역 단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세계화가 한편으로는 문화적 대립과 갈등을 낳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배태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수용할 때, 문화적 다원성은 그 존재의 의의가 약해지고 있는 국가가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할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기에 세계화는 곧 지역화의 다른 이름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지역문화의 중요성은 새삼 주목된다.

지역문화를 문화의 세계화의 기본 단위로 보았을 때 지역축제는 지역의 문화수준을 드높이고 지역민들의 문화향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장으로서 시민축제를 지향하여야 한다. 문옥표에 의하면, 다단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고 이질적으로 분화된 지역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상징과 표상을 제시한다는 것이 시민축제의 기본 발상이기 때문이다. 시민축제에는 모든 시민들이 기존의 기득권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까닭에 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새로운 지역문화의 창출의 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축제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축제를 기획·입안·실행·평가하는 제 단계에서 시민들의 문화역량이 민주적 합의와 리더쉽에 의해서 집중되고 실천되는 과정이, 결과로서 나타나는 축제 못지 않게 중요하다. 문화의 창출은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과정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축제의 제 과정에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지역축제의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 그 지역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문화적 역량이 포괄되고 집중된 지역축제는 새로운 지역문화의 창출과 활성화의 기폭제이자 지역문화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낼 것이다. 열린충남

지방자치정보

■ 자료제공 : 최 병 학
(충남발전연구원 자치행정팀장)

[달라진 법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중 개정령

〈1999. 10. 13, 대통령령 제16,576호〉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1999. 4. 15. 법률 제5961호)되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그 측정결과를 전산망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관제센터를 설치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부과하는 배출부과금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환경부장관이 발령하던 대기오염경보의 발령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에 따라 대기오염경보의 단계별 조치사항을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를 신고하는 때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과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가 모법에서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현행 제8조 및 제9조 삭제)

다.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하지 못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 부과시 유리한 특례를 인정하도록 함.(영 제13조 제3항·제4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4항 및 제22조

제3항)

라. 환경부장관은 굴뚝 자동측정기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굴뚝 자동측정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영 제13조의 2 신설)

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부과하는 배출부과금은 반기별로 부과하는 기본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마다 부과하는 초과부과금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기본부과금의 면제점을 상향조정하여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초과부과금 중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하는 종별부과금을 폐지하는 한편,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율을 조정하여 사업자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함.(영 제15조, 현행 별표2 삭제, 안 별표3 및 별표7)

3.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 단서, 제19조제4항 및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농지법시행령 중 개정령

<1999. 10. 11, 대통령령 제16,571호>

1. 개정이유

·농지법의 개정(1999. 3. 31, 법률 제5948호)으로 농지의 임차료의 제한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며,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영 제10조제2항·제22조제2항·제38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

나.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의 임대차 기간, 임차료, 임대차계약해지의 제한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현행 제26조 내지 제30조 삭제)

다. 종전에는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영 제43조제2항 신설)

라. 한계농지정비사업용지,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용지, 민간영유아보육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주택 및 복지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2)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중 개정령

<1999. 10. 11, 대통령령 제16,572호>

1. 개정이유

가. 앞으로 산업구조가 전문서비스산업 위주로 변화하여 전문서비스산업분야의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중 전문서비스산업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하고,

나.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1999. 2. 8. 법률 제5590호)되어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기타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되어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제도와 등록 및 갱신등록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현행 제12조의 2내지 제12조의 5, 제27조 내지 제27조의 3 및 제 39조 삭제)

나. 국가기술자격중 워드프로세서·속기·비서·직업상담사 등 사업서비스종목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의 상위등급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당해 종목의 하위등급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는 하위등급의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시자의 부담을 경감함.(영 제25조제2항)

다.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기술 자격취득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영 제29조의 2)

라. 전문서비스산업의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인력수요변화에 대응하여 직업상담사·사회조사분석사·전산회계사 등의 자격종목을 신설함.(영 별표1)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사업서비스 중 부기 및 주산종목의 폐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제·개정된 자치법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중 개정규칙

<1999. 10. 11, 규칙 제2777호>

1.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변경에 따라 자격증소

지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별 자격요건을 새로운 국가기술자격제도에 맞추고, 지방인사행정의 탄력적 운용을 위하여 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우대승진제 및 공개경쟁신규임용자의 읍면동 임용원칙제 등을 현실여건에 맞도록 개선·보완함.

2. 주요골자

가. 7급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 후보자의 임용시 읍·면·동 우선임용규정을 삭제함.(종전규정 제22조의 2)

나. 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우대 조항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을 변경함.(제27조)

다. 자격증소지자의 임용요건을 일부 조정함.(별표4, 별표5, 별표15, 별표16)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규정 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 조례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1999. 10. 11, 규칙 제2778호>

1. 개정이유

가. 홍성지소가 공주시 관내로 이전하게 됨으로써 기관명칭을 "홍성지소"에서 "공주지소"로 변경하고 위치도 "홍성군"에서 "공주시"로 변경함.

나. 관할구역도 종전 가축위생연구부가 담당하던 관할구역을 공주시 관내로 이전하는 공주지소가 담당하고, 통합지소 관할구역인 "예산군"을 인접된 가축위생연구부가 담당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토록 함.

2. 주요골자

가. 보건환경연구원 홍성지소를 공주시 관내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공주지소로 명칭을 면경하며, 그 관할구역을 공주시, 금산군, 연기군으로 함.(별표2)

나. 보건환경연구원 통합지소의 관할구역을 서산시, 태안군, 당진군으로 함.(별표2)

3.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6월 24일부터 시행하되 예산군 관할구역 변경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함.

충청남도 사무위임 전결처리규칙 개정규칙

<1999. 10. 11, 규칙 제2779호>

1. 개정이유

·지방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합하도록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과간 통합 또는 일부 기능조정으로 인한 사무처리 체계를 개정된 행정조직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권한 배분에 의한

사무의 추가·삭제 등을 일제히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전면 개정함.

2. 주요골자

가. 과장의 일반적인 결재권의 배분 원칙 중 여성정책관의 전결 범위를 공보관·감사관·총무과장과 같이 실·국장 전결 사항까지 전결할 수 있도록 규정(제3조제6항)

나. 폐지 또는 기능이 조정된 실·과의 사무를 조정하여 다시 분장된 실·과로 이관하고 신설되는 과의 업무를 새로이 명정(제4조)

다. 도지사의 결재를 요하는 사무 중 도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정보실장의 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문서결재 절차 이행 및 시행 등 심사규정을 둠.(제6조, 제9조)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사무위임전결처리규칙 개정규칙

<1999. 10. 11, 규칙 제2780호>

1. 개정이유

·기능위주의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직체계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고

·하부기관 명칭변경 등 전결권의 일부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여 전문 개정함.

2. 주요골자

가. "농업연구부"가 "기술개발국"으로, "농업기술부"가 "기술지원국"으로 조정됨에 따라 규칙내용 중 부장을 국장으로 명칭을 변경함.(제2조, 제3조제2호, 제4조제1항 및 별표)

나. 종축장을 축산시험장으로 현행 기관명칭에 맞게 개정함.(별표)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사무위임전결처리규칙 개정규칙

<1999. 10. 11, 규칙 제2781호>

1. 개정이유

·기능위주의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업무의 조정에 따른 체계에 적합하도록 하고, 일부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여 전문 개정함.

2. 주요골자

가.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거 교관 명칭이 교수로 명칭이 병경되는 등 일부 사무의 전결권을 조정함(별표)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사무위임전결 처리규칙 개정규칙

<1999. 10. 11, 규칙 제2782호>

1. 개정이유

· 기능위주의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업무의 조정에 따른 체계에 적합하도록 하고, 일부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여 전문 개정함.

2. 주요골자

가. 가축위생연구부가 대전에서 홍성으로 이전하여 원장전결권을 연구부장을 하향조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함.(별표)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사무위임전결 처리규칙 개정규칙

<1999. 10. 11, 규칙 제2783호>

1. 개정이유

· 기능위주의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업무의 조정에 따른 체계에 적합하도록 하고, 일부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여 전문 개정함.

2. 주요골자

가. 임업생산연구담당과 자연학습담당을 신설하여 임업시험과와 산림박물관에 각각 기능을 부여하여 조정함.(별표)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사무위임전결 처리규칙 개정규칙

<1999. 10. 11, 규칙 제2784호>

1. 개정이유

· 기능위주의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업무의 조정에 따른 체계에 적합하도록 하고, 일부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여 전문 개정함.

2. 주요골자

가. "공영개발과"를 "개발과"로 하고, 하천담당을 신설하여 개발과에 기능을 조정함.(별표)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충청남도 사무위임규칙 개정규칙

<1999. 10. 11, 규칙 제2785호>

1. 개정이유

·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위임사무처리 조직체계를 개정된 행정조직에 부합하도록 조

정하고

·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관계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어 이에 맞게 새로이 위임을 명정하고 폐지되는 사무는 삭제함으로써

·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전문을 개정함.

2. 주요골자

가. 행정조직개편으로 새로이 조정된 실과간 관장사무를 정비하여 명정.(별표1, 별표2)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업소관리, 관수·가공용 정부양곡관리, 제1·3종 어항시설 보수관리, 지정폐기물 증명서류 확인 등 사무에 대하여 재위임 승인 절차를 거쳐 새로이 위임(별표1, 별표2)

다. 관광사업의 명의 이용허가, 공유수면관리 관련사무, 자기발행형 상품권 관리, 배출시설의 부적정 운영처리, 자기 건축물의 오수 정화시설 관리, 여객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관리 등 일부 사무가 규제완화 및 시·군 이양사무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삭제.(별첨1, 별첨2)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법령안 입법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999. 10. 25, 행정자치부 공고 제1999-135호>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개정안에서 위임된 예산절약 성과금 지급과 지방자치단체 국제계약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 작성시기가 단축됨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의 의회제출시기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위원장(부단체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구성.

·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이내 지급,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을 수입증대액의 10% 범위안에서 지급.

·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비 등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감액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나. 세입·세출 결산서의 지방의회 제출시기를

단축함.

·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 작성순기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변경됨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시기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에서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로 함.

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계약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위원회는 위원장(행정자치부차관)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함.

· 지방자치단체 국제계약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999. 10. 26, 행정자치부 공고 제 1999-139호>

1. 개정이유

행정의 현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민관련업무 등 중앙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 지방행정기관 등에 위임하고, 중앙정부 기능중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무를 민간기관·단체로 위탁하며, 이미 위임·위탁된 사무 중 개선이 필요한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민간위탁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절차적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나. 향교재산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향교재단법인의 공익사업 및 수익사업의 운영의 인가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16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함.

다.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 신고된 수입축산물의 검사 및 국내외 검사기관의 인정 업무에 관한 농림부 장관의 권한을 구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91개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

라. 항공법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하는 등 12개 사무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함.

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 접촉 승인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중 가족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북한주민 신청접수에 관한 통일부 장관의 권한을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위탁하는 등 28개 사무를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함.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999. 10. 26, 건설교통부공고 제1999-333호>

1. 개정이유

농어촌지역에 소규모 고층아파트 등의 무질서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해 준도시지역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강화하고, 보전 필요성이 높은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시·군·구가 용적율·건폐율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준도시지역의 용도지구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운동·휴양지구 및 집단묘지지구를 폐지하고, 시설용지지구에 통합함.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준도시지역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을 수립하도록 하고, 아파트 건설을 위해 준도시지역에서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 고층아파트나 폐수 공장 등의 무질서한 입지를 억제하고, 불합리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방지함.

다. 준농림지역에서 개발계획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계획에는 학교·상하수도·도로 등을 3만제곱미터 이상의 연접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함.

라. 준농림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함.

마. 자연경관보전 및 상수원 보호 등 보전필요성의 높은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시·군·구가 용적율·건폐율·건축물의 층고제한 등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의 친환경적인 관리를 도모함.

바. 보전필요성이 높은 자연환경보전지역(상수원보호구역, 자연공원구역은 제외)에서는 음식점·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 중 지목상 대지에서는 시·군·구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함.

사.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지적법의 지목상 종교용지에서는 종교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폐교된 학교부지에 교육연구시설·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함.

아.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국토이용계획 변경권한 중 다른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이나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권한은 현행 1제곱킬로미터 미만에서 5제곱킬로미터 미만으로 위임범위를 확대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절차 및 기간을 단축함.

국토이용관리법 시행 규칙 중 개정령(안) 입법 예고

<1999. 10. 26, 건설교통부 공고 제1999-334호>

1. 개정이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준도시지역의 운동·휴양지구 및 집단묘지지구가 폐지되고 시설용지지구에 통합됨에 따라 준도시지역 용도지구 입안기준을 새로이 정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에서 확인할 사항에 하천구역 및 전원개발예정지구 등을 새로이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법에 의한 연도구역 및 소속교통구역이 폐지됨에 따라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 입안기준 중 도로법에 의한 연도구역 및 고속교통구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나. 준도시지역의 운동·휴양지구 및 집단묘지지구를 폐지하고 시설용지지구에 통합함에 따라, 운동·휴양지구 및 집단묘지지구의 입안기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시설용지지구의 입안기준을 새로이 정함.

다. 낙농진흥법에 의한 낙농지대 및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가 폐지됨에 따라,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의 입안기준 중 낙농지대 및 초지조성지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라.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에서 확인하여야 할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사항에 하천법상의 하천구역 및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또는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상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등을 새로이 포함하고, 군용항고기지법상 군용항공기지는 비행안전구역과 군용항공기지구역으로 구분하여 표기토록 함.

충청남도 폐기물 매립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읽고…

이 덕 성
도청 환경관리과 환경사무관

1. 머리말

우선 환경분야(특히 폐기물)에 심도있는 연구와 배려에 감사 드리면서 열린충남 99년 여름호 지역논단에 게재된 "충청남도 폐기물 매립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에 대한 논단을 읽고 일부 현실과 괴리된 내용이 있음이 발견되었기에 동논단에 대한 행정측면에서의 입장을 정리하고 추진논리와 현실을 피력하여 오해의 소지를 해소함으로써 도민과 실행부서에서의 일관된 추진의지가 흔들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임을 밝힌다.

현대 행정에서의 효과적 대처가 가장 어려운 분야가 바로 쓰레기 문제가 아닌가 판단된다. 쓰레기 문제는 선진국에서도 획기적 대안이 아직은 없는 상태로 전국가적인 과제인 반면 자치단체의 골치거리로 대두되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특히 우리도는 종량제 시행 4년(95년부터 전면실시)이 되었지만 종량제 기본취지인 원인자 부담원칙이 봉투가격의 동결과 사용량감소로 청소재정자립도의 11%선에 머물고 있는가 하면, 위생 매립장 등 처리시설(위생매립, 소각로) 설치가 주민의 집단 반발과 지방재정 열악으로 아직도 비위생 매립에 의존하는 시군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설 확보의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수거 운반업무 등이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관주도로 운

본 논고는 열린충남 99년 여름호(통권 16호) 지역논단에 게재된 「충청남도 폐기물 매립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심문보 ·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반박 논고입니다.

영되고 있어 고비용 저효율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재활용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쓰러지고 있는가 하면 재활용 체계도 미정립된 상태로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행정의 노력이 있다 하여도 아직은 완벽한 재활용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내실을 거두기 어려운 여건이며 어디를 가든 쓰레기 없는 곳이 없을 만큼 주민의식 또한 성숙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너무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쓰레기 문제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상론만을 제시하는 것은 아무 가치없는 주장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글은 충남발전연구원 심문보 박사께서 기고하신 우리도의 폐기물 정책에 대한 내용중 중요한 몇가지 만을 지적하여 올바른 이해를 촉구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는 뜻이라는 점을 강조하니 이해하기 바란다.

2. 광역매립장 설치와 규모의 경제성에 대하여

주장하는 광역매립장은 우리도를 몇 개의 권역으로 묶어 대단위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이 설치비 절감이나 운영면에서 경제성이 있다는 내용인바 그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안이나 그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는 인식을 도외시한 이상론이다.

위생매립장 개념이 정립된 1989년도부터 정부차원에서 전국을 33개 권역(우리도 4개 권역 : 천안권, 공주권, 대천권, 서산권)으로 설정 광역매립장을 국가시책으로 3년간 추진하였으나 설치지역을 어디로 하며 규모와 예산분담을 인구로 할 것인가 면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대안이 없었다. 또 쓰레기 원거리 이송에 대한 비용의 상계방법, 운영방법 등 현격한 의견 차이로 시·군간 합의도출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이 없었고 실질적인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당시는 관선 시장·군수 시절이었는데도 지역상호간에 이기적 분위기와 주민 성향이 다르고 시설입지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 등으로 광역시설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는데 현재 민선 제도하에서는 더욱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를 해결키 위해 환경부에서 고심 끝에 1992년도부터 시·군별 추진으로 정책이 변경되었다.

광역시설설치를 위하여 우리도는 90년도 상반기부터 아래와 같이 4개권역으로 설정하였다.

구 분	내 용
천안권	천안시, 온양시, 천원군, 아산군
공주권	공주시, 공주군, 논산군, 부여군
대천권	대천시, 보령군, 청양군
서산권	서산시, 서산군, 태안군, 당진군

이 중 우선 천안권만이라도 추진코자 기본계획을 수립, 시장군수협의회(천안시,천원군, 온양시, 아산군)와 건설 사업단을 구성, 운영하였다.

권 역	규 모	사 업 비(백 만 원)			추진기간
		계	국 비	지방비	
천 안	198,000 ㎡	6,930	3,465	3,465	'91~'93

또한 매립장 후보지 4개소까지 선정(천안 목천, 아산 탕정에 2개소, 아산 배방) 현장조사와 설계용역까지 실시하였으며 관계 공무원 실무회의와 행정협의회를 수차례 개최, 시군부담액 협정도 체결하였으나 실행에는 첨예한 지역간의 대립 등으로 진척되지 못한 사례가 있고 막상 어느 지역에 동시설 설치의 타당성 등을 주지시키려 하였으나 후보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투쟁으로 행정력만 낭비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군별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도 주민반발에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실정인데 타지역 쓰레기가 반입되는 시설설치는 아예 구상조차도 힘든 일임을 인정해야 한다.

규모의 경제성 또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주장이다. 당연히 대규모 시설로 운영될 시 설치비와 운영비는 절감될지언정 권역으로 처리될 경우 원거리 이송경비와 쓰레기 반입에 따른 민원문제 등은 고려치 않은 발상이라 하겠다.

그런 주장이라면 우리도에서도 4개 권역에 최첨단 대단위 시설을 설치하고 운송레일과

자동 상하차 시설까지 설치하면 더 좋지 않을까?

또 시설설치가 용이하다면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도 설치하여 도에서 직접 운영하면 도세입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때나 지금이나 매립장만 제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 확연한데 하지 못하는 사유를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능력과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결과라고 알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다.

3. 비위생 매립장 정비에 대하여

비위생 매립지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밀조사와 완벽한 정비사업이 요구된다는 이론에 대하여는 반박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논리이나 비위생 매립지에 대한 개념과 정비를 기획하게 된 동기, 소요예산의 확보와 집행단계, 토지주와의 관계,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 방안 등이 고찰되어야 한다고 본다.

위생매립지(Sanitary landfill)란 개념이 1986년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사용된 매립시설은 전부 비위생 매립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60년도에서 70년대부터 자연발생적이든 인위적이든 생활주변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차수시설과 침출수처리시설 등 위생매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에 단순매립 된 곳을 비위생매립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설이나 우리도에서 관리되고 있는 시설은 176

개소이다.

176개소 중에는 아주 오래되어 안정화가 거의 이루어진 지역도 있고 지금도 침출수나 악취 등이 발생되어 생활 불편이나 지하수,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 지역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위생 매립지 중에는 규모가 대단위로 지방비만으로는 도저히 정비를 할 수 없는 지역도 있고, 임시방편적 정비방안으로도 생활불편이나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도 있는 관계로 우리도에서 추진하는 정비계획은 적은 예산으로도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오염확산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음을 주지하고 싶다.

예산만 허용된다면야 완전굴착후 선별처리함이 최선인 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예산이 없어 위생매립장 공사도 지연되는 처지에 정비사업에 많은 예산투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것 또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진대 그것은 무시하고 이상형 주장만을 논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라고 본다.

매립지의 복원이나 토지이용 또한 토지 소유주가 대부분 사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며 복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레기의 장소 이동은 또다른 2차 오염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4. 정책제언에 대하여

비위생매립장을 정밀분석하고 복원을 시행, 광역매립지 설치단계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원칙적인 논리로는 합당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정밀분석하는데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닌 전문가에게 연구용역비로 많은 돈이 들여야 하고 많은 시간도 소요될 것이며 그 결과물 또한 시행가능한 방안제시가 의심스럽고 완벽한 적용에도 정책결정권자(시장, 군수)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전제로 볼 때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뒤따를 소지가 다분하다.

광역매립시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뜻은 좋으나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또 한번 환기시키는 바이다.

앞으로 우리 도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운영, 비위생 매립장을 일제 조사케 한 후 정비방법, 정비 순위 등을 결정년차사업으로 2005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나 이것은 도나 시군에서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었을시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염인종 님

충남논단(가칭) 논문투고요령

일반사항

1.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70매(A4 용지 15매) 내외
2. 원고형식
   ① 첫째 페이지에 논문제목, 저자 국한문 성명, 소속기관, 현직위, 소속기관 및 자택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원고료송금 계좌번호 등을 기재
   ② 둘째 페이지부터 논문의 내용을 Ⅰ, 1, 1), (1), 가, 가), (가)의 기호체계에 의해 기재
3. 제출서류 : ① 한글 97이나 MS 워드로 작업한 논문 1부와 디스켓 1개
   ②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전송(jclee@cdi.re.kr) ③ 본인사진(반명 혹은 명함)
4. 원고심사 : 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그 과정에서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5. 원 고 료 :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연구원 정관에 의거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됨

본 문 주

1. 본문안의 인용은 다음예시에 따르고 내역을 정리한 참고문헌은 미주로 처리
   예시) 정지웅, **열린사회의 적들**, 1995, p.30
2. 내용주(contents notes)는 일련번호를 명기하고 각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

참고문헌

저자, 논문명(또는 서명), 출판사(항),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논문은 " "안에 기입하고 서명은 고딕으로 (외국의 서명은 이탤릭) 표시

예시)
- 국내 논문 : 임양빈, "지방화시대의 충남지역 발전전략", **열린충남 제1권 제1호**, 충남발전연구원, 1995.
- 단 행 본 : 오연천, **한국지방재정론**, 서울:박영사, 1995.
- 외국 논문 : Batina, R.G., "Public Goods and Dynamic Efficienc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41, 1990
- 외국단행본 : Frenkel, J.A., and A.Razin, *Fiscal Policy and the World Economy*, Cambridge:MIT Press

도 표

1. 표번호는 〈표 1〉, 〈표 2〉의 순으로 표상단 중앙에 제목과 함께 명기하고, 그림번호는 [그림 1], [그림 2]의 순으로 그림상단 중앙에 제목과 함께 명기한다.
2. 표와 그림은 인쇄(마스터 인쇄-흑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명하게 작성한다.
3. 인용한 도표의 경우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기타사항

1. 원고는 표제, 목차, 요약, 본문, 참고문헌, 부록 등으로 구성한다.
2. [illegible]

[illegible] E-mail : jclee@cdi.re.kr

열린충남 총목차 INDEX

구 분	성 명	제 목	소 속	게재면
95 가을 창간호 제1권1호	임양빈	지방화 시대의 충남지역 발전전략	건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특집
	윤성채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보방안 모색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박종찬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강화	고려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윤용혁	백제문화권 개발과 충남 발전	공주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
	임도빈	충남 지방자치의 방향과 과제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논단
	김철규	충남의 환경개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대전산업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
	김항규	지방화 시대와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이왕기	문화전쟁시대의 지역문화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현재혁	서해안 시대와 환경보전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정책
	유상수	개발과 보전의 조화	충청남도 정책실 제2정책심의관	〃
	정동찬	충남의 문화특성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실장	〃
	최종후	여름의 끝	목원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교수	칼럼
95 겨울호 제1권2호	박영기	충남의 국제화 전략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특집
	권용대	WTO체제에 대응한 지역농업의 발전방향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
	최병익	농어촌 소득원 개발전략	공주대학교 지역사회개발과 교수	〃
	김병량	사회간접자본 확충방안	단국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
	김의준	민자유치 전략의 개선방향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권중돈	지역복지정책의 추진전략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송두범	소도읍의 개발수준 측정 및 개발방향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개발부 연구원	논단
	박경배	지치시대 공직자의 경쟁력	충청남도 기획관	칼럼
96 봄 호 제2권1호	라도승	금강의 역사문화의 중요성	금강권연구소 소장	특집
	심문보	금강권역의 개발전략	충남발전연구원 산업경제부연구원	〃
	김용철	금강의 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부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교수	〃
	강 호	금강의 개발과 용수량 확보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
	김시중	금강주변의 교통 및 관광 개발	중경산업대학 관광경영학과 교수	〃
	임봉수	금강 1,000리 수질관리 대책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
	김일태	지방자치 행정의 발전방향	서울시립대학 도시행정학과 교수	논단
	최민호	경영행정의 기초관점	충청남도 지역경제국장	칼럼

구 분	성 명	제 목	소 속	게재면
	이효선	서해안권 개발과 서북부경제의 영향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특집
	여정태	서해안권 관광개발 전략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
96	노 일	서해안 해양자원 개발전략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학과 교수	〃
여름호	김기현	서해안권 개발과 해양오염	충남대학교 해양학과 교수	〃
제2권2호	최일섭	사회복지관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 활용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논단
	이강선	충남신용보증조합 설립 타당성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부장	〃
	이명수	국책사업 중앙정부의 조정기능 회복되어야	충청남도 정책실장	칼럼
	이덕복	충남 북부권 개발의 방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강사	특집
	이춘세	충남 북부권 첨단산업 육성방안	순천향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96	이호태	충남 북부권 개발과 환경보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
가을호	최종후	통계정보시스템 이용을 활성화 하자	목원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교수	〃
제2권3호	김원홍	지방정부의 여성복지정책 추진방향	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	논단
	최병학	지방정부간 정책경쟁과 충남도의 전략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김대길	호남고속철도는 왜 천안에서 분기해야?	충청남도 정책실 제1정책심의관	칼럼
	박서호	충남백제권 개발의 전략	한남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교수	특집
	이남석	백제문화재 개발과 향후 과제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
96	정강환	백제문화제 관광상품화 전략	배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
겨울호	정하성	지방청소년 육성시책 검토와 발전방향	청소년지도연구회장·평택대 교수	논단
제2권4호	이창호	지원봉사활동과 지방자치 발전	중앙일보사 전문위원	〃
	송두범	대전충남지역 제조업 특화업종 선정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개발부연구원	〃
	여홍기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학예연구사	칼럼
	이종상	충남농업의 어제와 오늘	충남발전연구원 산업경제부장	특집
	조재환	21세기 한국농업의 발전전략과 미래모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97	최병익	개방화 시대 충남농업의 대응전략	공주대학교 축산학과 교수	〃
봄 호	정태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농협중앙회 양곡유통과장	〃
제3권1호	김재필	대전·충남지역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	순천향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논단
	이인배	서산기지 민항취항과 지역사회 파급효과	충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부 연구원	〃
	남궁영	충남농정의 전개방향	충청남도 농정유통과장	칼럼

구 분	성 명	제 목	소 속	게재면
97 여름호 제3권2호	여정태	충남관광의 변화전망과 개발전략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특집
	이인배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부 연구원	〃
	김정연	어촌 관광개발의 과제와 전략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개발부장	〃
	양광호	충남 관광정보 전달체계 확립방안	웅진전문대학 관광과 교수	〃
	한범수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산업 추진현황	한국관광연구원 연구위원	〃
	이태희	충남의 관광산업 개발전략	명지대학교 교통관광대학원 교수	〃
	심재성	충남의 화훼산업 육성전략	배재대학교 원예조경학부 교수	논단
	최병학	충청남도 인본경영행정의 논리체계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최동환	충남관광의 미래는 밝다	충청남도 관광과장	칼럼
97 가을호 제3권3호	심문보	충청남도 환경정책의 방향과 대응전략	충남발전연구원 산업경제부 연구원	특집
	조삼래	충남의 자연생태계 보전방향	공주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
	이영신	수질오염 저감대책	한서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
	최정수	지역환경정책과 환경정보시스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	〃
	조규남	서해안 발전을 위한 해양개발의 과제	홍익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논단
	박진호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모형 설정	충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부 연구원	〃
	박경배	충남환경보전 다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	충청남도 보건환경국장	칼럼
97 겨울호 제3권4호	서정석	백제문화 연구와 개발의 현주소	충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부 연구원	특집
	이강승	백제문화권 개발의 현황과 과제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
	신형식	백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
	이남석	백제유적의 연구현황과 과제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
	여정태	백제문화권 개발과 관광충남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
	엄수원	지역개발수준의 변화패턴과 지역균형개발방향	한국토지연구원 책임연구원	논단
	송두범	충남 농어촌지역사회 유형화에 관한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개발부 연구원	〃
	유상곤	충남의 문화재 사업과 그 성과	충청남도 문화체육국장	칼럼
	최민호	플라톤의 이데아와 21세기 정책방향	前 충청남도 지역경제국장	〃

구 분	성 명	제 목	소 속	게재면
98 봄 호 제4권1호	정명기	외환위기의 발생원인과 IMF 시대의 한국경제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특집
	이강선	긴축시대의 충청남도 재정운영 대책	충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부장	〃
	박종찬	새로운 경제 틀 속에서 충남도의 중소기업 지원대책	고려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권용대	IMF 시대 충남농업의 전망과 정책 과제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
	배진한	경제성장률 저하와 충청남도의 실업대책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공석기	조류를 이용한 폐수처리	중부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논단
	김종호	서산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
	박한규	IMF 시대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충청남도 지역경제국장	칼럼
98 여름호 제4권2호	김웅락	지방민주주의의 발전과 충남의 자치역량 확보 방안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특집
	최병학	21세기 충청남도 자치행정 체제 구축 방향	충남발전연구원 자치행정부장	〃
	최창희	충청남도 자치행정의 효과성 증대 방향	공주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	〃
	김학민	민선자치 2기 시대의 지방재정 전망과 과제	순천향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
	김정연	강경 되살리기를 위한 기본방향과 실천과제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개발부장	논단
	송두범	강경 되살리기 운동과 지역사회 참여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개발부 연구원	〃
	최종후	충청남도 시·군의 성장 유형 비교	고려대학교 정보통계학과 교수	〃
	이명수	새롭게 열린 백제문화권 개발	충청남도 정책기획정보실장	칼럼
98 가을호 제4권3호	최병학	충청남도 민선자치 도정 2기의 정책 방향	충남발전연구원 자치행정부장	특집
	지병문	6·4 지방선거의 의미와 평가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김병국	IMF 체제 극복과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실장	〃
	이규환	IMF 체제와 지방재정 운용 전략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이재영	불량폐기물 매립지의 사후 활용 방안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논단
	정문경	사용 종료 쓰레기 매립장 활용을 위한 지반공학적 접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
	신준희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만세보령	보령시장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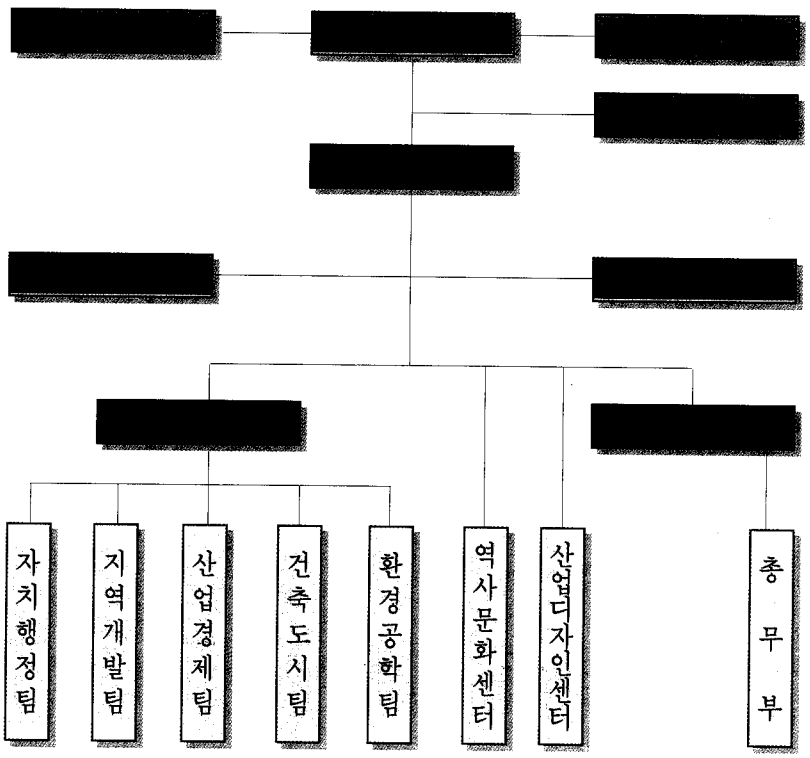
구 분	성 명	제 목	소 속	게재면
98 겨울호 제4권4호	최병학	2000년대 진입을 위한 충남도정의 행정 혁신	충청남도 자치행정부장	특집
	강병주	IMF 체제하의 지역개발 방향과 과제	한남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교수	〃
	김정호	IMF 체제하의 위기극복과 21세기를 향한 충남농정의 전개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이상욱	21세기를 향한 충남정보화 정책의 추진 전략	충청남도 정보통신 담당관	〃
	정하성	청소년 약품 남용 실태 및 예방 대책	평택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 교수	논단
	최병학·심문보	충청남도 지방 전문직 공무원 실적평가의 예시적 검토	충남발전연구원자치행정부장·연구원	〃
	박상돈	지식행정의 신빠꼼이 양성론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실장	칼럼
99 봄 호 제5권1호	임선빈	21세기를 향한 충남의 신 정신문화 창조	21세기를 향한 충남의 신 정신문화 창조	특집
	이강선	21세기 충남의 위상과 발전 전망	21세기 충남의 위상과 발전 전망	〃
	김정연	21세기를 향한 충남의 도시개발 전략	21세기를 향한 충남의 도시개발 전략	〃
	이종상	충청남도 산업연관표	충청남도 산업연관표	논단
	서정석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현황과 과제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현황과 과제	〃
	여환구	태안군 지역 자연환경의 고찰	태안군 지역 자연환경의 고찰	〃
	황용주	충남발전연구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충남발전연구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칼럼
99 여름호 제5권2호	김혜천	21세기 환경 친화적 개발의 논리와 실천전략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특집
	한무호	충남의 물류산업 현황과 21세기 발전전략	충남발전연구원 자치행정부 연구원	〃
	이인배	21세기 충남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전략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개발계획팀연구원	〃
	오석민	내포 가야산의 불교유산 조사 제언	충남발전연구원 문헌팀 연구원	논단
	심문보	충청남도 폐기물 매립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충남발전연구원 공학 및 환경팀연구원	〃
	김영순	지역 청소년의 비행 현황과 지원방안 연구	충남청소년종합상담실 상담부장	〃
	송두범	충청남도 갯벌보전 및 활용방안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개발계획팀연구원	〃
	변평섭	중앙정치의 예속에서 벗어나야	중도일보 주필·전무이사	칼럼

2000년부터 발간될 「충남논단」은
여러분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충남논단」은
충남발전에 관한 연구논문,
정책제언 등
새로운 내용 및 정보를
언제나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제5권 3호 / 통권 17호
발 행 일 : 2000.2
발 행 처 : 충남발전연구원
편 집 인 : 노규래
발 행 인 : 황용주

주소 : (우) 302-12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9번지
사학연금회관 17·18층
전화 : (042)472-1900 / 팩스 : (042)472-1912
홈페이지 : http://www.cdi.re.kr / E-메일 : jclee@cdi.re.kr
본문디자인·인쇄/ 나리문화사
표지디자인 / 충남발전연구원 산업디자인센터

충남발전연구원 기구표



● 자치행정팀

- 연구사업의 기획, 조정 업무 총괄
- 도·시군정 주요 정책 및 현안과제 연구
- 자치발전 및 지방의정 전략 연구

● 지역개발팀

- 도·시군 등 지역개발 계획의 수립과 정책연구
-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개발과 확충방안 연구
- 각종 개발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효과분석 연구

● 산업경제팀

-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연구
- 각종 투자사업의 경제성 및 파급효과 분석
- 농어촌 현안문제의 장단기 대책 강구

● 건축도시팀

- 건축설계와 건축문화재 실측조사·보존복원 연구
- 도시계획 및 지구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분석 연구
- 주거환경정비 방안 연구

● 환경공학팀

- 충남의 중장기 환경정책 개발과 경제성 분석 연구
- 하천, 호수의 수질개선과 폐기물 매립지 및 리사이클링 연구
- 환경 신소재를 이용한 무공해 처리 기술 연구

● 역사문화센터

- 역사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
- 문화재 발굴 조사 및 보존 방안 연구
- 문화제 행사의 고증과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

● 산업디자인센터

- 도·시군의 이미지 개선 작업 연구(CIP)
- 농·특산물 포장 및 제품 디자인 제작지원 사업
- 중소기업 제품의 디자인 개발과 홍보 방안 연구 (홈닥터 제도 운영)

● 총무부

- 재단운영과 기금·인사·예산·관리에 관한 업무
- 연구도서의 편집·출판·홍보에 관한 업무
- 각종 연구지원 및 연구조성 사업에 관한 업무
- 지시사항처리 및 원내외 행정·기획업무와 조정

CDI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ISSN 1226-637X